분석 25-01

Fiscal Information Service

대국민 재정교육 발전 방안

박 원 익

2025. 7.

FIS 한국재정정보원

대국민 재정교육 발전 방안

한국재정정보원 고객지원실 교육관리부
작　　성 박원익 부연구위원
연구보조 서영훈 연구원
자료지원 서영훈 연구원

이 보고서는 재정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재정교육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작성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02-6908-8244　　✉ paxwonik87@fis.kr

핵심 요약

1 서론

□ (연구의 배경)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배경)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중장기적 재정개혁의 필요성 제기
  -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 거치며 국내 정부지출 및 정부부채 규모 증가
  -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과 미래세대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재정이해력 필요성) 재정개혁 추진을 위한 재정이해력 및 재정교육 중요성 주목
  - 재정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하는 '재정개혁' 추진 위해서는 이를 지지하는 합리적 여론 형성이 뒷받침돼야 함
  - 재정이해력 증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환기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재정이해력 향상을 위한 재정교육 현황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 (목적) '재정이해력 향상' 및 '재정 참여역량' 증진 관점에서 '재정교육의 의의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시론적 논의 제시
  - 재정교육의 국내외 현황을 진단하고 잠재적 기대효과를 탐색
  - 위 논의에 기반하여 향후 재정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
- (범위) 협의의 조세교육 및 납세자 교육을 넘어선 '재정이해력 증진 수단'으로서 재정교육의 의의 및 발전 방안 논의
  - 정부의 수입, 지출, 국유재산 및 부채관리 등 재정 활동 전반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장단기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증진 필요
  - 협의의 조세교육을 넘어서 국가재정의 경제적 역할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교육활동으로서 재정교육에 초점

2 재정교육의 국내외 현황

□ (국내 재정교육) 재정교육은 경제원론 이론 소개 및 납세자 교육 차원에서 이뤄짐

- (공교육) '22년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 '사회' 과목 외에 '경제'(진로선택) '금융과 경제생활'(융합선택) 일부 단원에 조세·재정 및 정부의 경제적 역할 언급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경제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늘었으나 조세·재정 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크게 변하지 않음
  - 재정정책의 현실 쟁점에 대한 고민 유도보다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경제원론적 이론 소개 위주로 교과서 서술
- (대학교육) 주로 경상계열에서 재정학·공공경제학·재정정책론 강의 개설됐으며 회계사·세무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재정학 강의 수요 존재

〈표 1〉 공공기관 대국민 재정교육 현황 (2024년 10월 기준)

교육명	주관	주요 교육내용	대상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학교	각 지방자치단체	• 참여예산제도 및 지방재정 예산제도 소개 • 지자체 예산현황 및 주요 정책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참여예산 제안서 작성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주민 및 청소년
납세자 세법교실	국세공무원 교육원	• 법인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실무 • 세무조사의 이해 및 실무	일반 국민
어린이 국세청	국세청	• 세금교육 동영상 • 세금 학습만화 및 게임 • 초중고등학교 대상 방문 세금교육	어린이 대상
함께하는 세심교실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 세금교실 체험교육 •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주요 세금교육	초등학생 대상 (추후 확대 예정)
대국민 재정교육	한국재정정보원	• 재정시스템 오리엔테이션 교육	e나라도움, dBrain+ 교육생
		• 국고보조금 제도의 이해	지자체 공무원 등
		• "국가재정의 이해" 특강	고3·대학생·대학원생
		• "우리마을 만들기" 보드게임 및 "어린이 청소년 재정배움" 교재	초·중등학생

- (공공기관)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실무교육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대국민 재정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외에는 납세자 교육이 상당수
  - (실무교육) 정부부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재정교육 프로그램은 재정업무 및 회계실무 과정 위주로 편성됐으며, 온라인 교육포털 사이트를 적극 활용
  - (대국민 재정교육)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참여 역량을 늘리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외에는 납세실무 교육 및 조세교육이 주류임

〈표 2〉 공공기관 재정 실무교육 현황 (2024년 10월 기준)

주관/교육명	대상 및 과정		교육 기간	교육 방법	과정·과목
기획재정부/e재정배움	재정교육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3월~11월	사이버 및 집합교육	76개 과목 (사이버 24개, 집합 52개)
	결산교육	일선관서 대상	10월~12월	집체교육 (전국 주요시도별 12개 권역)	5개 과목 (수입·채권·지출·국유재산·재무결산)
		중앙관서 대상	11~12월	집체 및 전산 실습교육	7개 과목 (회계·기금·총사업비 등 결산교육)
	[근거] 국가재정법 제101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교육	중앙부처, 지자체, 정부산하기관의 실무자 또는 희망자		연중 희망일자	맞춤형 교육	국가회계이론 및 실무 재정결산 실무 등
	[근거] 국가회계법 제27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5급 승진 관리자 과정		2월~12월	집합교육	글로벌/인문/직무/기타 분야 (국가재정 운영)
	7급/9급/경채 신규자 과정		직급별로 약 2개월	온라인 및 집합교육	직무·전문성 분야 (국가재정·예산, dBrain+, e나라도움)
	나라배움터 정규과정		연중 상시	온라인 교육	직무공통 과정 (회계제도의 이해 등)
	[근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3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승진리더과정		1월~12월	집합교육	직무필수 (지방재정)
	중앙·지방4급 이하 공무원		4월	집합교육	직무공통 (행정에 필요한 예산·회계)
	임용 3년 이내 지방세무직렬 실무자		7월	집합교육	직무전문 (지방세무실무 역량강화)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실무자		2월	집합교육	전문교육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실무)
	지방의회 의원		8월	집합교육	지방의원 기본과정
			2~3월 7~8월	집합교육	지방의원 예산심사 심화과정
			4~5월 9~10월	집합교육	지방의원 추경·결산심사 심화과정
	지자체 공무원 등		연중 상시	사이버교육	지방재정 및 회계 실무
지방재정공제회	회계·계약·예결산 관계 지자체 공무원		1월~11월	집합교육	회계, 결산 등 4기 과정
			2~11월	온라인 교육	예산지출, 재무회계, 지방계약 등 6개 과정

□ **(해외 재정교육) 국민교육의 관점에서 재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외 대학생, 일반인, 교사,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음**

- (청소년 교육)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재정교육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납세의식 활성화를 위한 조세·재정교육 강화
-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EE)는 학년 단계별 경제·금융교육에서 성취해야 할 교육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주요 단원에서 조세·재정의 공적 기능 강조
- (영국) 중등학교 교과과정 '시민권(Citizenship)' 과목의 경제학 영역에서 조세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했음
- (독일) 조세·재정 관련 일반적인 내용은 사회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무부에서 주도적으로 중등학교 학생 및 교사 대상으로 조세·재정 교재 제작 및 배포
- (일본) 사회보장 안정화를 위한 조세·재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국민의 납세의무와 재정의 역할을 사례별 토론학습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권장
- (개발도상국) 부족한 세원 확보 및 납세 관련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청소년 교과과정 상에서 조세·재정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표 3〉 미국 CEE의 경제학 교육 가이드라인 – 16장 "정부의 역할 및 시장실패"

학년	학습목표	학습응용 방안
Grade 4	1. 정부는 시장 경제에서 특정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학교, 경찰 보호, 도로, 공원 등)의 목록을 브레인스토밍하고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가 어떻게 지불되는지 설명합니다.
	2. 정부가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세금이나 차입을 통해 비용을 지불한다.	2. 다음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공립학교를 짓고자 합니다. 보통 누가 이 학교에 비용을 지불하며 어떻게 돈을 마련하나요?
Grade 8	1. 공공재와 서비스는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사용료를 지불한 사람으로만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1. 세금이 국방을 위해 사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민간 부문에서 국방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2. 재화나 서비스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원천 징수할 수 없다면, 생산자는 이를 판매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생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한다.	2.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국가, 주, 지방정부에 과세 권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까요?

학년	학습목표	학습응용 방안
	3. 대부분의 연방정부 세수는 개인 소득세와 급여세에서 나온다. 사회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급, 국방 및 국토 안보 비용, 메디케어와 같은 의료 지출,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연방 정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3. 미국 연방 예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방 세입의 주요 범주와 연방 지출의 주요 범주를 나타내는 두 개의 원형 차트를 작성합니다.
	4. 대부분의 주 및 지방정부 수입은 판매세, 연방 정부 보조금, 개인 소득세, 재산세에서 나온다. 주 및 지방정부 수입의 대부분은 교육, 공공복지(병원 및 보건 포함), 도로 건설 및 수리, 공공 안전에 사용된다.	4.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 및 지방 세입원과 다양한 범주의 주 및 지방 지출을 미국 연방 정부의 세입원과 비교합니다.

〈표 4〉 재정과 세금(FINANZEN & STEUERN) 학생용 교재 목차

주요 목차	주요 내용
제1장: 세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 세금과 정치 / 세금 제도 • 조세 정의
제2장: 정부 수입과 재정 계획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연방 예산 • 연방 및 주 재정
제3장: 정부는 세금으로 무엇을 할까요?	• 사회 정책 / 가족 정책 • 미래와 연금 / 환경 정책
제4장: 국경을 넘어 – 국제 재정 정책과 유럽 통화 연합 그리고 세계화	• 국제 협력 • 유럽 재정 정책 • 현재의 과제

자료: jugend-und-bildung 홈페이지 검색(2024.11.4.)

〈표 5〉 일본문부과학성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 공민편 中

구 분	내 용
「고령 사회에 있어서 재정의 존재 방식」을 주제로 질문을 설정한 학습	일본의 재정 적자의 현상과 미래 예측을 전하고 있는 신문 기사와 저출산 고령화 진행과 그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사용자 감소가 진행되는 민간 버스 회사의 A 시내를 달리는 빨간색 적자노선의 존폐에 대해 전하고 있는 A시의 홍보지를 읽고, 문제를 파악하며, 「**재정 적자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고령자나 통학하는 고교생이 이용하는 민간의 적자 버스 노선을 존속시키기기 위해 공적 자금을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설정한다. 각 학생은 경제 활동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 재정 및 조세의 의의, 재정의 현상 등 중학교까지 습득한 지식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 질문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나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망을 제시한다.

- (교과과정 외 교육) 직접교육(teaching) 형태 외에 대국민 캠페인 등 인식 제고(awareness raising) 활동, 실무 지원(practical assistance)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다양한 계층 교육) 청소년 외에도 대학생, 일반인, 교사,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재정교육을 실시
  - (대학교육) Allen(2013)은 정부부채 문제 등 구체적인 재정현안에 대한 비판적 이해력 및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토론식 수업 및 사례 기반 접근법 제안
  - (멀티미디어 교육) 유럽 각국 재정당국은 전통적 대면 교육 외에도 만화, 게임, 영화, 동영상,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수단을 선호(IOTA, 2008)
  - (게임 활용 교육) 노르웨이 국세청이 개발 지원한 "Spleiselaget: Byen" 도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및 허치슨센터가 개발한 "The Fiscal Ship" 인터넷 게임

〈표 6〉 주요국의 조세·재정 교육 유형 및 현황

단위: 개수

구 분	직접교육			인식 제고 캠페인			실무지원	
	청소년	사업체	일반인	캠페인	관계형성	맞춤형 소통	서비스 툴	직접지원
OECD 국가(28)	18	3	3	9	5	4	5	6
非OECD 국가(31)	25	11	4	17	14	4	9	10
합계(59)	43	14	7	26	19	8	1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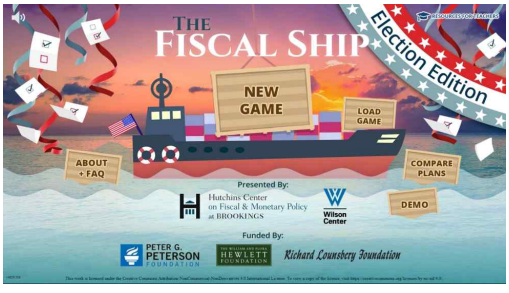
주: 59개 OECD 및 비OECD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국가별로 중복되는 유형에 해당되는 교육사례 존재할 수 있음.
자료: OECD(2021), 2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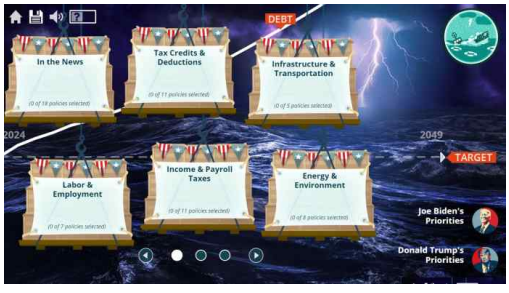
〈표 7〉 재정현안에 대한 대학 교육 접근법 예시

재정현안 자료 독서 후 토론/에세이 주제	사례 기반 접근법의 주제
• 전년도의 재정적자/부채 규모는 얼마인가? • 정부지출 및 정부부채 증가세의 가장 큰 동인은 무엇인가? •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얼마이며, 왜 이러한 수치가 중요한가? 앞으로의 전망은? •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부채의 차이는 무엇인가? • 미국 정부의 재정적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변화는 무엇이 있는가? • 지출감축과 증세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 어떤 예산편성 과정의 변화가 미래 지출통제에 도움이 되겠는가?	• 과거 그리스 재정위기 등 실제 국가들이 겪은 위기를 극복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과거 재정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중은 지출감축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 과거 재정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지출감축이 GDP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과거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 등의 국가와 미국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가?

자료: Allen(2013).

[그림 1] 브루킹스 연구소 허치슨센터의 “Fiscal Ship” 게임





자료: 브루킹스 연구소 허치슨센터 홈페이지 (2024.11.7. 검색)

[그림 2] 노르웨이 Spleiselaget: Byen (도시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화면

자료: 구글플레이 (2024.11.7. 검색).

〈표 8〉 각 재정당국이 응답한 ‘가장 효과적인(most successful)’ 조세·재정교육 매체

주요 매체	응답 국가
재정 관련 영화	벨기에
교사 가이드 및 워크북	덴마크
인터넷 자료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영국
DVD, CD, PPT 슬라이드 및 웹사이트	이탈리아, 영국
Adds-on 및 PPT 프레젠테이션	노르웨이
만화 및 게임	포르투갈
대면접촉 교육	루마니아
게임 및 역할극	폴란드
단행본 및 팜플렛	우크라이나

자료: IOTA(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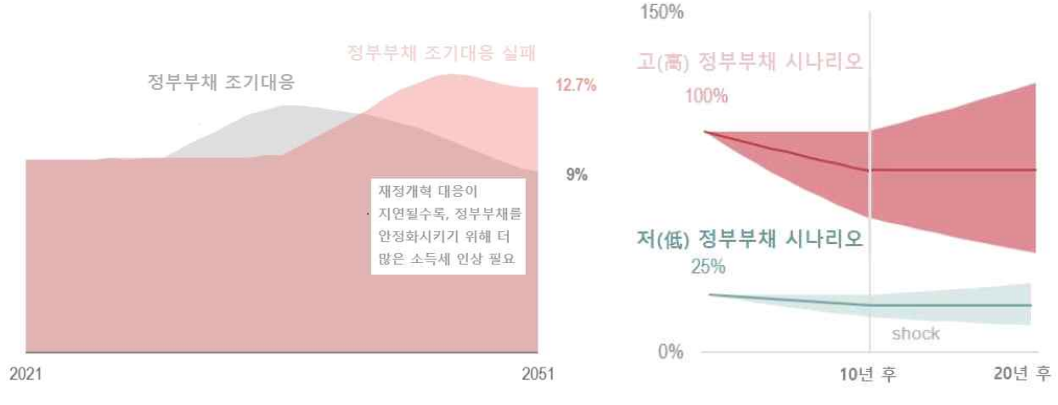
3 재정이해력 및 재정교육의 필요성

□ (재정이해력) 납세의식, 재정 참여도, 재정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개혁 뒷받침

- (배경)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전후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개혁 공감대가 형성되자 이러한 개혁을 뒷받침할 일반국민의 재정이해력에 주목
- (재정이해력 정의) 여러 세대에 걸친 장기적 공공복지를 극대화하도록 조세·재정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핵심능력) '재정규율에 대한 이해', '재정의 지속가능에 대한 이해', '미래 주요 재정적 도전(fiscal challenge)에 대한 대응' 등 세 가지 핵심능력(core competency) 영역으로 구분(Casey, 2024)
  - (지속가능성) 재정이해력을 갖춘 재정당국자·일반국민은 여러 세대에 걸친 재정적 부담과 경제적 번영 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음(Casey, 2024)
  - (재정정보 활용) 재정이해력을 갖춘 국민은 재정정보를 통해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투표 및 공공이슈 참여에 있어서 재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춤(Karatzimas, 2024)
  - 협의의 조세이해력(tax literacy)과 보완적인 관계이자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과는 구분되며, 세금지식과 함께 공공재정 시스템에 대한 넓은 시야 요구

[그림 3] 재정개혁 시기에 따른 비용(왼쪽) 및 부채 규모별 재정 리스크(오른쪽)

(단위: GDP 대비 부채(%))



- (재정개혁) 재정이해력을 갖춘 국민은 단기적인 시야를 넘어 재정부담의 장기적 비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재정개혁을 위한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형성

- 재정이해력을 갖추지 않은 정책당국자와 국민은 재정과 관련된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와 재정적 리스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위험 있음

〈표 9〉 분야별 재정이해력(fiscal literacy) 구성요소 (Karatzimas,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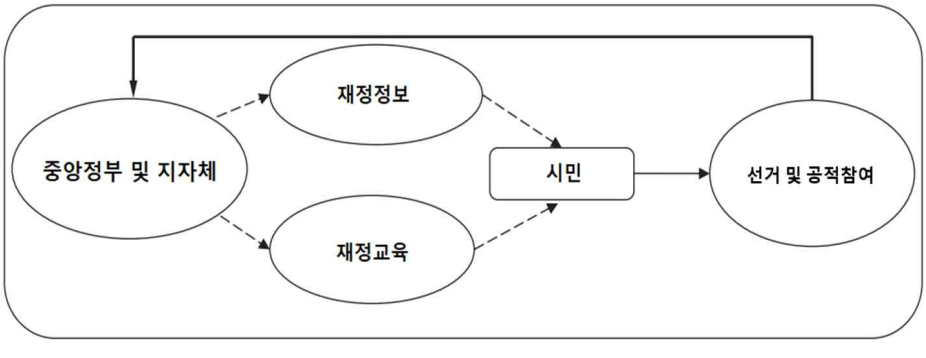
주요 공공재정 개념 인지도	정부재정 여건/성과 평가 및 참여역량	수준별 재정교육 학습목표 달성여부
• 세입 / 세출 / 정부부채 • 예산 / 집행 • 재정적자/흑자 • 정부의 재정적 건전성 • 정부재정 성과평가 • 정부결산 감사(audit) • 재정의 책임성(accountability) • 예산 집행 모니터링 • 재정의 지속가능성 • 주요 재정 비율(ratio) • 성과기반 예산제도 • 참여예산제도	• 지방정부 재정여건 평가능력 • 중앙정부 재정여건 평가능력 • 지방정부 재정성과 평가능력 • 중앙정부 재정성과 평가능력 • 투표시 재정정보 활용 여부 • 재정정보 기반 합리적 투표결정 능력 • 재정정보 기반 공공이슈 참여 능력	〈고등학교 예시〉 • 예산편성 및 집행의 기능과 역할 • 적자와 흑자 그리고 부채개념 •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여건이 주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 •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성과가 주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 • 공공부문의 재정성과 개념 (수입/지출, 흑자/적자) • 공공부문의 재정여건 개념 (자산, 부채, 자본)

〈표 10〉 재정이해력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방법론	주요내용
Casey(2024)	OECD 국가별 사례조사	•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무원과 시민의 재정이해력 제고 필요 • OECD 각국은 재정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 중
Cechovsky(2018)	문제중심(problem-centered) 인터뷰 및 문헌연구	• 재정이해력은 협의의 조세에 대한 지식을 넘어 재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를 포함 • 17-18세 오스트리아 고등학생을 조사한 결과 재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을 나타냄
Dubauskas(2016)	문헌연구	• 공공재정 교육은 공공재정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Jordan et al.(2016)	초점 집단 토의(Focus Group Discussion)	• 공공재정 의사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는 정확하고 의미 있는 재정 데이터를 통한 시민 교육으로 달성될 수 있음
Karatzimas(2020)	문헌 및 이론연구	• 재정현안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주적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Karatzimas(2023)	문헌 및 이론연구	• 재정 이해력은 스마트 시티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
Karatzimas(2024)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	• 설문 응답자들은 공공재정 교육이 지방 및 주 정부의 재정 상태와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보다 합리적인 선거 결정을 내리며, 공공 문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Molnár et al.(2019)	설문조사 연구	• 공공 재정 이해력에 대한 대중의 자기보고(self-report)는 재정퀴즈 문제에 대한 정답률을 통해 입증됨

- (재정이해력 향상 기대효과) 납세의식의 향상, 가계재무 건전성의 개선, 재정의 투명성 강화, 재정에 대한 참여의식 강화 등
  - (납세의식) 다수 연구는 납세의지(tax morale)가 실제 납세순응(tax compliance)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Richardson, 2006; 오종현, 2024).
  - (가계재무) 재정이해력을 갖춘 개인·가계는 재정정책에 담긴 경기상황에 정보와 재정정책의 파급효과를 해석할 수 있으며, 합법적 절세 가능
  - (재정 투명성) 재정이해력 향상을 통해 공공부문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정부 재정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향상(ICAEW-PwC, 2014)
  - (재정참여) 교육받은 시민일수록 재정의 지속가능성 개선에 필요한 변화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Allen, 2013) 재정현안 참여에 적극적(Karatzimas, 2020)

[그림 4] 재정정보 이해력 및 재정교육의 참여 강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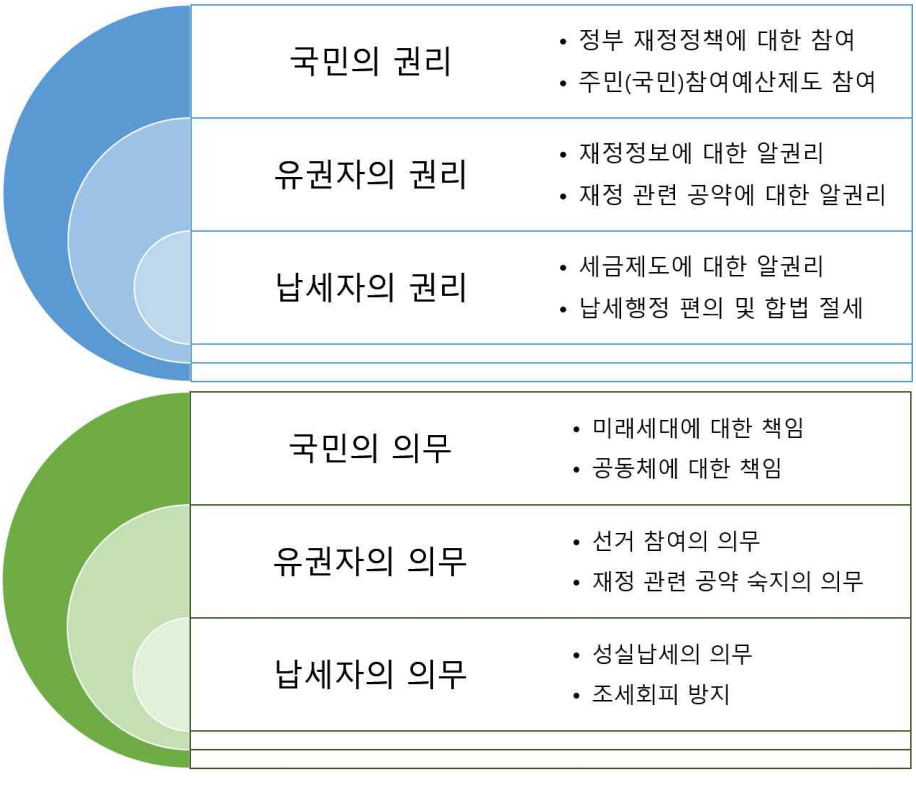
자료: Karatzimas(2020: p.236) 저자가 재작성.

[그림 5] 재정이해력 향상의 기대효과 개요

□ (교육적 접근) 재정 이슈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능동적 태도 육성 필요

- (배경) 금융위기, 재정위기, 보건위기, 기후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거치며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경제시민 양성'으로 경제교육의 초점이 이동
- (국가공동체적 접근) 재정교육은 국가공동체의 시각에서 '납세자', '유권자', '국민'으로서의 공공재정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교육
  - 조세교육은 납세자의 의무(obligation)와 권리(rights)를 동시 교육해야(OECD, 2021)
  - 재정교육을 통해 유권자로서 필요한 재정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선거 시 후보의 재정 관련 공약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숙고하여 투표할 책임을 교육
  - 현재세대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민공동체의 윤리적 요청이 재정교육의 밑바탕에 존재함
- (재정교육 목표) 발전된 재정교육은 '자발적 납세자'를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현안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능동적 태도를 육성하는 데 방점

[그림 6] 재정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권리와 의무의 체계



4 전국민 재정이해력 실태조사

□ (배경 및 설문설계)

- (추진배경) ①국민의 재정이해력(fiscal literacy) 측정 ②재정교육의 실태조사 및 수요발굴 ③재정교육의 효과성 측정 등
  - (선례) 2021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정보이해력조사 실시
  - (설문설계) 재정이해력 주요 설문문항의 응답 패턴을 계층별로 구분하기 위해 청소년·대학생·일반성인 등 학령 계층별로 나누어서 표본을 수집

〈표 11〉 재정이해력조사 설문조사 개요

조사 대상	• (청소년) 전국 고등학교 청소년 대상 • (대학생) 전국 만 19세 이상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생 대상 • (일반성인) 전국 만 19세 이상 비대학생 성인
조사 기간	• 2024년 05월 17일 ~ 2024년 05월 28일
조사 규모	• (청소년) 총 261 샘플 • (대학생) 총 255 샘플 • (일반성인) 총 322 샘플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관	•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

〈표 12〉 일반성인·대학생 재정이해력 설문문항 개요

구 분		조사 내용
응답자 특성		•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 최종학력별 / 직업별 • 월평균 소득수준 / 이념성향
조사항목	재정교육 경험 및 수요	• 재정교육 경험 (대학교육, 공공(연구)기관 특강) • 국가재정 제도 및 용어 인지도 • 국가재정 분야별 궁금증 정도 • 재정교육 및 특강에 대한 수요도
	재정지식	• 예산 절차 관련 재정 지식(틀린 설명 찾기) • 2024년 중앙정부 예산 규모 • “3대 국세 수입”이 아닌 것 •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 •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 • 국가재정의 경제적 기능이 아닌 것
	재정 관심도	• 평소 재정정보를 접하는 횟수 • (칼럼·인포그래픽·보고서 등) 재정분석 자료에 대한 관심도
	재정 참여의지	• 재정에 대한 참여제도(국민예산참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이용 의향

□ (주요 설문결과) 재정교육 경험 저조하지만 재정에 대한 궁금증과 교육수요는 높은 편

- (재정교육 경험 및 수요) 재정교육 경험률은 낮지만 재정에 대한 궁금증 및 재정교육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음
  - (재정교육 경험) 대학생·성인의 대학·공공기관 재정교육 경험률은 10~20%대, 고등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외의 재정교육 콘텐츠 경험률은 25%를 하회
  - (재정용어 인지도) '21년 조사에 비해 올해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
  - (분야별 궁금증) '21년 조사에 비해 국가예산의 규모, 수입 및 지출규모, 재정건전성에 대한 궁금증이 대폭 상승했으며 이는 다양한 재정현안이 제기된 결과

〈표 13〉 일반성인 및 대학생 재정교육 경험률

재정교육 유형	일반인		대학생		일반인·대학생	
	경험 有	경험 無	경험 有	경험 無	경험 有	경험 無
1) 대학교 제공 재정교육	21.1%	78.9%	28.6%	71.4%	24.4%	75.6%
2) 공공기관 제공 재정교육	20.8%	79.2%	12.2%	87.8%	17.0%	83.0%

〈표 14〉 청소년 재정교육 경험률

재정교육 유형	경험 有	경험 無
1)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경제(일반선택)' 또는 '실용경제(교양)' 과목 수강	30.3%	69.7%
2)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경제배움e, KDI 경제정보센터 e러닝 등)에서 제공하는 예산의 이해, 국가재정의 이해 등 재정교육 수강	13.0%	87.0%
3) 오프라인에서 재정교육(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청소년 재정특강 등) 수강	18.4%	81.6%
4) 교과과정 외 재정교육 경험 여부(2+3)	24.1%	75.9%

〈표 15〉 일반성인 및 대학생 재정용어 인지도

구분	일반인	대학생	일반인·대학생 평균	'21년 조사 비교
1) 국가재정 예결산 제도	50.8점	39.7점	45.9점	-
2) 국가재정운용계획	45.9점	38.5점	42.6점	37.5점
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48.2점	34.3점	42.1점	36.7점
4) 국민참여예산제도	45.1점	37.9점	41.9점	-

〈표 16〉 청소년 재정용어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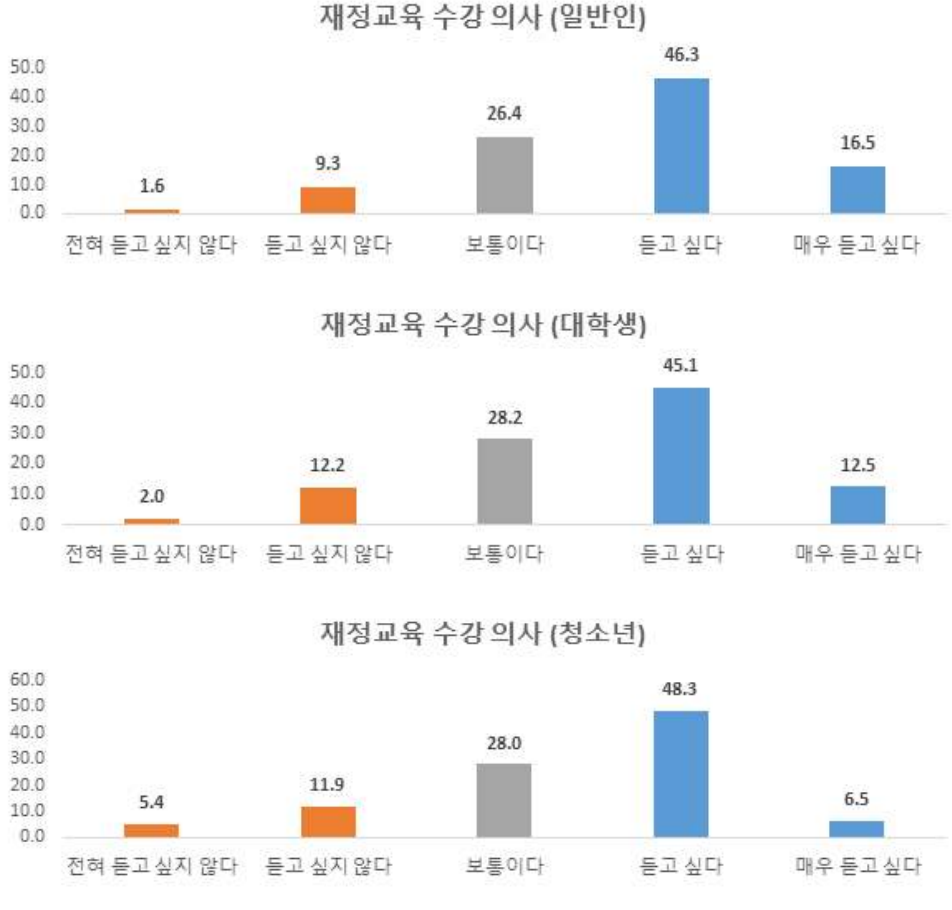
구분	인지도
1) 시장실패의 원인 및 유형	51.0점
2) 정부의 경제적 역할	58.9점
3) 정부실패의 원인 및 유형	50.8점
4) 재정정책의 수단	41.5점

〈표 17〉 재정 분야별 궁금증

구분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	'21년 비교
1) 예결산 과정 및 주요 국가재정 제도	65.6점	58.1점	55.7점	-
2) 국가예산의 규모	71.9점	70.4점	69.1점	53.0점
3) 수입규모 및 분야 (국가재정의 주요 재원 등)	67.1점	68.4점	63.1점	56.9점
4) 지출규모 및 분야 (사회복지비, 교육비, 국방비, SOC 등)	75.6점	72.9점	72.0점	57.9점
5)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76.7점	67.3점	58.4점	58.2점
6) 국가재정의 경제적 역할	69.0점	66.4점	64.1점	-

- (재정교육 수요) 공공기관의 재정교육 수강 의사 긍정 비율은 55~63%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긍정 응답 비율이 11~17%대의 부정응답 비율을 크게 앞질렀으며 이를 통해 재정교육에 대한 잠재적 수요 확인할 수 있음

[그림 7] 학령·연령 계층별 재정교육 수강의사



- (재정분야 지식) 6개 주요 재정분야에 대한 4지선다형 객관식 퀴즈를 제시한 결과 대학생·일반성인 전체의 평균 정답률은 46%, 청소년의 정답률은 32%
  - '국가채무 규모' 및 '재정의 경제적 기능 중 틀린 설명 찾기' 분야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건전성 및 재정정책 목적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필요성 시사

〈표 18〉 재정 분야별 퀴즈 정답률 (일반인·대학생)

구분	일반인 정답률	대학생 정답률	일반인·대학생 평균 정답률
1) 국가재정의 예결산 과정 중 틀린 설명* 찾기 (*정부 동의가 없이도 국회가 정부예산안 항목 증감 가능)	68.9%	77.6%	72.8%
2) 2024년 중앙정부 예산 규모 (500조원 이상 800조원 미만)	46.0%	44.3%	45.2%
3) "3대 국세수입"이 아닌 것 (관세)	59.0%	40.8%	51.0%
4)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정책분야 (보건·복지·노동)	42.2%	38.4%	40.6%
5)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 (800조원 이상 1,200조원 미만)	37.3%	34.9%	36.2%
6) 국가재정의 경제적 기능이 아닌 것 (경제성장률의 촉진 기능)	23.0%	38.4%	29.8%
평균 정답률	46.1%	45.8%	45.9%

〈표 19〉 재정 분야별 퀴즈 정답률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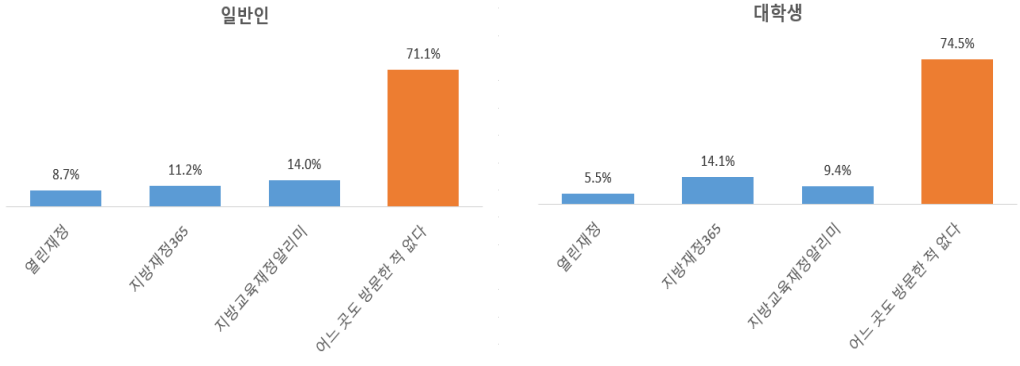
구분	정답률
1) 국가재정의 예결산 과정 중 틀린 설명* 찾기 (*기한 내 국회 예산처리 못하면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도 예산지출 가능)	37.2%
2) 2024년 중앙정부 예산 규모 (500조원 이상 800조원 미만)	33.7%
3) "3대 국세수입"이 아닌 것 (관세)	26.1%
4)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정책분야 (보건·복지·노동)	33.7%
5)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 (800조원 이상 1,200조원 미만)	28.7%
6) 국가재정의 경제적 기능이 아닌 것 (경제성장률의 촉진 기능)	32.2%
평균 정답률	31.9%

- (재정 관심도) 재정정보 공개사이트 방문 경험 및 재정정보 접하는 횟수 저조하며 청소년·대학생의 재정분석 자료에 대한 관심도는 일반성인에 비해 낮음
  - (재정공개 사이트) 대학생·일반성인 70% 이상 재정정보[1] 홈페이지 방문 경험 없음
  - (나라살림 뉴스) 청소년의 73.6%, 일반성인·대학생의 81.3%가 분기별 1회 이하 나라살림 뉴스를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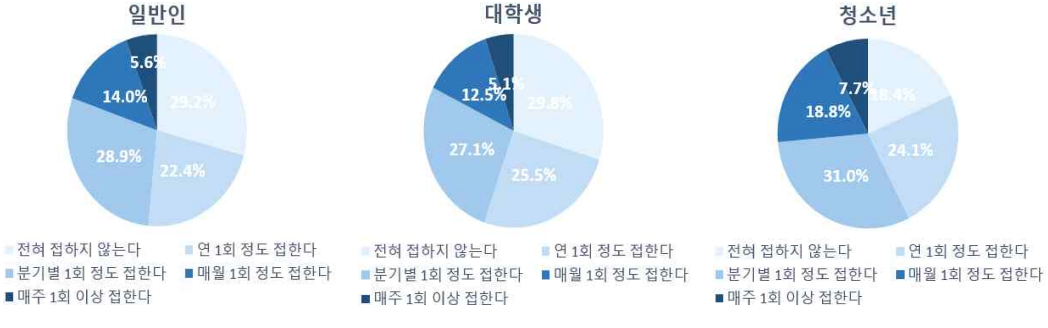
1) 예산, 기금, 결산, 재정수지, 국가부채 등 나라살림과 관련된 정보.

- (재정분석 자료)[2] '관심있다' 응답률은 일반성인 36.0% 〉 대학생 24.3% 〉 청소년 23.4%로, 일반성인의 재정분석 자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시사점)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아 개선책이 요구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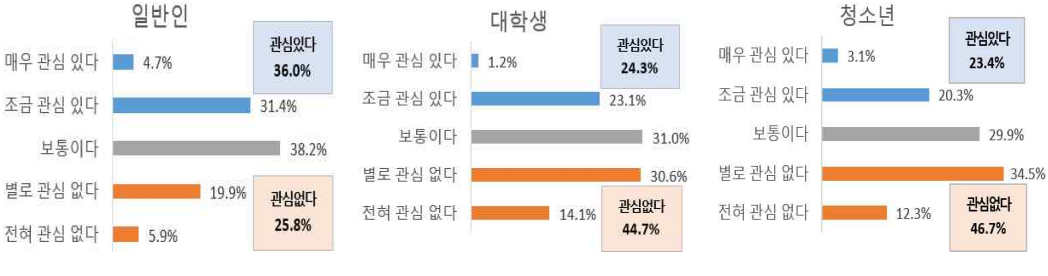
[그림 8] 재정정보 공개사이트 방문 경험



[그림 9] 재정정보를 접하는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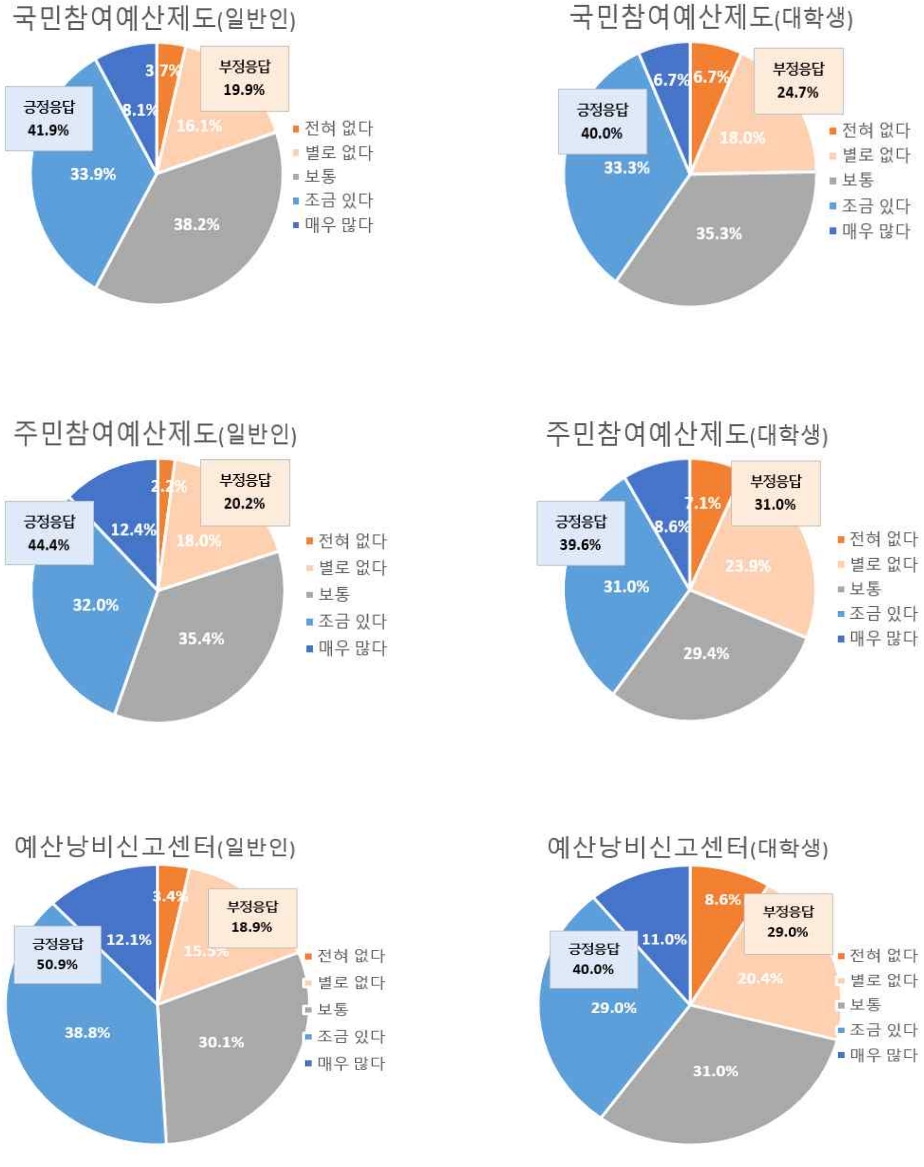
[그림 10] 재정분석 자료에 대한 관심도



2) 기존 재정정보·데이터를 시각화·심층분석한 공공(연구)기관의 보고서·칼럼·카드뉴스.

- (재정 참여의지) 참여예산제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학교 등 제도참여 의향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1.6~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우리나라 국민 다수가 기회가 주어질 경우 공공재정 이슈 참여할 의지 피력

[그림 11] 주요 재정 참여제도에 대한 참가 의지 (일반인 및 대학생)



□ (재정교육 기대효과) 재정교육은 재정에 대한 지식, 관심도, 참여 의지를 향상시킴

- (분석모형)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재정교육 경험이 재정 지식, 재정정보를 접하는 빈도, 재정분석 자료에 대한 관심도, 재정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결과) 대학 및 공공기관 재정교육은 재정에 대한 관심도, 참여예산제도 참가의지를 증대시키며, 대학 재정교육은 재정에 대한 지식수준을 증대시킴
  - 대학 재정교육은 재정지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대학 및 공공기관 교육 모두 재정정보를 접하는 빈도, 재정분석 자료에 대한 관심도, 참여예산제도 참가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공공기관 재정교육의 영향력이 대학 교육보다 더 큼
  - 대학 및 공공기관 재정교육이 재정에 대한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참여할 준비가 된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음

〈표 20〉 재정교육이 재정지식 및 재정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OR 계수)

모형			재정지식 수준		재정 관심도			
					재정정보 접하는 빈도		재정분석 자료 관심도	
			(1)	(2)	(3)	(4)	(5)	(6)
설명변수	재정교육	대학 재정교육	**1.7178*** (0.3075)**	-	**1.6126** (0.3051)**	-	**1.6805*** (0.3166)**	-
		공공기관 재정교육	-	1.2119 (0.2511)	-	**1.8532*** (0.3895)**	-	**2.7870*** (0.6021)**
통제변수			수도권 여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등					
관측치			577	577	577	577	577	577
LR chi^2(df)			23.77* (17)	15.46 (16)	30.53** (16)	32.74*** (16)	56.38*** (16)	71.98*** (16)
Pseudo R^2			0.0135	0.0088	0.0263	0.0282	0.0445	0.0568

〈표 21〉 재정교육이 재정제도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OR 계수)

모형			재정제도 참여의지					
			국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	
			(7)	(8)	(9)	(10)	(11)	(12)
설명변수	재정교육	대학 재정교육	**1.5458** (0.2906)**	-	**1.6608*** (0.3185)**	-	**1.5791** (0.3018)**	
		공공기관 재정교육	-	**1.7468** (0.3829)**	-	**1.7444** (0.3849)**	-	1.3786 (0.3016)
통제변수			수도권 여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등					
관측치			577	577	577	577	577	577
LR chi^2(df)			21.91 (16)	23.09 (16)	27.40** (16)	26.80 (16)	33.41*** (16)	29.79** (16)
Pseudo R^2			0.0178	0.0188	0.0221	0.0216	0.0273	0.0244

5 요약 및 시사점

□ 분석내용 요약

- (국내 재정교육 현황) 일반 국민 대상의 재정교육은 공교육 과정상의 경제원론 이론 소개와 납세자 교육이 대부분임
  - (공교육) 사회과목 및 일부 선택과목에서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다루며 재정과 관련된 현실적 쟁점을 다루기보다는 정부 경제역할에 대한 경제원론적 소개 위주
  - (공공기관)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의 재정실무 교육이 주류이며, 그 외 대국민 재정교육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 및 납세자 교육 존재
- (해외 재정교육 현황 및 시사점) 조세·재정 관련 시민의식 고취 차원에서 교과과정상의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일반인 대상 교육도 활발히 진행
  - (청소년) 주요 선진국은 조세·재정교육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접근하며, 일부 개발도상국도 납세의식 고취 차원에서 조세·재정교육 강화
  - (공교육 外) 청소년 외에도 대학생, 일반인, 교사,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재정교육이 이뤄지며, 다변화된 매체 및 교육수단이 동원됨
- (재정이해력 논의) 해외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개혁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당국자와 시민들의 재정이해력을 제고하는 노력 개시(Casey, 2024)
  - (정의) 재정이해력은 재정적 결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 국민경제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
  - (개념) 협의의 조세이해력(tax literacy)과 보완적인 관계이자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과 구분되며, 세금 지식과 함께 공공재정 시스템에 대한 넓은 시야 요구
  - (영역) '재정규율에 대한 이해', '재정의 지속가능에 대한 이해', '미래 주요 재정적 도전(fiscal challenge)에 대한 대응' 등 핵심 능력 영역으로 구성
  - (기대효과) 재정이해력 향상의 기대효과로는 크게 납세의식의 향상, 가계재무 건전성 개선, 재정의 투명성 강화, 재정에 대한 참여의식 강화 등이 있음
- (국가공동체 교육)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며 '재정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참여의지'를 갖춘 능동적 태도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재정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취할 때 기존의 의무중심적 접근을 넘어 조세·재정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및 탐구력', '문제해결 기능', '사회참여 기능', '가치분석적 접근'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됨(김재근, 2023)
- 재정교육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유권자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부의 조세·재정 활동과 연관지어 가르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현재세대의 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multi generation) 지속가능한 번영을 고려하게끔 하도록 재정에 대한 공동체적 시각을 강화할 필요성 존재

• (전국민 재정이해력 조사결과 및 시사점) 재정교육 경험은 저조하나 재정에 대한 궁금증과 참여의지는 강하며, 재정교육은 재정에 대한 관심 및 참여의지를 강화
- (교육경험 및 수요) 성인 59%, 청소년 76% 가량이 재정교육 경험 전무한 반면, 재정 관련 궁금증과 교육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음
- (재정지식) 6개 재정분야 퀴즈 정답률은 성인 46%, 고등학생 32%에 그침
- (관심도) 응답자의 약 3/4 이상 재정정보를 분기별 1회 이하 접하며 재정정보 공개사이트 및 재정 분석자료 관심도 낮으나 재정 제도에 대한 참여의지는 강함
- (교육효과) 재정교육은 재정지식, 관심도, 참여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역할) 특기할 점은 대학 외의 공공기관 재정교육 역시 재정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건전한 재정 가치관 함양에 기여한다는 것

□ 재정 콘텐츠 및 교수법 개발 관련 시사점

•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재정이해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 및 콘텐츠의 개발을 재정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주도할 수 있음
- 재정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은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에 적합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재정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IOTA, 2008; OECD, 2021; Sheiner, 2024)

• (멀티미디어 교육) 효과적 재정교육 콘텐츠 확산을 위한 멀티미디어 전략이 요구됨
- 단일 매체에 의존한 교육보다는 그림, 영상, 활자, 음성언어 등 다양한 매체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Kobus, Moses & Bloom, 1994)

- (평생학습 과정 연계)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과정 속 재정교육 기회 확대
  - 기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나 지역사회 평생교육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일반 국민이 재정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 (열린재정 연계) 재정정보 공개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각 자료나 AI 챗봇 및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 기존에 공개된 재정정보의 전달 효과성을 보다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교육 콘텐츠를 설계할 수 있음(Jordan et al., 2016).
- (재정 참여제도 연계) 참여예산제도나 예산낭비신고제도와 같은 재정 참여제도에 재정교육 콘텐츠 및 커리큘럼 접목 검토
  - 금번 재정이해력조사를 통해 확인한 재정참여에 대한 높은 의욕을 체계적인 재정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시 국민참여단 대상의 재정교육을 추가 및 내실화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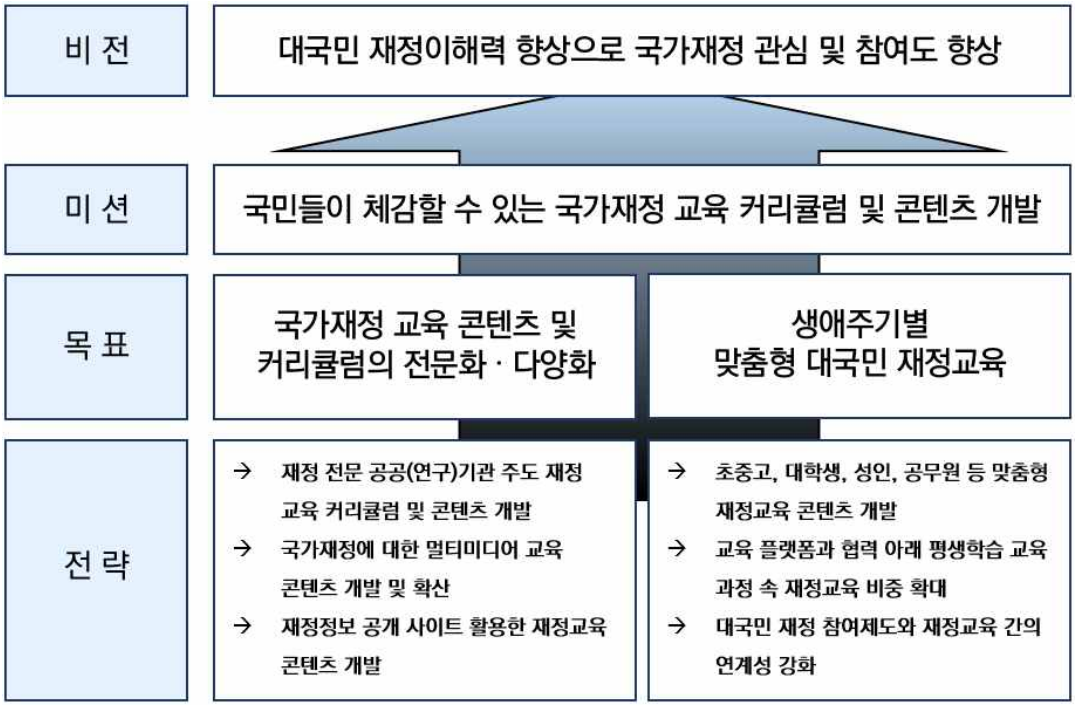
□ 재정교육 발전 전략

- (국민공동체 교육 강화) 재정교육은 '자발적 납세자'를 넘어 공공재정 이슈에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 효과적인 재정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재정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의 개선을 위해 재정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도록 독려
- (재정교육 발전방안) 재정 전문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재정교육 콘텐츠의 전문화·다양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정교육 콘텐츠 개발
  - (전략1) 조세·재정 전문성을 가진 공공(연구)기관의 주도 아래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에 대한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 (전략2) 게임, 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활용 재정교육 확산
  - (전략3) 교육 플랫폼과의 협력 아래 재정교육을 평생학습 교육과정과 연계
  - (전략4) 참여예산제도, 예산낭비신고 센터 등 기존 재정 참여제도를 내실화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교육 커리큘럼을 도입하는 방안 모색
  - (전략5) 재정교육을 통해 열린재정 등 기존 재정정보 공개사이트에 공개되고 있

던 재정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

- (재정교육 발전 기대효과) 재정교육을 통해 국민의 재정이해력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음
  - 따라서, 재정교육을 부차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조세·재정 정책의 일부분이라고 사고할 필요가 있음(IOTA, 2008)

[그림 12] 국가재정 교육 발전 전략



요 약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

Ⅱ 재정교육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재정교육 현황 ····· 4
가. 국내 공교육 상의 재정교육 ····· 4
나. 국내 대학교 재정교육 현황 ····· 11
다. 국내 공공기관 재정교육 현황 ····· 13
2. 해외 재정교육 현황 ····· 30
가.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 재정교육 현황 ····· 30
나. 공교육 외의 조세·재정교육 ····· 38

Ⅲ 재정이해력 및 재정교육의 필요성

1. 재정이해력 향상의 필요성 ····· 46
가. 지속가능한 재정과 재정이해력 ····· 46
나. 재정이해력에 대한 선행연구 ····· 51
다. 재정교육 및 재정이해력 향상의 기대효과 ····· 54
2. 재정교육과 국민공동체 ····· 61
가. 국민교육의 정의 및 사례 ····· 61
나. 조세·재정에 대한 국민교육적 접근 사례 ····· 65
다. 재정교육에 대한 국민공동체적 접근 ····· 67

C/O/N/T/E/N/T/S

Ⅳ 전국민 재정이해력 실태조사

1. 재정이해력 실태조사 ····· 71
   - 가. 실태조사의 배경 ····· 71
   - 나. 재정이해력조사의 설문설계 ····· 73
   - 다. 연구설계 및 계량분석 방법론 ····· 76
   - 라. 재정이해력조사 주요 결과 ····· 79
2. 재정교육의 기대효과 ····· 89
3. 요약 및 시사점 ····· 93
   - 가. 재정이해력조사 분석결과 요약 ····· 93
   - 나. 재정이해력조사의 시사점 ····· 94

Ⅴ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시사점 ····· 96
   - 가. 국내 재정교육의 현황 ····· 96
   - 나. 해외 재정교육 현황 및 시사점 ····· 97
   - 다. 재정이해력에 대한 해외 논의 ····· 98
   - 라. 재정에 대한 국민공동체적 시각의 필요성 ····· 99
   - 마. 전국민 재정이해력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100
2. 재정교육 발전방안과 기대효과 ····· 101
   - 가. 국민공동체적 접근 강화 ····· 101
   - 나. 국가재정 교육 발전 방안 ····· 101

참고문헌 ····· 105

부록

부록1. 일반인 및 대학생 재정이해력조사 설문지 ····· 111

부록2. 청소년 재정이해력조사 설문지 ····· 118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압축적 경제발전을 이루는 와중에도 재정건전성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시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각종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출 규모는 급격히 늘어났다.[1] 특히 압축성장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주목이 확산되자 이를 해소하는 데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여론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국가의 재정여력과 재정의 역할 범위에 대한 논란도 확대됐다.

현재 우리 사회에 중장기적 재정개혁이 요구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변화와 복지수요의 확대 그리고 성장잠재력 고갈 추세 속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산업·기술 및 에너지 구조변화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투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과 미래세대의 재정적 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경기하락 국면에는 구조적 침체 방지를 위한 탄력적 재정지출을 주문하는 입장이 대두됐으나(강병구·조영철, 2019),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 지출 및 세입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시각도 대두됐다(백운, 2023). 다른 한편으로 지속가능

1) IMF의 Fiscal Monitor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GDP 대비 10.2%에 불과했던 반면 같은 시기 신흥국 및 중진국의 정부부채 규모는 41.1%에 달했다. 한편 2023년 기준 한국의 정부부채 규모는 GDP 대비 55.2%로 증가했다.

한 발전목표 및 에너지·산업 구조전환 달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Mazzucato, 2021). 이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보장 기금의 지속가능성, 조세제도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재정현안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재정현안에 대한 판단은 정치사회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점 간, 분야별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복잡한 재정구조와 재정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정치사회적 대립으로 인해 이러한 합리성은 얼마든지 제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상황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선진국에서도 주목받게 되었다(Casey, 2023). 재정개혁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을 지지하는 합리적 여론의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찍이 우리나라 재정당국도 이른바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며 재정정보의 공개·확산 등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정보의 확산이 협의의 관료사회를 넘어 민간부문 전반에 파급력을 갖고, 재정개혁의 지지여론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해력(fiscal literacy)을 확산시킬 방안이 진지하게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재정이해력 증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관심도 새로이 환기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성인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된 데 비해, 재정교육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현재 공무원 실무교육 외의 국가재정 교육은 협의의 '조세교육'에 국한되거나, 경제원론 교육의 일부분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 전반의 '재정이해력 향상'과 '재정 참여역량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재정교육의 발전방안을 사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재정교육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의 재정교육은 '정부의 수입 및 지출 활동뿐만 아니라 국유자산 및 부채관리 등 국가의 재정활동 전반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교

육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재정교육(fiscal education)은 이후에 상술할 재정이해력(fiscal literacy; public finance literacy)과 깊이 연동되어 있다. 한편 현재 국내외 문헌에서 일반국민 대상 교육으로서의 재정교육을 지칭할 때 "재정교육(fiscal education)"이라는 용어보다는 "조세교육(tax education)" 혹은 "납세자(taxpayer education) 교육"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임을 볼 수 있다(OECD, 2021). 확실히 일반국민 대상의 재정교육 수혜자는 정의상 (잠재적) 납세자들이라는 점에서 본고에서 일컫는 '재정교육'은 '납세자 교육'과 의미가 외연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하는 재정교육의 잠재적 기대효과는 납세의지 제고뿐만 아니라, 재정활동에 대한 종합적 이해력의 향상이다. 이러한 재정이해력의 향상을 통해 국민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 선호체계를 형성할 수 있고, 조세행정의 수동적 객체(object)를 넘어서 주요 재정정책 의사결정에 관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발언하고 참여할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협의의 조세교육을 넘어서 국가재정의 경제적 역할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교육활동으로서 재정교육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재정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잠재적 기대효과를 탐색하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앞서의 논의에 기초하여 재정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따라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두 번째 장에서 재정교육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최근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재정이해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뒤, 재정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접근을 검토할 것이다. 네 번째 장에서는 전국민 재정이해력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이해력 현황 및 재정교육의 기대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효과에 입각하여 재정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재정교육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재정교육 현황

가. 국내 공교육 상의 재정교육

1) 공교육 상의 재정교육: 제1차~7차 교육과정

공교육의 틀 내에서 경제교육은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경제교육은 당대의 국가정책 및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러 가지 공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능한 민주국가의 구성원을 길러내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임대홍, 2005). 따라서 공교육 상에서의 경제교육은 단순한 경제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국가정책 및 사회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응하고, 유능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경제지식, 경제적 사고력,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도록 교육이 수행되게끔 요구된다(박준석, 2002).

이러한 경제교육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사회·경제 관련 교과목 안에 조세·재정 관련 내용이 꾸준히 포함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한국의 사회과 과목에 '경제론'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때 당시부터 '국민경제 속 재정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었다(김영우, 1998). 이후 제1차 교육과정(1954~1963)에서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를 통합하여 일반사회 과목을 두고 1학년에서 정치와 사회, 2학년에서 경제와 사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1학년 경제교육 관련 단원으로 "재정의 의미 및 우리나라 재정의 현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단원에는 "돈이 쓰이는 곳," "재정의 수입," "국가재정과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의무," "우리나라 재정의 현실," "우리나라 재정의 불건전한 원인" 등 국가재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다룬 것이 주목할만 하다(김경근, 1993). 또한 2학년 경제교육 관련 단원인 "경제와 사회"에서는 생산과 산업, 생산요소, 기업, 수요와 공급, 가격, 화폐금융, 국민소득의 순환, 재정, 경기변동 등의 경제개념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같은 곳).

〈표 2-1〉 시기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조세·재정 교육 관련 내용

구 분	내용	
	과목 (대단원)	단원 및 주제
제1차 교육과정	재정의 의미 및 우리나라 재정의 현실	1. 돈이 쓰이는 곳 2. 재정의 수입 3. 국가재정과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의무 4. 우리나라 재정의 현실 5. 우리나라 재정의 불건전한 원인
제2차 교육과정	일반사회	• 국민경제 생활 – 근대경제의 성립과 발달 – 국민경제의 순환 – 생산과 국민생활 – 물가의 변동과 경제생활 – 국민저축과 경제발전 – 국가재정과 국민소득 – 경제를 위한 정책과 국제협조
	정치경제	• 경제의 구조 – 생산과 기업 – 가격기구 – 소득과 소비 – 화폐금융과 재정 – 무역과 국내경제와의 관계 – 경기변동 –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
제3차 교육과정	정치·경제	• 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 – 한국경제의 근대화 – 가계와 소비생활 – 기업과 생산활동 – 시장과 가격결정 – 국민소득과 경제순환 – 통화와 금융의 역할 – 물가와 국민생활 – 재정과 국민경제 – 국제경제와 무역 – 남북한의 경제 비교
제4차 교육과정	사회 I	• 경제생활 –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 경제의 순환과 국민소득 – 가격과 물가 – 통화와 금융 – 재정과 국민생활 – 국제무역과 국민경제 – 한국경제의 현실과 당면과제

구 분	내용		
	과목 (대단원)	단원 및 주제	
제5차 교육과정	정치·경제	• 국민경제의 구조와 순환 – 경제순환과 국민소득 – 화폐와 금융 – 정부와 경제 – 경제성장과 경기순환 •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 –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성립과 발전 –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현황 – 고용과 노사관계 – 소득분배와 복지정책 –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과 과제	
제6차 교육과정	공통사회	• 합리적 선택과 시장 – 경제적 자유와 책임 – 경제성장과 경제문제 –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 – 세계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경제	• 시장경제와 정부 – 정부의 경제적 역할 – 조세와 예산 – 재정정책 – 정부의 규제와 공기업 활동 • 현대사회의 경제문제 –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 – 노동시장과 산업평화 –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기술개발과 경쟁력 – 환경보호 – 국제협력의 증진	
제7차 교육과정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사회 (국사 4단위 포함)	공통필수
	선택중심 교육과정	인간사회와 환경	일반선택 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심화선택 과목

자료: 강형구(1990), 임대흥(2005).

주: 교육과정 중 조세·재정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과목 및 단원 위주로 기재함.

제2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경제 관련 과목은 “사회”, “정치·경제” 등의 과목으로 분화되는 한편, 국가재정 관련 내용은 별도의 과목/단원으로 편제되기보다는 국가재정

과 관련 있는 단원의 세부항목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부터 경제교육 커리큘럼은 경제원론의 축소판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임대흥, 2005). 이후 제6차 교육과정(1992~1997)부터 경제가 독립 교과목으로 분리됐지만 선택 교과목으로 분리됨에 따라 경제교육의 실효성이 오히려 약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김경근, 1993). 한편 제7차 교육과정(1997~2007)부터 정부의 입장만이 아닌 '납세자', '(피)선거권자', '정부정책 결정권자'로서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다루려는 노력이 시작됐다(손정식 외, 2005). 또한 이때부터 사회 교과목이 공통필수와 일반·심화 선택 세부과목으로 분화되면서 오늘날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 관련 내용은 필수과목인 사회과목과 심화·선택과목인 경제 과목으로 분리되었는데 이러한 교육방식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1차~7차 교육과정을 통틀어 볼 때 과거 분과형이었던 사회과목이 통합형 과목의 특성을 갖게 되자 역으로 '경제' 과목의 비중과 위상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전제철 외, 2008).

2) 수시개정 체제 이후 공교육 상의 재정교육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2007년부터 고시 개정 교육과정(수시개정) 체제로 전환하였다. 교육과정 체제가 전환되던 당시에 경제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상충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논리적 사고능력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시장경제 제도는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인식되고 있었다(전제철 외, 2008). 또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개인과 가계의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금융·재무교육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수시개정 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제교육의 특징이다. 이처럼 합리적 경제주체와 민주적 국민 양성에 있어서 금융·경제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재정 교육의 비중과 위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후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볼 경우, 초등학교 사회 교과에서부터 조세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이 소개되기 시작한다. 중학교 사회 교과 단계에서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통화·재정정책 수단이 본격적으로 소개된다. 이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조세 및 정부재정의 기본적인 내용을 통합 교과서인 '사회' 과목에서

다루고, 고등학교 2학년 이후 선택중심 교과과정인 '경제' 교과서에서부터 총수요·총공급 및 실업 등 경제학의 심화개념이 본격적으로 소개된다. 이와 연계하여 '시장의 한계'와 '정부개입의 필요성 및 수단'에 대한 심화학습 내용도 제시된다.

〈표 2-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제과목 내용 체계

영 역	내용 요소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 희소성, 합리적 선택 • 비용과 편익, 경제적 유인 • 시장경제 체제의 특징 •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
시장과 경제활동	• 수요, 공급 개념 • 노동시장, 금융시장 • 시장 균형 • 자원배분의 효율성, 잉여 • 시장실패, 정부개입, 정부실패
국가와 경제활동	• 경제성장, 한국경제의 변화 • 국민경제의 순환, 국내총생산 • 실업, 인플레이션 • 총수요와 공급 • 재정정책, 통화정책
세계시장과 교역	• 무역의 원리 • 무역정책 • 외환시장, 환율 • 국제수지
경제생활과 금융	• 수입, 지출, 신용, 저축, 투자 • 자산과 부채의 관리 • 재무계획 수립

자료: 최종민(2017)에서 교육부 자료 재인용.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경제과목의 목표로 '책임 있는 민주시민'이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활동, 정부개입, 재정정책에 대한 내용이 경제과목의 내용체계에 편입되었다. 경제 교과목에는 3대 경제주체 중 하나로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각종 재정활동이 소개되고 있으며,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개입,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의 내용도 소개되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경제 교과 내용은 이론 중심의 '경제학 원론의 축소판'이라는 종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최종민, 2017). 같은 지적이 교과과정 상의 조세·재정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내용이 정부의 재정정책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딜레마 및 쟁점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기보다는, 정부의 역할, 공공재의 기능, 조세 및 재정정책에 대한 경제원론적 이론 소개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표 2-3〉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사회·도덕·역사과 고등학교 과목

과목구분		주요내용	
공통과목		• 통합사회 1,2 • 한국사 1, 2	
선택과목	일반선택	• 사회와 문화 • 세계시민과 지리 • 현대사회와 윤리 • 세계사	
	진로선택	• 정치 • 법과 사회 • 경제 • 국제관계의 이해 • 한국지리 탐구	• 도시의 미래 탐구 • 윤리와 사상 • 인문학과 윤리 • 동아시아 역사 기행
	융합선택	• 금융과 경제생활 • 사회문제 탐구 • 여행지리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 윤리문제 탐구 •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자료: 교육부(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필자가 재정리.

마지막으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공통사회 과목에 경제 관련 기초 내용을 담으며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부터 경제에 대한 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선택'으로 되어 있던 경제과목을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제한 것이며,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융합 선택'[2] 과목이 신설된 것이다. 각각의 과목을 살펴보면, '경제'의 일부 단원에서 조세·재정 정책과 공공재의 개념을 간략히 소개하는 수준에서 정부재정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3] 또한 '금융과 경제생활'에서는 "수입과 지출" 단원의 '비소비 지출' 항목에서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정부 재정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으로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하며, 융합 선택 과목은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과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을 의미한다(『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3) 2024년 10월 기준 현재, 1차년도 교과서 인정에 합격한 민간출판사는 한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과 내용은 여타 출판사들의 교과서 인정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2-4〉 2022년 개정 교육과정 中 '경제' 및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과정 성취기준

경제	금융과 경제생활
(1) 경제학과 경제 문제 • 인간 생활에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학의 분석 대상과 성격을 이해한다. •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파악한다. •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하고,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과 한계 분석을 이용한 의사 결정 능력을 계발한다.	**(1)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며, 단기와 장기의 관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한다. •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나타난 금융 서비스의 변화된 특징을 이해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계약(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 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주요 금융 소비자 보호 제도를 탐구한다.
(2) 미시 경제 •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균형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다양한 시장에 적용한다. •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고, 조세, 공공재 등과 같이 시장의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사례를 탐구한다.** • 시장 기능과 **공공 부문의 활동**을 비교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2) 수입과 지출** • 소득이 수입의 주요 원천임을 이해하고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구한다 •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을 구분하고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실천한다. • 예산의 의미와 예산 관리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금융 생활에서 예산을 수립·점검·평가한다.
(3) 거시 경제 • 여러 가지 거시 경제 변수를 탐색하고, 국가 경제 전반의 활동 수준을 파악한다. •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한국 경제의 변화와 경제적 성과를 균형 있는 시각에서 평가한다. • 경기 변동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경기 안정화 방안으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분석한다.	**(3) 저축과 투자** • 저축의 경제적 의의와 다양한 저축 상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한다 • 기본적인 금융 투자 상품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한다. • 저축과 투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저축과 투자를 결정하며, 활용할 수 있는 예금자 보호제도와 투자자 보호제도를 탐색.
(4) 국제 경제 • 개방된 국제 사회에서 국제 거래를 파악하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이해하고,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한다. • 외환 시장에서 환율의 결정 원리를 이해하고, 환율 변동이 국가 경제와 개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4) 신용과 위험 관리** • 신용 사용의 결과를 고려한 책임감 있는 신용 관리 태도를 기르고,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자신의 신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 위험 관리의 필요성과 위험 관리 방법으로서 보험의 원리를 이해하고, 주요 보험 상품의 특징을 비교한다. • 고령사회에서 노후 설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연금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한다.

주: 정부재정 관련 내용은 볼드체로 표시.

자료: 교육부(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필자가 재정리.

3) 공교육 재정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의 공교육 과정이 여러 차례 개편을 거치면서, 사회과목의 일부 단원에서 재정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일부 선택과목에서 재정의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는 현재의 틀이 안착됐다.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이해력 등 가계·개인의 합리적 경제생활을 돕기 위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됐으나 국가재정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비판적·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뚜렷한 움직임은 등장하지 않았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등장하는 국가재정 관련 내용은, 이하에서 살펴볼 일부 선진국 모범사례의 경우처럼, 재정정책과 관련된 현실적 쟁점 및 딜레마에 대한 고민을 유도하기보다는, 공공재, 시장실패, 정부의 경제적 역할, 조세·예산의 기능에 대한 경제원론적 수준의 이론적 서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나. 국내 대학교 재정교육 현황

고등교육 수준의 재정 관련 과목은 경제·경영·회계·세무·무역·부동산학과 등 경상계열 학과에서 다수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4). 공공재정의 이론과 실무를 폭넓게 다루는 전통적인 재정학(Public Finance) 과목은 재정학, 재정이론, 정부재정이론, 지방재정이론, 재정정책론, 예산의 이해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다. 한편 후생이론에 초점을 맞춘 미시경제 분야의 재정 과목은 공공선택이론, 공공경제학, 공공경제론 등의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다. 거시경제 분야에서의 재정론은 거시경제정책론 등의 거시경제 심화과정, 재정정책 세미나 등의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다. 경영학·회계학·세무학 등 일부 학과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예결산 실무를 가르치는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회복지재정·도시재정·농촌재정 등 세부분야별 재정 이슈를 다루는 과정도 존재한다. 재정학 과목은 회계·세무사 자격증과 관련해서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일선 학과의 취업수요에 발 맞추어 재정 관련 과목이 실무 교과과정으로 세분화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방송통신대학과 같은 온라인 교육기관과 K-MOOC 및 KOCW와 같은 교육자원공개사이트에도 재정학 및 공공경제학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표 2-5〉 2024년 1학기 재정 관련 대학교 학부 개설 과목명

재정학 관련	공공경제학 관련 / 지방재정	거시 재정정책 관련	기타 재정 실무 / 세부분야
재정학 재정학 개론 재정학 세미나 재정학 연습 재정학의 이해 재정학 특강 재정분석론 정부와 재정 공공재정론 공공재정분석 공공재정학 공공재정론 공공재정관리론 예산과 재정 예산 및 재정의 이해	공공선택론 공공선택의 정치경제학 공공선택 및 의사결정론 공공경제 공공경제학 공공경제론 공공경제정책론 I 공공경제정책론 II 공공경제학의 이해 정치 및 공공경제 / 지방재정의 이해와 예산심의 지방재정의 이해와 예산 실습 지방재정론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지방정부의 재정 정부예산 및 지방재정론	거시경제정책론 현대재정의 이론과 현실 재정 및 공공정책 재정금융정책론 재정정책론 재정정책 심화 재정정책 세미나 정부재정론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공공경제: 정부지출	국가재정과 재무관리 재정관리론 공공재정관리 정부회계 및 재정 관리론/ 사회복지와 재정 교육정책 및 재정 교육재정학 교육재정과 경제 교육재정의 이해 정부재정과 공기업 재정법 재정과 상법 부동산조세재정학 공공재정투자분석 사회복지재정관리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그림 2-1] KOCW 재정학 강의안

자료: KOCW 사이트(2024.10.29. 검색).

다. 국내 공공기관 재정교육 현황

국가재정 교육의 또 다른 유력한 수행주체로 정부부처·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재정교육은 재정실무에 초점을 맞춘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대상의 '실무교육'과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대상의 '대국민 재정교육'으로 나눠볼 수 있다.

1)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재정 실무교육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혹은 이들로부터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공하는 재정교육 프로그램은 재정업무 및 회계실무 과정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공무원 대상 교육은 예산편성·계약·결산·회계·감사·성과평가 등의 실무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정실무 교육과정은 교육의 특성상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크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기관들이 사이버수업 포털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재정교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2-2] e재정배움 국가재정 교육 체계

자료: e재정배움 사이트(2024.10.29. 검색).

① 기획재정부 e재정배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e재정배움(finedu.moef.go.kr) 재정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 예산·결산·기금·국유재산·공공기관 등 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의 주요 대상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며, 공공기관 임직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 방법으로는 크게 (1) 집합교육 (2) 사이버교육 (3) 혼합교육 (4) 결산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신청은 온라인 상의 수강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e재정배움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재정법의 편제에 따라 재정과정별로 세분화된 재정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편성→예산심의→집행→결산→성과평가 등 예산순기별로 기본·실무·심화 등 난이도를 세분화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최근에는 예산·회계 실무 외에도 재정통계 분석,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에비타당성조사, 국고보조금, 국유재산, 재정건전성 등 재정현안과 관련된 심화 강의가 개설되고 있다. 전문 강사진 중에서는 국가재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직 공무원들이 '나라살림멘토단'으로 참여하여 강의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표 2-6〉 e재정배움 운영의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
※ 국가재정법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결산 등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외부교육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표 2-7〉 2024년 e재정배움 재정 및 결산교육 운영 현황

구분		교육기간	교육형태	과정·과목	비고
재정교육 운영 (e재정배움)		3월~11월	사이버 및 집합교육	76개 과목 (사이버 24개, 집합 52개)	-
결산교육 운영	일선관서 대상	10월~12월	집체교육 (전국 주요시도별 12개 권역)	5개 과목 (수입·채권·지출·국유재산·재무 결산)	재정정보원 지원
	중앙관서 대상	11~12월	집체 및 전산 실습교육	7개 과목 (회계·기금·총사업비 등 결산교육)	재정정보원 지원

② 국가회계교육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포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부문의 회계업무 실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회계교육포털(kipf.re.kr/edu)',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교육(kipf.re.kr/pedu)' 포털을 운영 중이다. 해당 회계교육 포털사이트는 국가회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국가회계 기초지식 및 발생주의·복식부기[4] 회계원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표 2-8〉 국가회계 교육 운영의 법적 근거

국가회계법 관련 조항
※ 국가회계법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표 2-9〉 국가회계 집합교육 세부 프로그램

구분		내용
국가회계이론	대상	국가회계에 관심 있는 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목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국가회계지식 함양
	내용	회계원리 기초, 회계순환과정 실습(온라인), 국가회계제도 이론 및 실습 (2일, 14시간)
국가회계실무	대상	회계 담당 공무원 및 업무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
	목표	회계담당자의 국가회계역량 강화
	내용	회계업무 유형별 오류사례 및 해결방안, 국가재무제표 살펴보기 (1일, 7시간)
재정결산실무	대상	재무결산 담당 공무원 및 국가회계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목표	결산담당자의 결산수행 능력 강화
	내용	재무결산 절차 및 유의사항 (2일, 12시간)
국가회계의 활용	대상	국회, 국가회계에 관심 있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종사자
	목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제고
	내용	국가회계정보의 결산보고서, 재정상태표 해석, 재정운용표 해석 등 (1일, 6시간)

자료: 국가회계교육포털 사이트(2024.10.29. 검색).

4) 발생주의는 경제적 자원의 변동에 기준을 두어 경제적 자원의 획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경제적 자원이 소비되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며,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의미한다. 국가재정 영역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칙은 2009년 회계연도부터 본격 도입되었으며,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4대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국가 회계교육 포털의 교육 대상은 회계 및 재무결산 담당 중앙관서 공무원, 국회 및 중앙정부 기관 공무원이다. 교육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집합교육, 찾아가는 교육, 사이버교육 등이 있다. 이 중 집합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 실무, 재정결산 실무, 국가회계 활용 등 회계업무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교육은 부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며 이를 신청할 경우 연구진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 기획재정부 나라배움터(moef.nhi.go.kr)에서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표 2-10〉 '찾아가는 국가회계 교육' 수행 절차

교육신청	⇒	신청내용 검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검토결과 통보 및 교육 수행
■ 담당자와 교육 주요 내용 및 일정 사전협의 ■ 국가회계교육 포털 접속 ■ 교육신청 〉 일시/장소/인원/교육내용 기재		■ 교육 요청 내용의 적절성 검토 ■ 교육일정에 강사 투입 가능한지 여부 검토		■ 교육 가능 여부 통보 ■ 교육 수행

〈표 2-11〉 국가회계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실시기관		기획재정부 나라배움터 (http://moef.nhi.go.kr)
교육과정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실무 교육
교육대상		국가직 공무원
교육시간		48차시 24시간 (차시 당 30분 소요)
신청	신청대상	회계 담당 공무원 및 업무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
	신청절차	나라배움터 접속 ▶ 로그인 ▶ 온라인 교육신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2조를 법적 근거로 삼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회계담당 직원들에게 회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교육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이러한 회계교육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회계교육 및 결산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회계연도 중에 필요한 회계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회계교육'과 결산서 작성 방법 등을 가르치는 '결산교육'으로 나눠진다. 회계교육(기중)의 경우 회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관계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필수적인 회계처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계원리의 기초, 공기업·준정부기관 실무 이슈 사례 등을 제공한다. 결산교육(기말)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작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결산서를 기한 내에 적절한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개요 및 절차 (2) 결산 주요 이슈 사항 및 회계처리 (3) 주요 항목별 IFRS 등 회계처리 및 주석 작성 방법 (4) 표준 재무제표 양식 및 공통계정과목 해설 (5) 공공기관결산시스템(PIFRS) 개요 및 사용방법 설명 등이 있다.

〈표 2-1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프로그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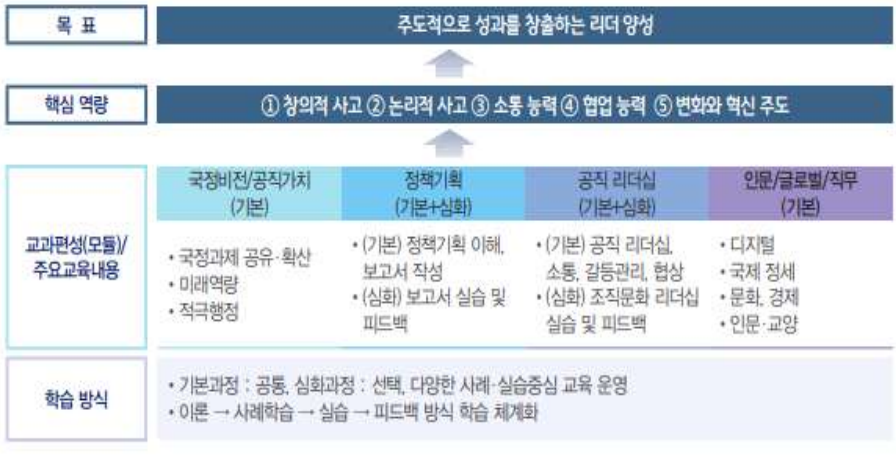
일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과목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1일차 (7.5H)	회계순환 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 (2.5H)	회계의 기초, 재무제표의 종류, 회계순환 과정
	유무형 자산 및 리스 (2.5H)	유무형 자산, 사용권 자산(리스)
	수익 (1.0H)	수익인식 모형, 수익인식 회계처리
	채권, 충당부채와 우발부채(1.5H)	화폐의 시간가치, 채권, 충당부채, 우발부채
2일차 (7.0H)	정부보조금 (1.5H)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종업원급여 (1.0H)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금융자산, 특수한 지분투자 (3.0H)	금융자산, 특수한 지분투자
	연결재무제표 (1.5H)	연결재무제표의 의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습, 연결재무제표 주요 이슈, 별도재무제표
3일차 (6.5H)	현금흐름표 (1.5H)	현금흐름표의 의의, 현금흐름표의 내용 현금흐름표 작성 실습, 현금흐름표 주요 이슈 주석공시
	법인세 회계 (1.5H)	법인세 회계의 의의, 법인세 주석 작성 실습, 법인세 회계 주요 이슈
	결산서 작성방법 (1.0H)	결산개요, 회계 처리, 결산, 주석작성 유의사항
	외부회계감사 주요 오류사례 (2.5H)	주요 오류사례(자산, 부채, 손익 등)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포털 사이트(2024.10.29. 검색).

③ 공무원 인재개발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직급별 교육과정'과 '사전학습 e-러닝 교육콘텐츠'에 각종 재정실무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5급 승진 관리자 과정의 "글로벌/인문/직무/기타" 분야 중에서 "국가재정 운영" 등이 공통직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7급 신규자 과정(공·경채), 9급 신규자 과정, 경채 신규자 과정의 "직무·전문성" 분야 중에서 "국가재정·예산" 교육이 행정실무 과정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9급 신규자 과정의 "직무·전문성" 분야 중에서 "d-Brain, e나라도움" 등 재정정보시스템 활용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나라배움터 정규과정 목록에서 "회계제도의 이해"가 직무공통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제공하는 기본교육 과정 내에 국가재정 교육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

[그림 2-3] 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그림 2-4] 공무원 인재개발원 재정교육 예시

공직리더십 (42H, 22%)	기본	• Mind Up ※역량 자가진단 및 디브리핑, 자기개발 계획서 작성, 관리자리더십·역량의 이해 • Lead Up ※갈등관리, 권한위임, 전략적 협상 커뮤니케이션, 소통, 코칭 대인관계 기술	직무 전문성 (52H, 42%)	• 행정실무(기초) - 행정법, 국가재정예산 복무제도, 국회, 공문서 작성법 등
	심화	• Change Up ※리더십 역량 실습(PT·RP·GD) 및 피드백 • Power Up ※변화관리 및 조직관리		• 행정실무(심화) - 보고서 작성 이론→보고서 실습(1:1피드백)
글로벌/인문/직무/기타 (21H, 11%)		• 국제정세 및 경제동향 ※국제정세 경제동향에 따른 시의성 있는 교과 발굴 • 공동직무 ※국가재정 운영, 법제 개정, 통계 이해, 공공갈등 등 실무 중심 교과 운영 • 디지털, 인문학 ※AI(Chat GPT), 항공우주 등 최신 디지털 트렌드, 인문학 콘서트 등 융복합 인문교양 교과 운영		• 디지털 역량 및 정보화 교육 - 최신 디지털 트렌드(Chat GPT 활용 등) 학습, 한글/ 엑셀 활용 실습 - d-brain, e-사람 등 정부업무시스템 활용 이해
			성장 잠재력 (29H, 23%)	• 공직역량 - 신규공무원의 조직 내 역할 역량을 고려한 교과 학습 ※❶역할 인식→❷역량 학습→❸역량 내재화
				• 소통 및 협업 - 민원대응, 대인관계기법, 공직 내 소통의 기술 등 • 긴급상황 대응 및 안전 교육 - CPR(심폐소생술), 재난대응

자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2024),「2024 교육 운영계획」

④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에는 리더십 양성에 초점을 맞춘 '장기과정', 5급 승진자 및 승진후보자에게 제공되는 '기본교육' 과정, 현 정부 국정과제·국정철학의 지방자치단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시책교육 과정' 및 '전문교육 과정', '사이버교육' 등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지방재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승진대상자에 대한 '기본교육', 공무원과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실무자에게 제공되는 '전문교육 과정', 지방의회 의원에게 제공되는 '기타교육', 연중 접근 가능한 '사이버교육'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기본교육'의 경우 지방재정 전반에 대해 가르치고 있고 '전문교육'에서는 예산·회계·세무에 관한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의원 대상 기타교육에서는 예결산 분석 및 심사 요령을 가르치고 있다.

〈표 2-13〉 2024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지방재정 교육 프로그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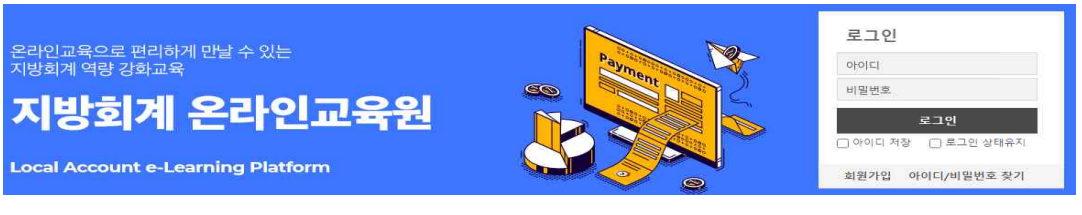
구분 및 대상		교육기간	교육방법	과정·과목
기본교육	5급승진 리더과정	1월~12월	집합교육	직무필수 (지방재정)
전문교육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실무자	2월	집합교육	전문교육 (지방공공기관 예산·회계실무)
	중앙·지방4급 이하 공무원	4월	집합교육	직무공통 (행정실무에 필요한 예산·회계)
	임용 3년 이내 지방세무직렬 실무자	7월	집합교육	직무전문 (지방세무실무 역량강화)
기타교육	지방의회 의원	2~3월 7~8월	집합교육	지방의회 입문 과정 (예결산 분석 및 검토 기초)
		8월	집합교육	지방의원 예결산 심사 심화 과정
		4~5월 9~10월	집합교육	지방의회 전문 과정 (예산·추경·결산심사 분석 및 검토)
사이버교육	지자체 공무원 등	연중 상시	온라인 교육	직무공통 (지방회계실무, 지방예산실무, 지방계약실무,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및 구제)
				직무전문 (지방재정조정제도, 국세기본법, 지방세 세목별 실무과정 등)

자료: 지방자치인재개발원(2024), 「2024 교육 운영계획」

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설립된 공직유관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회계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회계 교육은 크게 '집합교육', '현장교육', '온라인 교육'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 중에서 지방회계 집합교육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재무결산·지방계약·공유재산·회계지출·지방계약 등 맞춤형 커리큘럼을 월별로 정기 제공하여 공무원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회계 현장교육은 현안업무 및 접근성으로 인해 정기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찾아가는 회계 실무 교육 서비스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 사례 등이 있으며, 공문을 통해 교육신청을 접수받아 전문강사가 출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지방회계 온라인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재산·계약 담당 공무원과 지방의원 및 결산검사위원(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에 필요한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계교육 포털사이트



〈표 2-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육 프로그램 예시

지방회계 정기 집합교육 과정	지방회계 온라인 교육 과정
1월: 재무결산 실무과정(1기) 2월: 지방계약 실무과정(1기) 3월: 공유재산 실무과정(1기) 4월: 회계지출 실무과정(1기), 지방계약 실무과정(2기) 5월: 공유재산 실무과정(2기) 6월: 회계지출 실무과정(2기), 지방계약 실무과정(3기) 8월: 공유재산 실무과정(3기), 회계지출 실무과정(3기) 9월 : 지방계약 실무과정(4기), 공유재산 실무과정(4기) 10월: 회계지출 실무과정(4기), 재무결산 실무과정(2기) 11월: 재무결산 실무과정(3기)	공유재산 실무과정 (2~11월) 예산지출 회계 과정 (2~11월) 재무회계 실무과정 (2~11월) 지방계약 실무과정 (2~11월) 마이크로 러닝 (2~11월) 결삼검사위원 특별과정 (3~11월)

2) 대국민 재정교육

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예산학교

각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별 특색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그레시(市)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모델이 확산되었다.

현재 한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을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5] 또한 다수의 지자체들은 이른바 '예산학교'를 운영하며 지방예산 및 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역량 강화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학교는 지방예산 현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예산과정에 대한 참여 방법을 공유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예산학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국민 대상의 기본교육, 청년·여성·장애인·다문화 등 특정 계층 대상의 '찾아가는 예산학교', 참여예산위원·전문가·공무원 대상의 심화 교육, 청소년 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류영아, 2019). 이 외에도 주민참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숙의 활동을 돕는 전문가 지원 서비스(퍼실리테이터, 코디네이터 등), 사업제안 관련 컨설팅, 현장방문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역시 광의의 주민 대상 재정교육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교육 실적은 최근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 1,123회 실시되었으나, 2021년에는 전년보다 46.8% 증가한 1,649회로 나타나고 있다(정창훈 외, 2022). 또한 2021년 기준으로 (소규모 군 단위를 제외한) 대다수의 기초 지자체들이 주민참여교육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해 누적 참석인원은 4,625명으로 나타났다.

---

5)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r.kr) (2024.10.29. 검색).

〈표 2-15〉 주민예산참여제도 교육 운영 실적 (2021년)

(단위 : %, 회, 명, 백만원)

단체유형		계획수립여부	개최 횟수	참석자(명)	예산액
광역	특광역시	100.0	33.4	3,014	39.9
	도	88.9	13.0	297	19.8
기초	시(大)	92.9	10.6	417	8.8
	시(中)	89.7	9.5	177	5.2
	시(小)	75.0	3.7	100	6.6
	군(大)	90.9	5.9	147	3.5
	군(小)	35.2	2.2	65	1.7
	자치구(大)	94.4	10.4	283	4.4
	자치구(小)	84.8	3.6	125	1.7

자료: 정창훈 외 (2022).

서울시의 참여예산학교 교육자료를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예산 현황, 예산절차의 이해, 성인지예산제도, 참여예산위원의 직무윤리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본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실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참여예산 제안서를 작성하는 심화 단계의 교육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참여예산학교는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6〉 서울시 참여예산학교 교육과정 및 내용 (예시)

일자	과정	교육 내용
1일차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 참여예산제도의 기본개념 소개 • 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소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
	서울시 예산 읽기	• 서울시 예산 규모, 구성, 수입원 등 • 예산절차 및 주요 용어 소개
2일차	성평등한 참여예산위원회	• 성인지예산제도 및 예산운영에서의 성평등 관점 교육
	참여예산위원 직무윤리	• 공무원 행동강령 등 참여예산위원 직무수행 지침 교육
	서울시 읽기	• 서울시 주요 시정현황 및 시책사업 소개
3일차	참여예산 운영 실습	• 사업계획서 및 평가 기준 교육
		• 참여예산 제안서 작성 교육

자료: 서울시 참여예산 웹사이트(2024.10.29. 검색).

② 납세자 세법교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국세청 소속기관으로 세금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및 지식을 가르치는 기관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납세자 대상으로도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세법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세법교실은 대면강의와 실시간 화상강의 형태로 병행 운영되고 있다. 세법교실의 교육내용은 법인세 신고실무, 양도소득세 신고 실무, 세무조사의 이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실용적 세법 지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6] 납세자 세법교실 교육신청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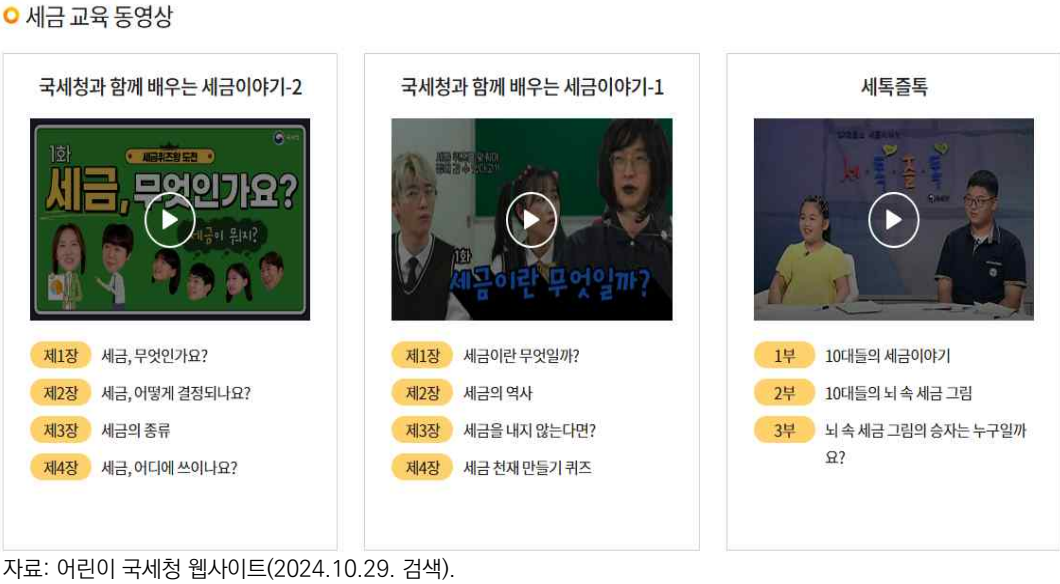
번호	지역	과정명	교육내용	교육일수	교육 시작일	우선수강권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
1	대면강의(원주) 강원	(원주) 법인세 신고실무	법인세 기초이론, 계정과목 및 세무조정, 세액공제 및 감면	1일	2024-10-30 14:00 ~ 17:00	2024-10-09 ~ 2024-10-17	2024-10-10 ~ 2024-10-17	마감
2	대면강의(원주) 강원	(원주)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양도소득세 기본개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1일	2024-10-31 14:00 ~ 17:00	2024-10-09 ~ 2024-10-17	2024-10-10 ~ 2024-10-17	마감
3	대면강의(원주) 강원	(원주) 세무조사의 이해	세무조사 제도 안내, 진행절차, 세무조사 사례	1일	2024-11-01 13:00 ~ 16:00	2024-10-09 ~ 2024-10-17	2024-10-10 ~ 2024-10-17	마감
4	실시간 화상강의	(테마)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이란?, 증명(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1일	2024-11-04 14:00 ~ 16:00	2024-10-19 ~ 2024-10-24	2024-10-20 ~ 2024-10-24	마감
5	대면강의 수원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동상속주택 개정사항, 양도소득세 계산흐름, 장기보유특별공제	1일	2024-11-08 14:00 ~ 17:00	2024-10-20 ~ 2024-10-27	2024-10-21 ~ 2024-10-27	마감
6	대면강의 수원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실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개요, 질의응답, 절세방안	1일	2024-11-11 14:00 ~ 17:00	2024-10-20 ~ 2024-10-27	2024-10-21 ~ 2024-10-27	마감
7	대면강의 수원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24년 주요개정사항, 종합소득세의 구조, 기장의무 판정, 필요경비의 이해(계정과목별)	1일	2024-11-18 14:00 ~ 17:00	2024-10-31 ~ 2024-11-07	2024-11-01 ~ 2024-11-07	대기

자료: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법교실 웹사이트(2024.10.29. 검색).

③ 어린이 국세청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국세청 웹사이트(kids.nts.go.rk)는 어린이 납세의식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세금교육 동영상, 세금학습만화, 세금게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금교육 동영상에는 세금의 역사, 세금의 종류와 사용처 그리고 납세의 필요성, 세금퀴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세금학습만화는 교육만화 웹툰 형식으로 어린이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금게임은 세금 관련 퀴즈게임을 대전격투게임 형태로 구현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고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어린이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학생 수준의 세금교과서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전현직 국세공무원을 강사진으로 꾸려 초·중·고등학교 대상의 무료 방문세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2-7] 어린이 국세청 세금교육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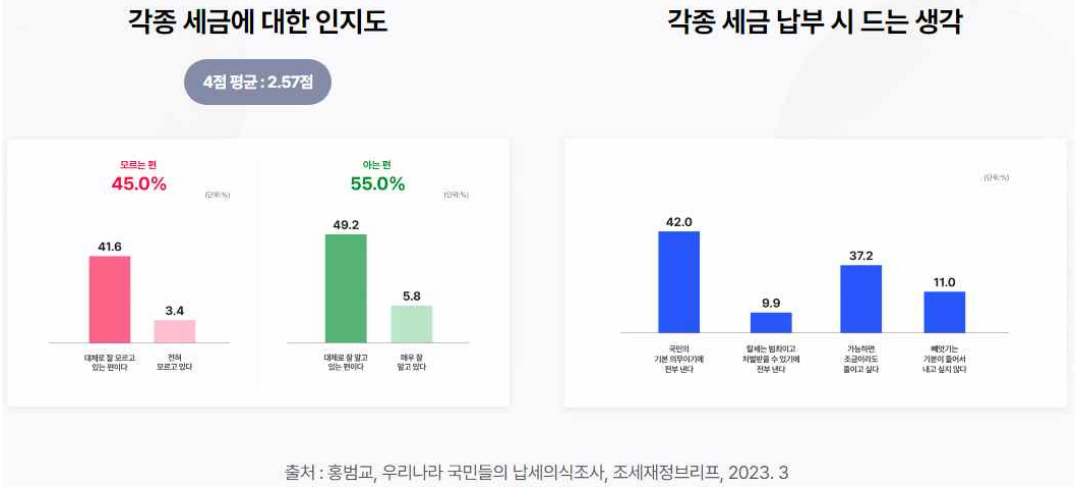


자료: 어린이 국세청 웹사이트(2024.10.29. 검색).

[그림 2-8] 어린이 국세청 온라인 세금 게임

자료: 어린이 국세청 웹사이트(2024.10.29. 검색).

[그림 2-9]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심교실 웹사이트(2024.10.29. 검색).

④ 함께하는 세심 교실

함께하는 세심교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조세교육 포털사이트(sesimclass.kipf.re.kr)이다. 세심교실은 우리나라의 세금납부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개발된 사업이다. 세심교실이 추진하는 세부사업으로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의 맞춤형 조세교육 교재 개발, 조세교육 콘텐츠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해외 조세교육시스템 연구 등이 있다. 세심교실에서 이뤄지는 대표적인 오프라인 교육활동으로는 초등학교 대상의 찾아가는 세금교육 프로그램인 '초등 함께하는 세심교실'이 있다. 함께하는 세심교실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교실 속 작은 정부를 세우고, 학생들이 직접 소득 및 소비, 세금납부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조세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체험형 학습 뒤에 이루어지는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 유형을 가르치는 활동과 성실 납세자 되기 등의 교육활동이 있다. 초등학교 대상의 세심교실 프로젝트는 2023년 8월 26개 학급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2024년 3월 178개 학급으로 확대되었다. 향후에도 세심교실은 고등학생, 사회초년생,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발될 예정이다.

[그림 2-10] 함께하는 세심교실 세부 프로그램

초등 함께하는 세심교실 세부프로그램

차시	주제	주요 내용 및 활동
0	세심교실을 만들어요!	우리 반 국가(세심나라) 만들기
1	우리 모두를 위한 세금이 필요해!	세금의 필요성 알아보기!
2	세금을 어떻게 정할까?	세심회의로 첫 세금을 정하다!
3	세금, 공평하게 내려면?	세법 정하기!
4	세금, 어디에 쓰일까요?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할까?
5	물건을 살 때도 세금을 내요!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보아요!
6	회사도 세금을 낸다고?	법인세 내기 어렵지 않아요!
7	집을 살 때,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취득세와 재산세를 정해봅시다.
8	세금을 안 내려 한다고?	성실 납세자가 되어보기!
9	한 해 동안 쓴 세금을 결산해요	리멤버 세심교실!
10	안녕! 진짜 세금 내는 세상!	굿바이 세심교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심교실 웹사이트(2024.10.29. 검색).

⑤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교육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의 dBrain+,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에 더해 공무원, 대학생,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맞춤형 재정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e나라도움 및 dBrain+ 사용자 교육과정에서는 재정시스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재정의 기초지식 확산을 돕고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금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협약(MOU)를 맺은 대학교 학부생 및 교육청 소속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재정과 재정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국가재정의 이해”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시도교육청과 업무혁약을 맺고[6]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마을 만들기”[7] 보드게임을 개발하여 이를 이용한 국가재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나라살림,” “청소년을 위한 나라살림” 교재 및 이에 기반한 PPT 교안을 자체 개발하여 교육현장에서 배포·활용하고 있다.

6) 광주교육청('23.9.5) 및 부산교육청('23.3.14)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후 2024년 한 해 동안 부산교육청 20개 학교 633명, 광주교육청 20개 학교 411명을 대상으로 “우리마을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7) “우리마을 만들기”는 부루마블 형식의 보드게임으로, 보드 칸을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재정수입을 적절히 활용하여 각자의 마을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가장 먼저 전부 다 건설하는 것이 승리 목표이다.

〈표 2-17〉 한국재정정보원 재정교육 현황 (2024년 기준)

교육과정	주요 내용	대상
재정시스템 오리엔테이션	• 국가재정의 기초지식 및 재정시스템의 이해	e나라도움, dBrain+ 교육생
국고보조금 제도의 이해	• 국고보조금 개념 및 운용 • 국고보조금 시스템의 이해	지자체 공무원 등
국가재정의 이해	• 국가재정의 개념 및 운영체계 • 재정시스템의 이해	대학교 학부생·대학원생 및 고3 대상
우리마을 만들기 (보드게임·교재)	• 보드게임 및 교육교재를 이용한 초중고 대상의 국가재정 교육 실시 • “어린이를 위한 나라살림” 및 “청소년을 위한 나라살림” 교재 개발	초·중학생 대상
어린이 청소년 나라살림 교실 (교육교재)		

[그림 2-11] 한국재정정보원 “우리마을 만들기” 보드게임 자료화면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유투브 계정.

3) 공공기관 재정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재정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의 재정실무 교육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공무원 외의 대(對)국민 재정교육을 수행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교육의 경우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 역량을 늘리기 위한 교육(=주민예산참여제도 교육) 외에는 납세 관련 실무교육이나 조세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대국민 재정교육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납세의욕 고취를 위한 조세교육을 공교육에 편입시키자는 주장을 비롯하여 보다 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8] 최근 발간된 OECD(2021) 보고서도 유년기부터 조세교육을 받으면 조기에 확고한 납세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력 및 참여의식을 강화하는 취지의 대국민 재정교육의 필요성 관련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표 2-18〉 공공기관 재정 실무교육 현황 (2024년 10월 기준)

주관 /교육명	대상 및 과정		교육 기간	교육 방법	과정·과목
기획재정부 /e재정배움	재정교육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3월~11월	사이버 및 집합교육	76개 과목 (사이버 24개, 집합 52개)
	결산교육	일선관서 대상	10월~12월	집체교육 (전국 주요시도별 12개 권역)	5개 과목 (수입·채권·지출·국유재산·재무결산)
		중앙관서 대상	11~12월	집체 및 전산 실습교육	7개 과목 (회계·기금·총사업비 등 결산교육)
	[근거] 국가재정법 제101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국가회계교육	중앙부처, 지자체, 정부산하기관의 실무자 또는 희망자		연중 희망일자	맞춤형 교육	국가회계이론 및 실무 재정결산 실무 등
	[근거] 국가회계법 제27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5급 승진 관리자 과정		2월~12월	집합교육	글로벌/인문/직무/기타 분야 (국가재정 운영)
	7급/9급/경채 신규자 과정		직급별로 약 2개월	온라인 및 집합교육	직무·전문성 분야 (국가재정·예산, dBrain+, e나라도움)
	나라배움터 정규과정		연중 상시	온라인 교육	직무공통 과정 (회계제도의 이해 등)
	[근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3 (인재개발정보시스템의 운영)				

8) 권오현·마정화(2024) 참고.

주관 /교육명	대상 및 과정	교육 기간	교육 방법	과정·과목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5급승진리더과정	1월~12월	집합교육	직무필수 (지방재정)
	중앙·지방4급 이하 공무원	4월	집합교육	직무공통 (행정에 필요한 예산·회계)
	임용 3년 이내 지방세무직렬 실무자	7월	집합교육	직무전문 (지방세무실무 역량강화)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실무자	2월	집합교육	전문교육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실무)
	지방의회 의원	8월	집합교육	지방의원 기본과정
		2~3월 7~8월	집합교육	지방의원 예산심사 심화과정
		4~5월 9~10월	집합교육	지방의원 추경·결산심사 심화과정
	지자체 공무원 등	연중 상시	사이버교육	지방재정 및 회계 실무
지방재정 공제회	회계·계약·예결산 관계 지자체 공무원	1월~11월	집합교육	회계, 결산 등 4기 과정
		2~11월	온라인 교육	예산지출, 재무회계, 지방계약 등 6개 과정

〈표 2-19〉 공공기관 대국민 재정교육 현황 (2024년 10월 기준)

교육명	주관	주요 교육내용	대상
주민참여예산제및 예산학교	각 지방차지단체	• 참여예산제도 및 지방재정 예산제도 소개 • 지자체 예산현황 및 주요 정책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참여예산 제안서 작성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주민 및 청소년
납세자 세법교실	국세공무원 교육원	• 법인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실무 • 세무조사의 이해 및 실무	일반 국민
어린이 국세청	국세청	• 세금교육 동영상 • 세금 학습만화 및 게임 • 초중고등학교 대상 방문 세금교육	어린이 대상
함께하는 세심교실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 세금교실 체험교육 •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주요 세금교육	초등학생 대상 (추후 확대 예정)
대국민 재정교육	한국재정정보원	• 재정시스템 오리엔테이션 교육	e나라도움, dBrain+ 교육생
		• 국고보조금 제도의 이해	지자체 공무원 등
		• “국가재정의 이해” 특강	고3·대학생·대학원생
		• “우리마을 만들기” 보드게임 및 “어린이 청소년 재정배움” 교재	초·중등학생

2 해외 재정교육 현황

가.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 재정교육 현황

1) 미국의 조세·재정 교육

미국은 주별·교육구별로 다양한 공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1960년대 이후에 경제교육이 강화되면서 중학교 단계 이후에는 사회계열(social studies) 교과목에서 역사, 지리, 시민권(citizenship), 경제의 4강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었다(김진영·송성민, 2021). 한편 미국 최대 경제·금융 교육 민간단체인 경제교육협의회(CEE; Committe for Economic Education)[9]는 경제교육에서 학년 단계별로 성취해야 할 교육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10년에 제시했다.[10]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는 조세 및 재정지출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CEE가 제시한 경제교육 가이드라인의 20개 대주제 중에서 "인센티브," "정부의 역할과 시장실패," "정부실패," "경기변동," "재정 및 통화정책" 등이 조세·재정 교육과 관련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조세와 보조금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과 시장실패"에서는 본격적으로 재정의 의의와 역할이 등장한다. 해당 주제의 초등학교 4학년(grade 4) 수준에서는 공공재의 기초개념과 정부 재원조달 수단으로 세금과 정부 차입이 있음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중학교 2학년(grade 8) 수준에서는 공공재의 특성, 세금과 정부지출의 종류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공공재, 외부성, 시장실패, 조세제도와 보조금, 독점, 재산권 제도, 소득분배 등 후생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까지 가르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실패" 주제에서는 정부개입이 도덕적 해이 등의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에 대해 유의하도록 서술하고 있다. "경기변동" 파트에서는 GDP의 구성요소에 정부지출이 포함되어 있음을 가르치도록 하며, "재정 및 통화정책"에서는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적 맥락에서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르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

9)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EE)는 1949년에 설립된 미국의 유아부터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제·금융 교육에 주력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10) 공식 명칭은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

〈표 2-20〉 미국 CEE의 경제학 교육 가이드라인 – 16장 “정부의 역할 및 시장실패”

학년	학습목표	학습응용 방안
Grade 4	1. 정부는 시장 경제에서 특정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학교, 경찰 보호, 도로, 공원 등)의 목록을 브레인스토밍하고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가 어떻게 지불되는지 설명합니다.
	2. 정부가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세금이나 차입을 통해 비용을 지불한다.	2. 다음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공립학교를 짓고자 합니다. 보통 누가 이 학교에 비용을 지불하며 어떻게 돈을 마련하나요?
Grade 8	1. 공공재와 서비스는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사용료를 지불한 사람으로만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1. 세금이 국방을 위해 사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민간 부문에서 국방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2. 재화나 서비스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원천 징수할 수 없다면, 생산자는 이를 판매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생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한다.	2.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국가, 주, 지방정부에 과세 권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까요?
	3. 대부분의 연방정부 세수는 개인 소득세와 급여세에서 나온다. 사회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급, 국방 및 국토 안보 비용, 메디케어와 같은 의료 지출,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연방 정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3. 미국 연방 예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방 세입의 주요 범주와 연방 지출의 주요 범주를 나타내는 두 개의 원형 차트를 작성합니다.
	4. 대부분의 주 및 지방정부 수입은 판매세, 연방 정부 보조금, 개인 소득세, 재산세에서 나온다. 주 및 지방정부 수입의 대부분은 교육, 공공복지(병원 및 보건 포함), 도로 건설 및 수리, 공공 안전에 사용된다.	4.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 및 지방 세입원과 다양한 범주의 주 및 지방 지출을 미국 연방 정부의 세입원과 비교합니다.
Grade 12	1. 다음과 같은 경우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는다: (1)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시행되지 않는 경우, (2) 제품의 생산 또는 소비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3) 시장이 경쟁적이지 않은 경우.	1. 우리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세 가지 이상 밝히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세요.
	2. 경제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재산권을 정의하고, 확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재산권에는 타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권리와 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 사과 과수원 주인이 사과 도난을 금지할 수 없다면 사과 과수원의 가치는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세요.

학년	학습목표	학습응용 방안
Grade 12	3. 외부효과는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비용이나 혜택의 일부가 제품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때 존재한다.	3. 오염, 예방 접종 및 의학 연구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추천하세요.
	4. 가격이 제품의 모든 이점을 반영하지 못하면 제품이 너무 적게 생산되고 소비된다. 가격이 제품의 모든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면 너무 많은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된다. 정부는 보조금을 사용하여 부족한 생산량을 보정하고, 세금을 사용하여 과도한 생산량을 보정하거나, 직접 생산량을 규제하여 제품의 과잉 또는 과소 생산 및 소비를 보정할 수 있다.	4. 주 및 지방정부가 초등학교 교육에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이유와 담배와 휘발유에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일부 공해 기업에 세금 및/또는 규제가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5.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효과적인 경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반독점법 및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과 규정이 의도하지 않은 경쟁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5. 연방거래위원회가 가장 가까운 경쟁업체가 한 대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와 합병이 허용될 경우 소비자, 생산자 및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세요.
	6. 한 생산자가 두 명 이상의 생산자가 있을 때보다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서 총 생산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경쟁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경쟁이 없는 경우 정부 규제를 통해 가격, 생산량, 품질을 통제하거나 정부가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6. 일반적으로 지역 상하수도 공급업체, 천연가스 공급업체 또는 전기 서비스가 한 곳만 있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7. 정부 법률은 시장이 작동하는 규칙과 제도를 정합니다. 여기에는 재산권, 단체 교섭 규칙, 차별에 관한 법률, 결혼 및 가족 생활을 규제하는 법률 등이 포함된다.	7. 1964년 민권법이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세요.
	8. 개인이나 이익 집단이 시장의 소득 분배에 만족하지 못할 때 정부는 종종 직접 소득을 재분배하고, 정부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나 생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부 조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기도 한다.	8.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정부가 이를 제공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경제에서 어떤 집단이 혜택을 받고 어떤 집단이 비용을 부담하는지 결정하세요.
	9. 세금 구조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9. 다음 상황을 분석합니다: 정부가 1,000억 달러의 세입을 조달해야 합니다. 판매세 또는 누진 소득세를 통해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각 세금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10.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민간 시장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모든 개인이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동일한 혜택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10. 공교육의 비용과 혜택에 대해 토론하고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파악합니다.

자료: CEE(2010).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 2nd Edtion.*

이 외에도 CEE는 개인·가계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표준적 금융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CEE, 2013). 개인·가계의 합리적인 재무생활을 돕기 위한 해당 교육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는 소득, 소비생활, 저축, 신용, 금융투자, 보험 등이 있다. 금융교육 가이드라인에서도 사회보장세와 세금에 대한 내용이 다수 등장하는데 세금과 사회보장세 및 사회적 급여가 개인 금융생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CEE가 제시하는 금융교육 가이드라인은 경제교육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학년 수준별 교육목표 및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4학년 수준에서는 모든 소득에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과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가르치도록 권하고 있다. 8학년 수준에서는 저소득 시민이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은퇴한 시민들의 연금과 사회보장지출을 위해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으로부터 사회보장세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도록 권하고 있다. 12학년 수준에서부터 개인이 납부한 세금과 사회보장세를 재원 삼아 제공하는 정부의 공공재 공급과 공공서비스 등의 혜택과 더불어 다양한 세목을 가르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기서 거론되는 주요 세목으로는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및 각종 지방세와 사회보장세가 있다. 소득의 종류와 크기 및 지출의 크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도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고 있다(김진영·송성민, 2021).

〈표 2-21〉 CEE의 금융 교육 가이드라인 – 조세·재정 관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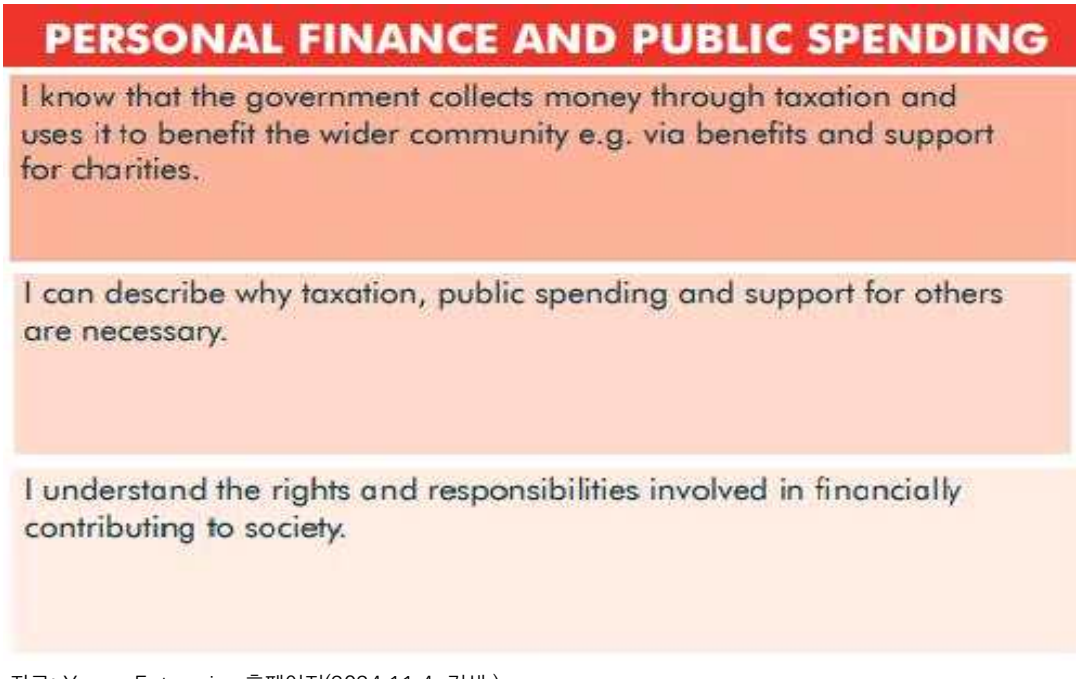
주요 목차	주요 내용
소득 활동 (Earning Income)	• (Grade4) 대부분의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하며, 세금수입은 공공재 및 서비스에 지출된다. • (Grade8) 정부는 은퇴, 장애, 기초생활에 대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Grade12) 세금은 연방·주·지역정부에 지급되며 세금의 종류에는 소득세, 사회보장세, 재산세, 판매세 등이 있다.
용역과 재화의 구매 (Buying Goods and Services)	• (Grade8) 가계의 지출항목으로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저축 (Saving)	• (Grade4) 소득은 상품·서비스에 지출되거나, 저축되거나, 세금 납부에 사용된다.
금융투자 (Financial Investing)	• (Grade12) 투자의 종류에 따라 연방·주·지역정부의 투자세율이 다르며 이에 따라 투자의 세후 수익률이 달라진다.

자료: CEE(2013). *National Standards for Financial Literacy*.

2) 영국의 조세·재정교육

영국은 2013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 조세교육을 별도의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게 되었지만, 중등교육 단계인 Key Stage(이하 KS) 4의 시민권(Citizenship) 과목의 경제학 영역에서 조세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김진영·송성민, 2021). 시민권 과목의 학습 요강에 따르면 KS 4에서부터 다양한 공동체, 지역, 국가경제의 참여자와 적극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루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KS 4의 금융교육에서 정부재정이 어떻게 조성되고 지출되는지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 금융교육과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자선단체인 Young Enterprise and Young Money[11]의 금융교육 수업안에는 조세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단체에서 제시한 11세-19세 학습 프레임워크에는 "개인금융과 공공 지출"이라는 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세납부를 둘러싼 권리와 의무 그리고 조세가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그림 2-12] Young Enterprise and Young Money: 11~19세 학습 프레임워크 中



자료: Young Enterprise 홈페이지(2024.11.4. 검색.)

11) 전신은 PFEG(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로서 2014년에 새로운 기구인 Young Enterprise and Young Money로 개편되었다.

3) 독일의 조세·재정 교육

독일 중등학교의 인문계열 수업 교과목은 사회, 역사, 지리, 종교/윤리, 독일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세·재정 관련 일반적인 내용은 사회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16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김나지움 중등 1단계 경제/진로 과목을 개설한 바 있는데 직업체험, 세금 및 사회보장세 계산 등 실용적 경제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정수정, 2018). 독일 공교육 현장에서 수행되는 또 다른 재정교육 활동 사례로는 독일 재무부가 주관하는 조세·재정 교육이 있다. 독일 연방 재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과 교사를 위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재는 교사들에게 익숙한 형식·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학교 커리큘럼에 맞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자료는 각각 교사용(Lehrerheft)과 학생용(Schülerheft)으로 나뉘며, 두 버전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학생용 자료에는 보다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교사용에 비해 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진영·송성민, 2021). 이러한 조세교육 내용에는 금융정책, 조세제도, 연방예산의 기본 지식, 유럽 경제통합과 유로화,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금융시장 국제화와 탈세 문제 등이 있다. 이 교육자료는 여타 정치, 경제, 사회과목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직업학교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독일 재무부가 배포한 조세·재정 교육자료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들 대상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4%가 교재에 매우 만족했으며 85%가 실제 수업에서 교재를 활용했다고 답했다(OECD, 2021).

〈표 2-22〉 재정과 세금(FINANZEN & STEUERN) 학생용 교재 목차

주요 목차	주요 내용
제1장: 세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 세금과 정치 / 세금 제도 • 조세 정의
제2장: 정부 수입과 재정 계획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연방 예산 • 연방 및 주 재정
제3장: 정부는 세금으로 무엇을 할까요?	• 사회 정책 / 가족 정책 • 미래와 연금 / 환경 정책
제4장: 국경을 넘어 – 국제 재정 정책과 유럽 통화 연합 그리고 세계화	• 국제 협력 • 유럽 재정 정책 • 현재의 과제

자료: jugend-und-bildung 홈페이지 검색(2024.11.4.)

4) 일본의 조세·재정교육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Mine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하며 이는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2017년에는 이른바 '신학습지도요령'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중학교 사회 과목은 지리, 역사, 공민의 세 분야로 나뉘며, 이 중 공민 과목에서는 사회, 경제, 정치, 국제사회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 사회 속 사회보장제도의 역할과 재정 및 조세의 역할이 다뤄진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사회보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세와 재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국민의 납세의무와 재정의 역할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금의 사용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고등학교에서는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 과목에서 조세교육이 이루어진다. 특히 현대사회 과목은 '공공(公共)'이라는 새로운 교과목으로 개편되었으며 이 과목에서는 저출산·고령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과 조세의 역할을 심도 있게 학습한다. 학생들은 사회보장 제도와 재정 문제를 실제 사례를 통해 토론하며 재정 지원의 필요성과 조세의 역할을 분석하도록 권장된다. 정치·경제 과목에서는 조세·재정의 구조 및 기능을 배우며, 정부의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역할 분담을 학습하며, 국민이 공정하고 적절한 조세 부담을 통해 필요한 정부 수입을 확보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표 2-23〉 일본문부과학성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 공민편 中

구 분	내 용
「고령 사회에 있어서 재정의 존재 방식」을 주제로 질문을 설정한 학습	일본의 재정 적자의 현상과 미래 예측을 전하고 있는 신문 기사와 저출산 고령화 진행과 그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사용자 감소가 진행되는 민간 버스 회사의 A 시내를 달리는 빨간색 적자노선의 존폐에 대해 전하고 있는 A시의 홍보지를 읽고, 문제를 파악하며, 「**재정 적자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고령자나 통학하는 고교생이 이용하는 민간의 적자 버스 노선을 존속시키기기 위해 공적 자금을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설정한다. 각 학생은 경제 활동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 재정 및 조세의 의의, 재정의 현상 등 중학교까지 습득한 지식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 질문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나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망을 제시한다.

자료: 일본문부과학성 홈페이지 검색(2024.11.4.)

5) 해외 청소년 재정교육의 시사점

OECD(2021)가 지적했듯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조세·재정 교육은 이를 청소년 대상 공교육 과정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모든 미래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개발도상국도 납세 관련 시민의식 고취 차원에서 교과과정 상의 조세·재정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Ibid., 42p).

앞서 살펴본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이들은 조세·재정교육을 시민교육의 일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다. 영국·일본의 경우 조세·재정 관련 교육 콘텐츠를 citizenship 혹은 공민(公民) 과목의 일부로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세금과 정부지출의 공적 기능을 교과과정 상에서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최근 금융교육의 비중이 강화되는 추세와 발맞춰 개인의 경제생활에서 세금과 사회보장제도가 차지하는 역할 및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조세 및 사회보장세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미국 CEE(2013)의 금융교육 가이드라인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제/진로 교육에서 회사 운영 시 세금 및 사회부담금을 계산하는 실습교육 사례가 이를 예증한다.

한편 정규 교과목 외의 영역에서 조세·재정 교육을 실시하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재정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재정당국이 교사와 학생에게 온라인상에서 배포하는 독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OECD(2021)는 조세·재정 관련 글쓰기 경연대회, 온라인 교육, 공무원들의 특강교육, 교사 훈련 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표 2-24〉 주요 해외 개발도상국 청소년 조세·재정 교육 실적

주요 실적
• 콜롬비아: 94개 학교 참여 • 과테말라: 오프라인 수업에 학생 1,750명 참여 / 온라인 수업에는 연간 약 10,000명 참여 • 코트디부아르: 연간 460만명 학생 참여 • 모리셔스: 연간 학생 30,000명 참여 • 페루: 2018년 기준 학생 45,195명 / 교사 1,263명 / 365개 학교 / 자원활동가 500명 참여 • 루마니아: 2018년 기준 학생 2,000명 이상 참여 •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7~18년 기준 학생 및 교사 65,000여 명 참여 • 튀르키예: 연간 학생 500만명 참여 • 잠비아: 연간 학생 25,900명 참여

자료: OECD(2021), 42p.

나. 공교육 외의 조세·재정교육

1) 다양한 형태의 재정교육

교육의 대상을 청소년 외의 일반인 및 사업체로 넓혀서 보면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조세·재정교육을 구상할 수 있다. OECD(2021)에 따르면 직접교육(teaching) 형태 외에도 대국민 캠페인 등의 인식 제고(awareness raising) 활동, 실무지원(practical assistance)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교육이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12)]

〈표 2-25〉 주요국의 조세·재정교육 유형 및 현황

단위: 개수

구 분	직접교육			인식 제고 캠페인			실무지원	
	청소년	사업체	일반인	캠페인	관계형성	맞춤형 소통	서비스 툴	직접지원
OECD 國(28)	18	3	3	9	5	4	5	6
非OECD 國(31)	25	11	4	17	14	4	9	10
합계(59)	43	14	7	26	19	8	14	16

주: 59개 OECD 및 비OECD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국가별로 중복되는 유형에 해당되는 교육사례 존재할 수 있음.
자료: OECD(2021), 24p.

청중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직접교육을 살펴볼 경우 교육대상에 따라 청소년, 사업체, 일반인 대상의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청소년 대상의 교육은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재정특강, 각종 경연대회(contest), 재정업무 관련 직업체험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사업체 대상 재정교육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및 각종 재정적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이뤄질 수 있다. 여기서도 다양한 교육형태를 고려할 수 있는데 특정 조세·재정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통하는 워크샵(workshop),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웹 세미나(webinar), 재정당국과 납세자 간 의견교환이 이뤄지는 정책 간담회(dialouge) 등도 넓은 의미에서 사업체 대상 재정교육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 대상 교육은 재정지원사업 및 세무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대상의 교육 및 납세자 권리증진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교육의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13)] 이러한 청중 대상의 재정교육을 확산시키기

12) OECD(2021)는 협의의 조세교육에 한정해서 이들 교육의 유형을 논하지만 같은 유형의 구분을 광의의 재정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3) 우리나라의 경우 납세자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납세자 권리 찾기 목적의 교육이 여기에 해당된다.

위해서는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아르헨티나 재무당국(Administracion Federal de Ingresos Publicos; AFIP)의 주축 아래 지역정부, 교육당국, 대학이 협력하여 실시한 아르헨티나 학교 교사 대상의 조세·재정교육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그림 2-13] 아르헨티나 AFIP의 학교 교사 대상의 재정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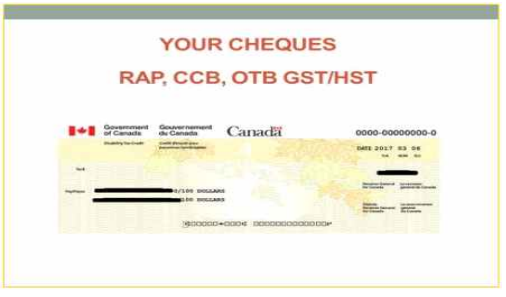
자료: OECD(2021).

조세·재정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도 광의의 재정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조세·재정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광고 활동', 조세·재정 당국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 등의 '인식개선 사업', 타겟 집단과의 주민간담회 등 '맞춤형 소통 활동'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광고 활동'은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납세자와 재정지원 사업 수혜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납부된 조세를 통해 이뤄지는 재정사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혜택에 대한 홍보 활동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조세·재정 '인식개선 사업'으로는 TV 쇼의 조세·재정 콘텐츠 출연, 조세의 날 지정 및 관련 행사 개최[14], 게임 등 멀티미디어 교육수단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소통활동'에서는 행·재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된 지역 및 인구사회 계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납세방법이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도 교육적인 효과를 가진다. 난민·이민자 등 취약집단에게 캐나다의 조세·보조금·

14) 우리나라의 경우 3월 3이 납세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성실 납세자 포상 등의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자 노력하는 (Canada Revenue Agency;' CRA)의 민족지학 연구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그림 2-14] 캐나다의 조세·재정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자료: CRA(2019).

세금납부 및 재정사업 지원 신청에 관한 실무적 지원도 재정교육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납세방법 및 관련 세법에 대한 실무적 교육은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실현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15] 뿐만 아니라 공공입찰, 조달, 보조금 등 각종 재정사업의 잠재적 수혜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도 실무지원 교육에 포함된다. 최근 공공조달(나라장터), 국고보조금(e나라도움) 등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도 재정사업에 대한 참가 신청을 온라인상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러한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대한 사용지원도 넓은 의미에서의 사용자 재정교육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대학에서의 재정교육 (Allen, 2013)

Allen(2013)은 미국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규모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데 있어서 재정(회계)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다.[16] 그는 과도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불공평을 낳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17]들을 열거한 뒤 회계·경영학을 배우는 학생과 대중을 상대로 이에 대한 논의에 참여시킬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 이유는

15) 우리나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이 납세자들을 위한 실무지원 교육에 해당된다.
16) 여기서 Allen(2013)은 회계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교육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펼쳤으나, 그의 논의는 회계교육의 범위를 넘어 광의의 재정교육에도 적용 가능하다.
17) 이와 관련해서 Bowles & Simpson (2010)에 따르면 재량적 지출 감축, 세제개혁, 의료보험 비용 조정, 강제저축, 사회보장제도 개혁, 예산편성 과정 변화 등의 대안이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재정에 대한 지식을 갖춘 국민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Ibid). 이와 관련하여 그는 경영전문대학원(MBA) 코스 등에서 수행한 대학에서의 교육경험을 살려 재정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 연방정부의 지출 및 정부부채와 관련된 문제점을 교육한다.
- 객관적/비당파적인 태도로 재정현안을 다룬다.
- 학생들이 정부 선출직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재정에 관한 지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런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Allen(2013)은 구체적인 재정현안에 대한 비판적 이해력 및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두 가지 대중교육 접근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독서 기반 토론 및 에세이 수업'이다. 이는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등 최근의 국가 재정지표 현황에 관한 자료를 읽게 한 뒤 해당 지표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토의 및 에세이 작성을 유도하여 재정현안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사례 기반 접근방법'이다. 이는 과거 실제 재정위기 사례를 다루며 이것이 현재 미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의 수업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저자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재무건전성에 대한 유비를 통해 정부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가르치는 방식이 경영·회계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표 2-26〉 재정현안에 대한 대학 교육 접근법 예시

재정현안 자료 독서 후 토론/에세이 주제	사례 기반 접근법의 주제
• 전년도의 재정적자/부채 규모는 얼마인가? • 정부지출 및 정부부채 증가세의 가장 큰 동인은 무엇인가? •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얼마이며, 왜 이러한 수치가 중요한가? 앞으로의 전망은? •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부채의 차이는 무엇인가? • 미국 정부의 재정적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변화는 무엇이 있는가? • 지출감축과 증세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 어떤 예산편성 과정의 변화가 미래 지출통제에 도움이 되겠는가?	• 과거 그리스 재정위기 등 실제 국가들이 겪은 위기를 극복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과거 재정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중은 지출감축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 과거 재정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지출감축이 GDP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과거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 등의 국가와 미국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가?

자료: Allen(2013).

3) 멀티미디어 재정교육

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재정교육

유럽국가들의 재정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호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정부 간 조직인 IOTA(Intra-European Organisation of Tax Administrations)는 일찍부터 조세·재정교육이 조세·재정 정책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기관이 2008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당국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세·재정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매력적인(attractive) 교육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레이아웃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IOTA(2008)가 유럽 각국 재정당국의 청소년 재정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조세·재정교육 프로그램의 매체(media)로서 전통적인 대면교육 외에도 워크북, 팜플렛, 만화, 게임, 영화, 동영상,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수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각 재정당국이 응답한 '가장 효과적인(most successful)' 조세·재정교육 매체

주요 매체	응답 국가
재정 관련 영화	벨기에
교사 가이드 및 워크북	덴마크
인터넷 자료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영국
DVD, CD, PPT 슬라이드 및 웹사이트	이탈리아, 영국
Adds-on 및 PPT 프레젠테이션	노르웨이
만화 및 게임	포르투갈
대면접촉 교육	루마니아
게임 및 역할극	폴란드
단행본 및 팜플렛	우크라이나

자료: IOTA(2008).

특히 조세·재정교육 수단을 선택할 때 IOTA는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교육대상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법을, 흥미를 끌만한 새롭고 혁신적인 미디어를, 다양한 매체 및 교육수단의 조합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여러 재정당국은 유투브·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청소년 및 일반인들을 조세·재정교육 콘텐츠로 유

인하고 있다. 일례로 노르웨이의 조세당국의 유투브 비디오 “Money Back on the Skætt[18]”에서 가상의 캐릭터들이 세금에 대한 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15] 노르웨이 국세청 유투브 영상: “Money Back on the Skætt”

자료: Skætteetaten 유투브 채널 (2024.11.7. 검색)

② 브루킹스 연구소 허치슨 센터의 ‘The Fiscal Ship’ 게임

브루킹스 연구소[19]의 허치슨센터(재정·통화정책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The Fiscal Ship”은 인터넷상에 공개된 조세·재정 교육 게임이다. 해당 게임은 플레이어의 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 국가적 정책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플레이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을 적절히 운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게임 참가자가 기후위기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청정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는 동시에 탄소세 부과 등 그에 걸맞는 재원 확보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게임은 이러한 연속적인 의사결정 과정들을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상징하는 ‘화물’을 실은 배를 운행하는 상황에 빗대고 있다. 궁극적으로 게이머는 과적(過積)으로 인해 자신이 모는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방지하면서 자신이 세운 목적지로 배가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iscal Ship 게임은 이러한 상황묘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재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독려하면서도 스스로 세운 국정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가진 중요성을 체득하도록 한다. 그런 의미에서 Fiscal Ship 게임은 재정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재정에 대한 납세자의 참여의식 및 책임의식을 기르는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18) 노르웨이어로 국세청(Skætteetaten)의 약어이다.
19) 브루킹스 연구소는 1916년 미국의 기업가인 로버트 브루킹스가 설립한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에는 미국 민주당 인사들이 주로 참여해 정책을 연구, 발표하고 있다. (국문 위키피디아, 2024.11.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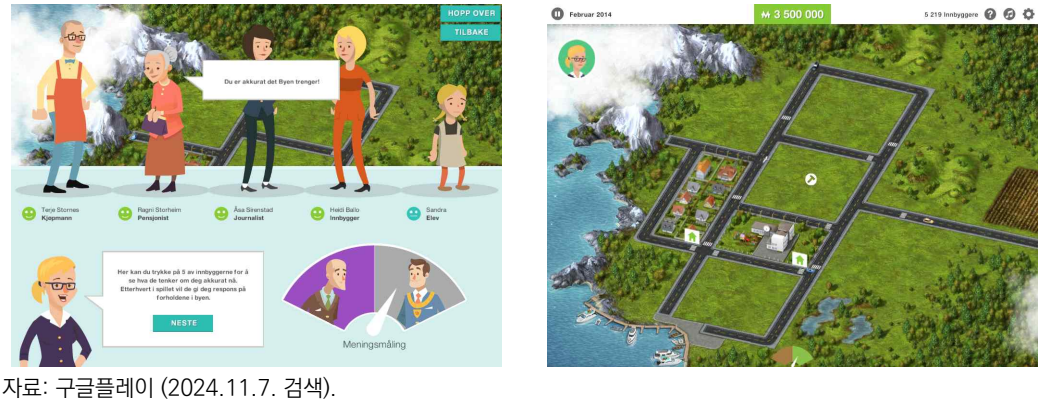
[그림 2-16] 브루킹스 연구소 허치슨센터의 “Fiscal Ship” 게임

자료: 브루킹스 연구소 허치슨센터 홈페이지 (2024.11.7. 검색)

③ 노르웨이의 ‘Spleiselaget: Byen’ 게임

노르웨이 국세청(Skætteetaten)은 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게임 개발을 지원하여 세금이 개인과 사회 전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가르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발된 Spleiselaget: Byen(도시 운영하기)라는 게임은 세금을 통해 조성된 공공자금을 관리하며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모바일 앱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한 해당 게임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상황을 묘사하며 이들의 지지를 얻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을 승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은 단순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커리큘럼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교사가 수업시간에 가르친 조세·재정에 관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림 2-17] 노르웨이 Spleiselaget: Byen 게임



자료: 구글플레이 (2024.11.7. 검색).

4) 해외의 다양한 재정교육이 주는 시사점

앞서 보았듯 재정교육은 기존 공교육 및 정부 캠페인의 방식 외에도 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실천될 수 있다. 또한 재정교육을 보다 넓은 의미의 대국민 교육으로 간주한다면 청소년 외에도 대학생, 일반인, 교사,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의 재정교육 상당수는 공교육 교과과정 바깥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정당국이 주도하여 인터넷 자료, 유투브 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역할극 등 다양한 교육수단 및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앞서 본 노르웨이 세무당국은 청소년 조세·재정교육을 위한 웹페이지[20]를 개설하여 온라인 강의자료, 청소년을 위한 세무지식, FAQ, 재정게임 등을 업로드하고 있다. 이처럼 각 재정당국은 조세·재정현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매체 및 교육수단의 조합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재정교육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교육은 기존 수업 방식의 강의, 공익광고 등 일방향 소통방식에 의존할 필요는 없으며 양방향 소통을 촉진시키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IOTA(2008)는 역할극, 퀴즈, 게임, 세금 박물관 방문 등의 체험형 교육으로 재정교육 콘텐츠에 대한 흥미를 제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두 번째, 재정당국이 실시하는 재정교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를 보다 더 과감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 힙합 장르를 차용해서 세금에 대한 친숙함을 이끌어 내는 유투브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도시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의 형식을 빌려 재정교육 콘텐츠를 확산시킨 노르웨이 재정당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재정교육의 목표를 납세의식의 고취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대한 공적인 권리와 책임을 상기시키는 데 둔 사례를 볼 수 있다. 허치슨 센터의 'Fiscal Ship' 게임의 경우 시민 스스로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과 재원조달의 방법에 대해 고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의 'Spleiselaget: Byen' 게임은 플레이어가 세금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선거를 통해 재선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원칙을 민주주의의 원리 아래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

20) 사이트 주소: www.spleiselaget.no (2024.11.8. 검색)

Ⅲ 재정이해력 및 재정교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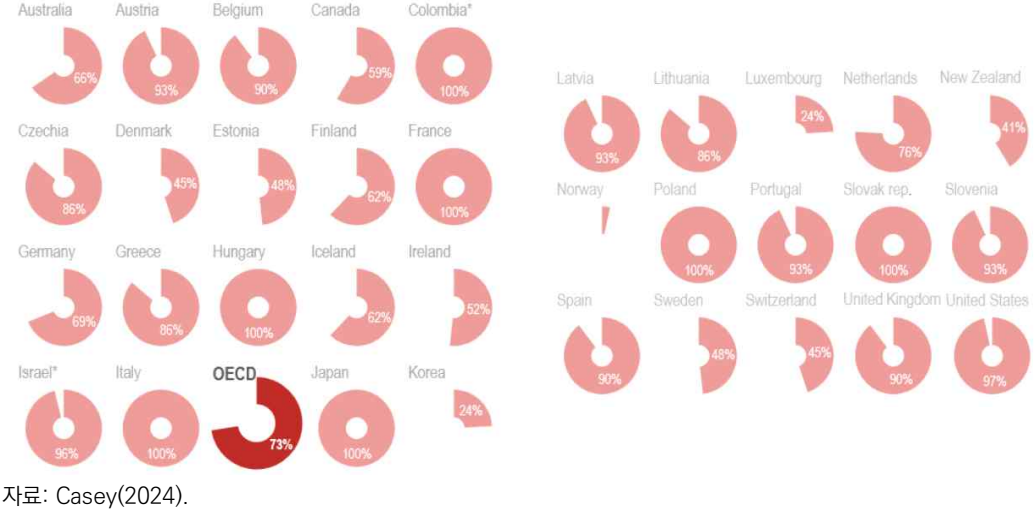
1 재정이해력 향상의 필요성

가. 지속가능한 재정과 재정이해력

1) 재정이해력 향상 노력의 배경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로 OECD 국가들의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코로나19 이전에도 다수의 OECD 국가들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팬데믹 위기 이후 그 동안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 외에도 각국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국가안보 등 장기적인 국가과제 대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이 맞물려 각국에서 지출 구조조정, 세제개혁 등 국가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림 3-1] OECD 국가의 적자재정 편성 회계연도 비율 (1995-2023)



자료: Casey(2024).

한편 재정개혁을 위한 조치들은 정치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이에 기반해 시의적절한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재정이해력(fiscal literacy) 증진의 필요성에 주목하는 시각이 최근 확산되기 시작했다(Casey, 2024).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이해력이란 경제·금융이해력을 거시적 레벨로 확장시킨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Ibid). 경제·금융이해력이 가계의 장기적인 효용 극대화를 위해 건전한 재무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재정이해력 역시 여러 세대에 걸친 장기적인 공공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재정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을 의미한다(Ibid). 이러한 재정이해력은 단기적인 시야를 넘어 재정부담의 장기적인 비용 및 결과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 3-1〉 재정이해력의 정의 및 기대효과

재정이해력이란?
• (정의) 정부재정에 관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능력 • (세부내용) 정부가 어떻게 공공자금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해력 – 지출과 조세에 대한 결정이 정부부채와 국민경제에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력을 의미한다 • (기대효과) 재정이해력을 갖춘 국민 혹은 정책당국자는 예산상의 중요한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 재정이해력을 갖춘 국민 혹은 정책당국자는 정부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부재정에 대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자료: Casey(2024, 5p).

2) 재정이해력 향상을 위한 정치적 노력

Casey(2024)는 재정 담당자들에게 예산의 기술적 사항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압각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재정담당자와 국민이 중장기적인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소통할 필요가 있다. 재정이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요성을 이해해야 하며, 향후 공공재정이 직면한 도전(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증가하는 연금 및 의료보험 비용, 기후변화에 대응에 필요한 비용 등)

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높은 재정이해력을 갖춘 경우 재정당국은 재정개혁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반대로 재정이해력을 갖추지 않은 정책당국자와 일반국민은 재정과 관련된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재정적 리스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위험이 있다.

〈표 3-2〉 정책결정자 및 입법부를 위한 재정이해력 제고 프로그램

국가	기관	주요 활동
스페인	AIReF (Independent Agency for Fiscal Responsibility)	• 초당적인 공공 재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당 워크샵 개최
아일랜드	IAC (Irish Advisory Council)	• “공공재정의 길(path for public finance)” 연례행사 개최
슬로베니아	SFC (Slovenian Fiscal Council)	• EU ‘성장과 안정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실행하기 위한 비정기 워크샵 개최
멕시코	CEFP (Centro de Estudios de las Finanzas Públicas)	• 선출직 공무원의 예산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 – 30~45일 이내 의회 구성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보고서 작성 •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 개념 시리즈” 책자 발간 – 주요 경제적 개념, 재정용어 및 예산분류 등에 대한 소개
호주	의회 예산처 (Parlimentary Budget Office)	• 정책에 대한 비용분석 서비스 제공 – 의원들과의 정책 논의 촉진
스코틀랜드	의회의 FSU (Financial Scrutiny Unit)	• 새 임기에 맞춘 예산업무 입문 프로그램 제공 – 국가재정의 주요원리와 주요 정책분야 소개 • 국가재정에 대한 정기 브리핑 – (조찬 세미나) 저명연사 초청강연, 재정 보고서 브리핑 등 – (개별 브리핑) 의원 멤버들의 현안 질의에 대한 브리핑 • 연례 사업계획의 날 개최 – 정책입안자들이 주요 재정과제와 원칙을 살펴볼 기회 제공 • 비디오 설명자료, 데이터 시각화, 온라인 분석 툴 제공
미국	하원 현대화 위원회 (US House Modernization Committee)	• 신규 의원을 위한 재정입문 프로그램 제공 •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재정 데이터, 재정분석, 교육자료 제공
	의회 연구 서비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예산, 세제, 경제정책 등의 심층분석 보고서 제공 • 의회 위원회 및 개별 의원을 위한 맞춤형 연구 제공

자료: Casey(2024). 저자 재작성.

이에 따라 최근 국제사회는 일반국민과 정책당국의 재정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의 AIReF(Independent Agency for Fiscal Responsibility)는 모든 정당을 초청한 연례 재정현안 워크샵을 개최한다. 아일랜드의 IAC(Irish Advisory

Council)는 “공공재정의 길”이라는 연례 회의를 개최하여 장기적인 재정 과제들을 논의한다. 슬로베니아의 SFC(Slovenian Fiscal Council)는 EU의 ‘성장과 안정 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비정기적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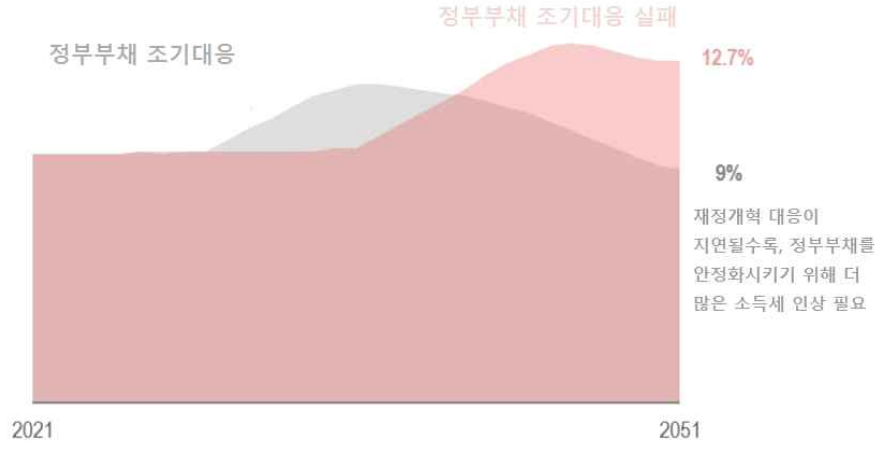
이 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책자료를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나라들이 있다. 멕시코의 CEFP(Centro de Estudios de las Finanzas Públicas)는 재정당국자와 의회를 위한 맞춤형 재정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며 “기본 개념 책자 시리즈(basic concepts information booklet series)”를 발간하여 주요 재정용어 및 회계 분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도 의회 예산처에서 정책 비용 산정 서비스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며 정책논의를 촉진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적 도전(fiscal challenges)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해를 돕는 정책 지원 사례도 존재한다. 스코틀랜드 의회의 FSU(Financial Scrutiny Unit)는 신규 선출직을 위한 재정입문 프로그램, 정기적인 재정브리핑, 연례 사업계획의 날 행사, 디지털 시각화 및 온라인 분석 툴을 제공하여 의원들의 예산심의 활동을 지원한다. 미국 하원의 현대화 위원회(Modernization Committee)는 신규 하원의원에게 국가재정 현황을 소개하는 입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상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재정분석 툴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 의회 연구 기관(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e)은 예산, 세제, 경제정책 등 재정현안과 관련된 비당파적 관점의 보고서를 생산하고 개별 위원회 및 의원의 정책질의를 위한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재정이해력 증진 활동과 관련하여 Casey(2024)는 재정 및 예산과정의 기술적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의 핵심적 측면에 더 집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연금지급 연령,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험 개혁 등 주요 재정적 정책결정이 미래 번영에 미치는 장기적 파급효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정부부채 감축을 위한 행동이 늦어질수록 부채 안정화의 비용은 더욱 커진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당국자들은 정부부채 규모가 클수록 경제충격에 따른 더 큰 부채변동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 재정개혁 시기에 따른 비용 차이

단위: GDP 대비 부채(%)



자료: Casey (2024). 필자가 재작성.

[그림 3-3] 재정부채 규모에 따른 재정 리스크

단위: GDP 대비 부채(%)

자료: Casey (2024). 필자가 재작성.

이러한 재정이해력 증진의 필요성은 비단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책당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의 FSU는 일반대중을 상대로 재정에 대한 교육영상 자료, 재정 데이터 시각화 툴, 온라인 재정분석 툴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의 재정이해력 증진을 위해 숏츠 형식의 영상설명(Burnside, 2023), 재정위기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스토레틸링식 교육(OECD/INFE, 2015), 온라인 웹세미나 교육의 보급(Ibid)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재정이해력에 대한 선행연구

가계 및 개인 단위의 경제·금융이해력에 비해 국가 단위의 재정이해력(fiscal literacy)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희소하다(Cechovsky, 2018; Molnár et al., 2019; Casey, 2024; Karatzimas, 2024). 그러나 최근 들어 이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이해력의 필요성, 재정이해력의 측정 및 증진 방법에 주목하는 연구가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 및 기업의 올바른 신용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듯,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표 3-3〉 재정이해력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방법론	주요 내용
Casey(2024)	OECD 국가별 사례조사	•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무원과 시민의 재정이해력 제고 필요 • OECD 각국은 재정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 중
Cechovsky(2018)	문제중심(problem-centered) 인터뷰 및 문헌연구	• 재정이해력은 협의의 조세에 대한 지식을 넘어 재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를 포함 • 17-18세 오스트리아 고등학생을 조사한 결과 재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을 나타냄
Dubauskas(2016)	문헌연구	• 공공재정 교육은 공공재정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Jordan et al.(2016)	초점 집단 토의(Focus Group Discussion)	• 공공재정 의사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는 정확하고 의미있는 재정 데이터를 통한 시민 교육으로 달성될 수 있음
Karatzimas(2020)	문헌 및 이론연구	• 재정현안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주적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Karatzimas(2023)	문헌 및 이론연구	• 재정 이해력은 스마트 시티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
Karatzimas(2024)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	• 설문 응답자들은 공공재정 교육이 지방 및 주 정부의 재정 상태와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보다 합리적인 선거 결정을 내리며, 공공 문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Molnár et al.(2019)	설문조사 연구	• 공공 재정 이해력에 대한 대중의 자기보고(self-report)는 재정퀴즈 문제에 대한 정답률을 통해 입증됨
Vovchenko et al.(2018)	문헌연구	• 재정 이해력은 예산 시스템, 구조, 분야 및 구성요소에 대한 주요 법규 및 입법 행위에 대한 지식의 조합 • 재정이해력은 예산제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역량을 향상시킴

최근 들어 재정이해력을 기존의 경제·금융·조세 이해력과 구분되는 영역으로 설정하는 연구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Karatzimas(2024)에 따르면 재정이해력(fiscal literacy)은 협의의 조세이해력(tax literacy)과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금

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른 선행연구들도 이와 유사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Cechovsky(2018)는 재정이해력이 세금을 관리하는 개인의 실용적 지식 및 능력뿐만 아니라 더 큰 경제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포괄한다고 지적한다. Vovchenko et al.(2018) 역시 조세이해력과 재정이해력을 광의의 금융이해력과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olnár et al.(2019)는 금융이해력(finance literacy)과 구분되는 재정이해력(public finance literacy)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재정이해력을 "세금 문제와 관련된 기본 용어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공공재정의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지식"으로 폭 넓게 정의한다.

한편 재정이해력에 대한 정책당국과 학계의 주목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므로 아직까지 그 정의에 관한 일반적인 합의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그 개념적 윤곽을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Casey(2024)는 개념적 유비를 통해 '건전한 금융 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금융 복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식,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의 조합(OECD, 2015)'을 의미하는 금융이해력을 거시경제적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재정이해력을 규정한다. 금융이해력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소비수준을 고려한 투자·저축 등의 재무적 결정을 촉진하듯 재정이해력 역시 "징세 및 지출 결정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경제와 공공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가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Casey, 2024)"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이해력을 갖춘 의사결정자는 "여러 세대에 걸친 경제적 복지"를 고려하게 된다(Ibid). Vovchenko et al.(2018)는 국가의 예결산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이해력을 예산제도에 대한 지식과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역량으로 정의한다. 한편 Karatzimas(2020)는 정부회계에 대한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공공부문 회계에 대한 지식(public accounting literacy)으로 재정이해력을 규정했다.

이처럼 재정이해력은 연구자들이 저마다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이해력 개념을 종합적으로 개념화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한 최근의 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echovsky(2018)는 재정이해력이 공공 재정에 대한 기본 지식(납세자와 징세자, 세금 및 예산편성, 세금 징수의 이유), 거시 경제 안정화, 자원 배분 및 소득 분배 등의 이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하며, 재정이

해력의 개념적 구성요소에 대해 아래의 표와 같이 분야별·경제주체별 질의에 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공공재정을 정부와 민간 부문 간 자금 및 재화의 순환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 기반해 있다. 해당 관점에 따르면 공공재정이 민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이해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지닌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표 3-4〉 경제주체별 재정이해력의 구성요소 (Cechovsky, 2018)

구분	소득 활동의 주체	소비자	경제적 시민
공공재정	소득세의 특징은 무엇이며, 징세의도는 무엇인가?	어떠한 재화와 서비스가 조세를 통해 조달되는가?	누가 조세를 납부하는가? 누가 조세로부터 혜택을 보는가? 왜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는 민간부문에서 조달되지 않는가?
개인의 조세 체험	귀하는 세금을 납부하였는가? 어떤 종류를 납부했는가?		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가?
세금제도	소득 구간마다 세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부가세율은 얼마인가?	최근 있었던 세제개혁으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정부부채*	정부부채 감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과 세금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주: 별표(*) 표시는 저자가 임의로 추가하였음.
자료: Cechovsky(2018). 한국의 문맥에 맞도록 저자 재작성.

한편 재정이해력을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공개된 재정정보(public finance information)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도 있다. 기술적 용어 등의 난해함 때문에 정부예산안 및 재무결산의 형식으로 공개된 재정정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Cohen et al., 2017)에 착안한 것이다. 같은 문제의식에서 Jordan et al.(2017)은 공공재정 이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Karatzimas(2024)는 재정이해력을 주요 공공재정 용어에 대한 인지도, 재정정보를 통해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투표 및 공공이슈 참여에 있어서 재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3-5〉 분야별 재정이해력 구성요소 (Karatzimas, 2024)

<table>
<tr><th>주요 공공재정 개념 인지도</th><th>정부재정 여건/성과 평가
및 참여역량</th><th>수준별 재정교육 학습목표
달성여부</th></tr>
<tr><td rowspan="2">• 세입 / 세출 / 정부부채
• 예산 / 집행
• 재정적자/흑자
• 정부의 재정적 건전성
• 정부재정 성과평가
• 정부결산 감사(audit)
• 재정의 책임성(accountability)
• 예산 집행 모니터링
• 재정의 지속가능성
• 주요 재정 비율(ratio)
• 성과기반 예산제도
• 참여예산제도</td><td>• 지방정부 재정여건 평가능력
• 중앙정부 재정여건 평가능력
• 지방정부 재정성과 평가능력
• 중앙정부 재정성과 평가능력</td><td rowspan="2">〈고등학교 예시〉
• 예산편성 및 집행의 기능과 역할
• 적자와 흑자 그리고 부채개념
•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여건이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성과가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 공공부문의 재정성과 개념 (수입/지출, 흑자/적자)
• 공공부문의 재정여건 개념 (자산, 부채, 자본)</td></tr>
<tr><td>• 투표 시 재정정보 활용 여부
• 재정정보 기반 합리적 투표결정 능력
• 재정정보 기반 공공이슈 참여 역량</td></tr>
</table>

자료: Karatzimas(2024).

마지막으로, 재정이해력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공공재정에 대한 평가능력과 관련짓는 시각도 존재한다. Casey(2024)는 재정이해력을 여러 세대에 걸친 재정적 부담과 경제적 번영 간의 균형을 고려해 공공재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며, 특히 재정당국 및 선출직 공무원의 관점에서 재정이해력을 '재정규율에 대한 이해', '재정의 지속가능에 대한 이해', '미래 주요 재정적 도전(fiscal challenge)에 대한 대응' 등 세 가지 핵심능력(core competency) 영역으로 구분했다. 한편 Allen(2013)은 대학교 회계 교육의 맥락에서 정부재정 현황에 대한 지식, GDP 대비 정부부채 등의 재정건전성 지표 해석 능력, 재정건전성을 악화/개선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한 논의 참여 등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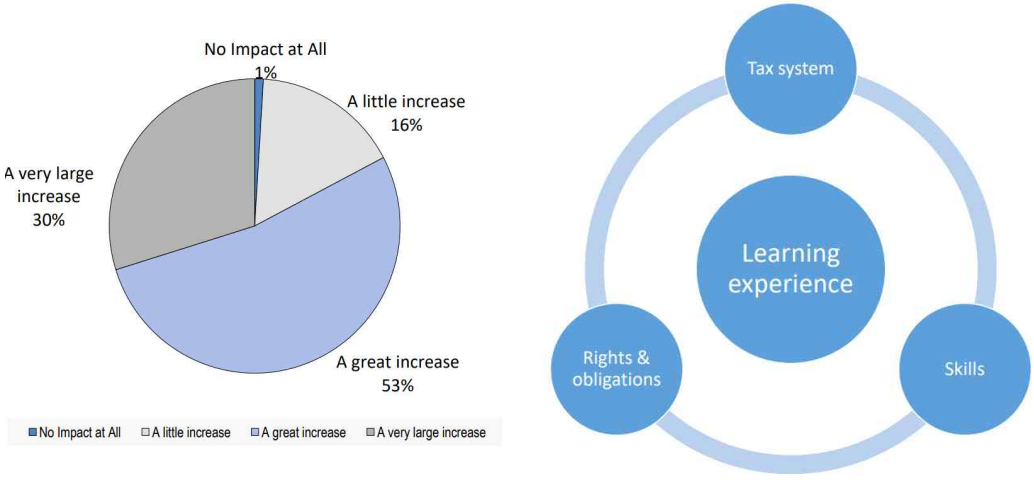
다. 재정교육 및 재정이해력 향상의 기대효과

1) 납세의식의 향상

최근 다수의 연구는 납세의지(tax morale)가 실제 납세순응(tax compliance)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Clifford & Jairus, 2013; Richardson, 2006). 최근 국내에서 실시한 '국민 납세의식조사' 상에서도 "납세의식은 직접적인 납세행위를 하는 데 있어 납세순응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됐다(오종현, 2024)."

한편 자발적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유력한 수단 중 하나가 재정교육을 통한 조세·재정이해력 증진이다(Mascagni et al., 2017). 조세·재정교육을 받은 국민은 조세에 대한 권리와 의무, 조세납부 방법, 조세제도가 가져오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 납세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재정당국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OECD(2021)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3%가 조세교육 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의 납세의식 향상을 불러온 것으로 평가했다. OECD(2021, p. 21)는 이러한 결과에 주목하며 "교육받은 시민은 좋은 시민이기도 하다"고 평한 바 있다.

[그림 3-4] 조세교육의 납세의식 제고효과(왼쪽) 및 조세교육의 구성요소(오른쪽)



자료: OECD(2021, pp.20-22).

2) 가계 재무건전성 개선

재정교육을 통한 재정이해력 증진은 가계의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에도 기여한다. 먼저 재정정책에는 실물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정부 예산안과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국가재정 자료에는 재정당국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 뿐만 아니라 미래 경기전망이 반영돼 있다. 또한 재정정책은 거시경제적 차원에서는 물가, 환율, 이자율, 자산가격 등 각종 거시변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원배분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민간기업과 가계의 후생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재정이해력을 재정정책 자료에 담긴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과 재정정책의 파급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한다면, 재정이해력을 갖춘 가계 및 개인은 재정정보에 대한 합리적 해석에 기반하여 노동·소비·저축 등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는 정부지출이 이자율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계 근로자는 미래 세금부담 예측에 기반하여 현재의 저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이해력 향상은 그 동안 강조되어 온 경제·금융이해력 향상과 직결된다. 또한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갖춘 납세자는 합법적 절세를 통해 직접적인 재무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OECD, 2021,: p. 21).

[그림 3-5] 재정정책에 담긴 경제적 정보와 재정정책의 파급효과

재정이해력을 촉진해야 할 당위성은 납세자 및 유권자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재정착각(fiscal illusion)'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재정착각이란 재정 및 예산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재정과 관련된 비용 및 편익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착각은 재정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는 측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Puviani, 1967, Wagner, 1976) 그 결과 재정부담에 대한 과소평가 및 과다지출로 이어지거나(Puviani, 1967; Buchanan, 1967) 반대로 재정부담에 대한 과대평가 및 공공서비스의 과소공급(Galbraith, 1958; Downs, 1961)으로 이어지는 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이러한 재정착각은 조세제도와 지출 프로그램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에서 유래되는 한편, 대중

의 교육수준에 의해서도 좌우된다(Mourao, 2008; Dell'Anno & Mourao, 2012). 따라서 재정교육을 통한 재정이해력 증진은 재정착각에서 비롯된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Karatzimas(2020) 역시 선거기간 동안 정부가 시민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장기적 재정 상태와 시민들의 복리를 저해하면서까지 지출과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동시에 시민들이 재정정보를 활용해 정치인을 통제하고 투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 받는다면 이러한 재정착각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Ibid).

3) 재정 투명성 및 참여의식 강화

IMF(1998)가 「재정 투명성에 관한 모범 사례 강령」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이래로 국제사회에서 재정의 투명성(fiscal transparency)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어서 OECD(2014)는 '재정당국이 공공 재정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으며, World Bank(2024) 역시 국가별로 공공재정 정보를 게시하는 전문 웹사이트 또는 포털을 운영하는지의 여부 등을 반영한 '열린재정 지수(Open Budget Index)'를 공표했다. 이처럼 재정 투명성을 중시하는 시각이 확산된 이유는 재정투명성이 국가재정의 책임성과 신뢰 강화를 통해 재정정책 효과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Petrie, 2017).[21]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재정 투명성에 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라인 상의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세입·세출 예결산, 재정사업 설명자료,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 재정분석 자료, 국고보조금·융자금·출연금 등의 각종 재정사업 정보를 2015년에 개설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OECD에서 독립 재정기구(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IFI)로 분류되는 국회예산정책처도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go.kr)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각종 재정정보 및 통계자료를 공개·배포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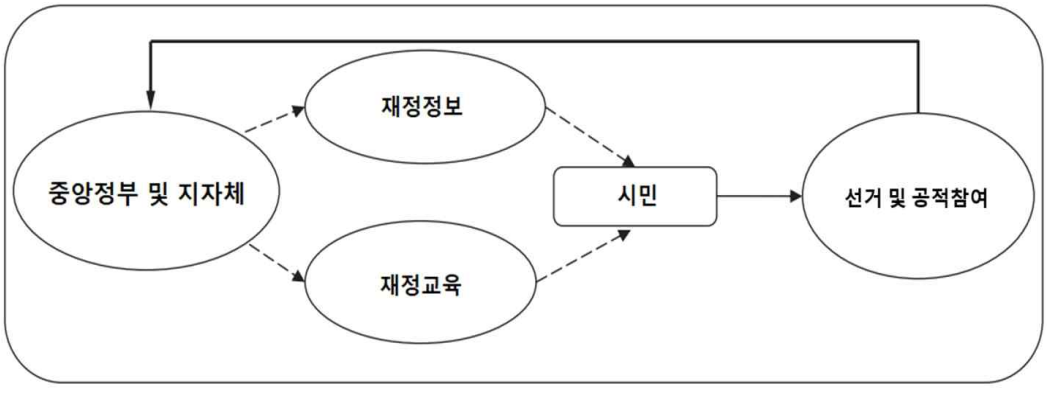
21) 예를 들어 Bursian et al.(2015)은 재정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효과가 증진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Leeper(2009)는 재정승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정부의 재원조달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당국에 대한 신뢰가 납세의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Koumpiaset al., 2021) 국채이자율 등 차입비용 감소를 가져온다는 연구도 주목할만 한다(End & Hong, 2022).

한편 지속적인 재정정보 공개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원하는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정보의 활용이 제한적인 측면도 있다(Cohen et al., 2017). 실제로 재정정보의 활용에 관한 심층인터뷰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의 1/4 미만이 정부가 공개한 재정정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Jordan et al., 2016). 또한 재정정보에 관심이 있거나 필요한 정부재정 회계자료를 모두 제공받더라도 재정이해력의 부족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Karatzimas, 2020).

재정교육은 재정이해력의 부족으로 인해 재정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정정보의 공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보가 수요자에게 관련성이 있고, 체계적이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Jordan et al., 2016). 이때 재정교육은 자칫 추상적으로만 느껴질 수 있는 재정정보를 스토리텔링, 숏폼 교육영상, 온라인 세미나,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 및 수단을 활용해 전달함으로써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Casey, 2024). 이 같은 맥락에서 ICAEW-PwC(2014)의 보고서도 유럽의 시민들이 공공부문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이해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하락 문제가 불거지자 시민참여 강화를 통해 대중 불신을 극복하고 정부 책임성을 높이며 정부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Jordan et al., 2016). 이에 따라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참여제도가 지난 30년 이상 꾸준히 전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일례로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 시에서 1989년 최초로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의 시초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광주 북구에서 2003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의 제안, 토론, 참여단 활동 등을 장려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4).

[그림 3-6] 재정정보 및 재정교육의 참여 강화 효과



자료: Karatzimas(2020, p.236) 저자가 재작성.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예산학교 등 체계적인 재정교육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임성일 외, 2020). 같은 맥락에서 Karatzimas(2020)는 재정교육을 통해 참여예산제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재정교육이 재정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민들의 능력을 길러 민주적 참여를 강화하며, 이것이 선거 등 공적 참여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재정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긍정적 되먹임(feedback) 효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Allen(2013)은 교육받은 시민일수록 정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재정교육이 발휘하는 시민참여 효과를 강조했다.

4) 소결

요약하자면, 재정이해력 향상의 기대효과로는 크게 납세의식의 향상, 가계재무 건전성 개선, 재정의 투명성 강화, 재정에 대한 참여의식 강화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교육을 협의의 조세교육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시각에서 '재정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력'과 '참여의지'를 갖춘 능동적 자세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접근하는 등 보다 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재정이해력 향상의 기대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자발적 납세의식의 함양

을 통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재정자료에 담긴 정보와 재정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를 갖춤으로써 가계 및 개인이 보다 더 합리적인 재무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외에도 세무지식을 갖춘 가계 및 개인은 합법적 절세를 통해 재무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재정이해력을 갖춘 국민은 정부가 공개한 재정정보를 통해 정부를 더욱 신뢰할 수 있다. 네 번째, 향상된 재정정보 활용 능력을 통해 국민이 보다 더 활발하게 공공재정 이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참여는 기존에 제공되던 재정정보와 재정교육의 질을 더욱 개선시키는 되먹임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으며, 이러한 선순환 효과를 통해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하면, 재정이해력의 향상은 개인 및 가계와 재정당국 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전체적인 재정시스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3-7] 재정이해력 향상의 기대효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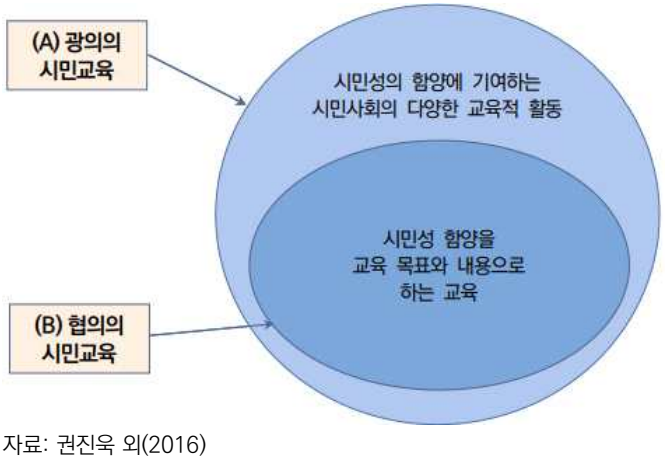
2 재정교육과 국민공동체

가. 국민교육의 정의 및 사례

1) 국민교육의 정의 및 기본원칙

국민교육에 대한 정의는 저마다 다양하지만 넓게 보았을 때 “자신이 속해 있는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태도 및 참여적 행동양식을 함양시키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해주, 2010).[22] 이처럼 느슨한 의미의 국민교육은 구성원을 사회에 잘 적응시키기 위한 교육으로서 소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본연의 국민교육은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정치현상과 기능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정치 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 기능, 가치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것(같은 곳)”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엄밀한 의미의 국민교육은 “정치·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민주적 참여역량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안지호·김은경, 2021).

[그림 3-8] 국민교육의 개념



자료: 권진욱 외(2016)

재정교육 역시 이러한 국민교육의 의미와 조응한다. 기초적인 수준에서 보았을 때 국민들은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채 재정당국과 관계를 맺는다. 이런 점에

22) 본고에서는 국민교육을 시민교육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서 재정교육은 느슨한 의미에서는 납세자로서 필요한 공공재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기르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재정교육은 공공재정에 대한 비판적 이해력과 참여역량을 육성하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재정교육을 국민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민주적 시민교육의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다. 국민교육의 원칙으로는 크게 정치적 중립성, 민주성, 참여성이 거론된다. 정치적 중립성은 초당파·비당파적 관점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주성은 자유로운 사상과 의견의 교환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참여성은 교육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동시에 참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Allen(2013) 역시 공공재정에 대한 교육이 비당파적(bipartisan)이고 객관적(objective) 견지에서 이뤄져야 교육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재정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재정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임을 지적한다(Ibid). 이는 참여성의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표 3-6〉 민주적 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원칙	주요내용
정치적 중립성	• 초당파적·비당파적 관점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정권에 상관 없이 일관성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민주성	•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가치로 함. • 특정 생각이나 사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지 않아야 함.
참여성	• 민주 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야 함. • 민주 시민교육은 시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어야 함.

자료: 안지호·김은경(2021, p. 19), 일부 저자 재작성.

2) 국내외 국민교육의 사례

해외에서는 국민교육을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안지호·김은경, 2021).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국민민교육은 각각 civic education, citizenship education, éducation à la citoyenneté으로 불리고 있다. 이를 직역하면 시민/공민 교육 혹은 시민성/시민권 교육 등으로 부를 수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국민교육을 politische Bildung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정치교육적 측면에 상대적으로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러한 명칭의 다양성에서 엿볼 수 있듯 국민교육을 수행하는 주체와 거버넌스 체계도 국가마다 상이하다. 이하에서는 각 국가별 시민교육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3-7〉 국가별 국민교육 명칭

국가	용어	직역
미국	civic education	시민/공민 교육
영국	citizenship education	시민성/시민권 교육
프랑스	éducation à la citoyenneté	시민성 함양 교육
독일	politische Bildug	정치교육

자료: 권진욱 외(2016)

① 미국의 국민교육

미국 국민교육의 특징으로는 학교 교과과정 바깥의 시민사회 영역의 국민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미국의 시민들이 자발적 결사체를 결성하면서 공공부문에 활발히 참여하고 교류하는 전통은 1800년대부터 이어져 왔으며 이는 일찍이 토크빌(Tocqueville) 등의 정치학자에 의해 주목받은 현상이다. 이러한 전통을 따라 시민단체들이 민관 거버넌스 및 국민의 정치참여와 같은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원칙들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 국제센터, 시민참여 캘리포니아센터, 청소년리더십연수원과 같이 지역의 국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민단체가 주도하며 재정적 지원은 공익재단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두드러진다(김영화, 2010).

② 영국의 국민교육

영국 국민교육의 특징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개된 다양한 교육적 실험이 점진적으로 제도권에 수용되었다는 점이다(권진욱 외, 2016). 영국은 2002년부터 중등교육 교과과정에 '시민권(citizenship)'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거제도, 정당정치, 의회정치, 사법제도, 정치참여 등을 가르친다. 공교육에서 국민교육의 내용과 학습방식은 학교와 교사의 재량에 상당 부분을 맡기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연계된 독립적 기구를 통해 교육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1930년대 세계시민교육협회(AEC)가 창설된 이래로 영국에서의 국민교육은 일찍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민주주의, 인권, 참여에 대한 가치를 중시했으며, 오늘날에도 영국 국민교육은 능동적 시민권(active citizenship)을 고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재원, 2013).

③ 프랑스의 국민교육

프랑스의 공교육은 세속적 공화주의 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일찍부터 민주주의와 사회적 권리의 확대라는 발전 방향을 추구했다. 공교육의 영역 바깥에서 활동

하는 대중교육 단체 역시 공화국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공교육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프랑스의 대중 시민교육의 전통은 1990년대의 '철학 카페'와 '시민 카페' 그리고 2000년대 미셸 옹프레의 '대중대학(Université Populaire)'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④ 독일의 국민교육

독일 국민교육의 중심에는 "민주주의의 강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이 있다. 해당 기관은 "민주적 각성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성숙하고 비판적이며 적극적인 정치적 삶에 역량을 부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교육 콘텐츠·교수법을 개발하여 시민교육 단체 및 교육현장에 보급하고 있다(권진욱 외, 2016). 나치즘의 집권과 동서독 분단 등 여러 정치적 위기를 겪은 독일은 민주주의를 빠르게 안착시키기 위해 국민교육 정책을 연방정치교육원을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특색을 보인다. 다만 실제 국민교육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는 시민사회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정치집단과 시민단체가 관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정당의 재단이나 노동조합이 정부 재정지원으로 자체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규영, 2005).

⑤ 국내의 국민교육

민주화 이전 국내 국민교육 운동은 재건운동, 새마을 운동, 사회정화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등 관제 캠페인의 성격을 주로 띠었다.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본연의 국민교육에 관한 논의는 민주화 이후 1990년대부터 활성화됐다. 그 결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국가주의적 관점을 탈피하고 국민교육적 관점을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었다(성경희·황미영, 2024). 제도권 교육 바깥의 영역에서는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정당 관련 정치재단, 연구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 등의 공익단체 및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국민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습도시, 평생학습과, 시민대학, 문화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학습지원기관이 운영하는 평생 교육과정의 일부로 국민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심성보, 2017).

나. 조세·재정에 대한 국민교육적 접근 사례

1)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경제/진로교육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2016년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는데 이때 전체 교과에서 포괄적으로 소비자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진로(직업 및 대학 예비교육) 과목을 신설했다(정수정, 2018). 새로 도입된 경제/진로 교육의 목표 중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이해'이다. 여기서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행위에 따른 정치적, 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며, 다양성은 경제시민이 지향해야 할 관용·공존·반차별 등의 도덕적 가치를 의미한다. 또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학생이 경제/진로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역량을 '소비자', '근로자', '경제시민'의 측면으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는데, 이 중 경제시민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조세·재정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헌법, 국가재정법 등과 관련한 규범을 가르치고 있다.

2) 해외의 조세교육에 대한 국민교육적 접근

OECD(2021)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논의에서도 협의의 조세·재정 교육목표를 국민의 자발적 납세순응(tax compliance) 등 건전한 조세문화(tax culture) 조성에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세·재정 교육이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자각시키는 국민교육적 면모도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조세교육은 납세와 관련된 "권리와 책임뿐만 아니라 세금 사용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Ibid., p. 42). 그런 의미에서 조세교육은 세금납부를 둘러싼 개개인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교육 외에도 세금을 징수하고 지출하는 재정 시스템 전반은 물론 재정사업의 성과 및 재정건전성 이슈에 관한 보다 더 폭넓은 재정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다.

최근에는 시민사회단체(CSO) 및 비정부기구(NGO)가 조세교육에 있어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개발기구(ODI) 및 국제예산협력기구(IBP)에서 조사한 개발도상국 시민단체들의 조세교육 및 조세 관련 캠페인 현황에 따르면, 이들 시민단체는 납세 관련 의무와 권리를 홍보하는 캠페인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에 대한 심층분석과 조세정책 관련 찬반 토론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사회와의 연계 아래 능동적 유권자의 관점에서 조세·재정교육을 기획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8〉 조세 관련 해외 시민단체 활동 유형

ODI의 분류	활동강도	IBP의 분류	활동 시민단체 비율 (%)
조세정책 분석	고(高)	연구활동	69
조세정책 찬반 토의	고(高)	투명성 및 책임성	58
납세의무 및 권리에 대한 의식(awareness) 제고	저(低)	시민참여 활동	56
		조세 캠페인	53
		조세이해력 교육	49

자료: Sharp, Sweet & Menocal(2019), Mohiuddin & de Renzio (2020). OECD(2021)에서 재인용.

3) 조세·재정 교육에 대한 국민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기존 국내 재정교육의 상당 부분은 조세교육의 범주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공교육 교과과정 상에서 조세·재정교육이 별도의 교과목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세교육의 주된 목적은 납세의식(tax morale) 제고, 납세순응(tax compliance) 향상, 조세회피(tax avoidance) 감소 등이다. 한편 이러한 조세교육의 접근법은 안정적 세수 확보라는 국가적 목적에 복무하는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재근, 2023). 이처럼 전통적인 조세교육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무중심적 접근을 취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납세의식 교육'은 탈근대적 가치와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에 노출된 민주화 이후 출생한 세대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같은 곳). 이에 따라 조세·재정교육과 관련하여 경제주체로서, 납세자로서, 유권자 및 국민으로서 다변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면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재근(2023)은 단순 조세지식의 전달 및 납세의무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 '형평성 vs 효율성'과 같은 조세 관련 쟁점을 소개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 및 탐구력을 기를 것과 더불어 조세 문제를 둘러싼 '문제해결 기능'과 '사회참여 기능'도 함께 육성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방향'에 대한 토의와 같은 '가치분석적 접근'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력과 설득력을 기를 것을 제언하고 있다(같은 곳). 이러한 제언은 협의의 조세교육 뿐만 아니라 광의의 공공 재정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재정교육에 대한 국민공동체적 접근

1) 재정교육과 경제시민 교육

최근 해외의 경제교육 동향을 살펴보면 통상적인 효용·이윤 극대화 원리에 기댄 협의의 경제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주체가 지닌 여러 정체성(소비자, 근로자, 납세자, 유권자 등)을 기반으로 이들 각자가 지닌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지향해야 할 윤리를 가르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재정위기, 보건위기, 기후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협의의 시장경제 영역을 넘어서 전체적인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경제시민의 양성'으로 경제교육의 초점이 점차 옮겨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조세·재정교육도 공공재정이 추구해야 할 공익적 역할 및 가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림 3-9] 경제교육과 국민교육이 교차하는 재정교육

납세자들은 경제행위의 주체인 동시에 유권자이자 민주사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이들은 단기적인 이윤·효용 극대화의 원리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재생산과 세대 간 지속가능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반대로 공익을 지향하는 재정적 활동 역시 희소성과 선택의 원리라는 경제적 법칙의 제약 아래 놓여 있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조세·재정교육을 위 그림과 같이 경제교육과 국민교육이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접근해야 한다.

2) 재정 관련 공적 권리와 의무의 체계

이처럼 '국민공동체 교육으로서 재정교육'을 지향하는 경우 교육 수혜자의 정체성 재정립이 요구된다. 기존 재정교육(fiscal education)의 초점은 자발적 납세 의식 형성을 위한 조세교육(tax education)에 맞춰져 있었다. 이 경우 조세교육의 수혜자는 세무 행정의 객체로서 '소극적 납세자'의 역할에 국한된다. 그러나 최근 OECD(2021,

p. 42)는 조세교육이 납세자의 의무(obligation)뿐만 아니라 권리(rights)를 교육해야 함을 지적하며 더 나아가 조세정책 및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상기시키는 국민공동체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재정교육 수혜자의 정체성은 납세자, 유권자, 국민으로 동심원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때의 재정교육이란 납세자, 유권자, 참여적 국민 각각의 정체성에 걸맞는 권리와 의무를 자각시키는 교육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의 재정교육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더 넓은 의미에서는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정부의 조세·재정활동과 연관지어 가르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조세·재정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는 교육의 목적, 대상, 난이도, 문맥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

[그림 3-10] 재정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권리와 의무의 체계

먼저 납세자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재정교육은 납세자로서의 성실납세 의무뿐만 아니라 편리한 납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세금이 얼마나 걷히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를 자각시킬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 중에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세금을 아낄 권리도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 납세자는 유권자이기도 하다. 재정교육을 통해 유권자로서 필요한 재정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자각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실현할 방법도 가르칠 수 있다.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재정정보에는 세입·세출의 규모 및 세부 분야, 재정사업 성과,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를 포괄한 재정건전성 지표가 포함된다. 또한 유권자들은 선거 시 후보가 재정정책과 관련된 공약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역으로 유권자들은 선거에 성실히 참여하고 선거 시 후보의 재정 관련 공약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숙고하여 투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납세자 및 유권자는 선거 이외의 영역에서도 능동적 참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국민들은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정부의 재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거버넌스 체계와 정부를 상대로 한 시민사회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재정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러한 민주사회의 참여적 국민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미덕(virtue) 중에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복지에 대한 배려도 포함된다. 특히 현재세대의 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multi-generation) 지속가능한 번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윤리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 형성을 위해서는 협의의 조세교육이나 예산제도 및 재정과정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가르치는 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정교육에 대한 국민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재정교육은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금융교육 내지는 조세교육으로 한정 지어 이해될 필요는 없으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정부의 재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의식(awareness)을 각성시키는 광범위한 교육적 활동으로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다. 이때 재정교육이 지향·옹호해야 할 가치에는 국민국가 차원에서의 시민권(citizenship) 내지는 시민다움(civilité)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적 덕목'도 포함될 수 있다. 국가의 재정활동에는 국제원조, 난민구호, 인권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평화, 인류 공동의 번영, 인권보호 등 세계시민적 보편 가치를 증진하는 재정적 활동에 대한 교육도 넓은 의미의 재정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

3) 소결

앞서 보았듯, 민주사회의 국민은 자유로운 주체로서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는 가운데 공익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혹은 정치체)의 일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민교육과 접목된 재정교육의 목표는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정 관련 문제를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사회의 일원을 양성하는" 데 있다.[23] 효과적인 재정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 재정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의 개선을 위해 재정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정부재정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영역으로는 세입 외에도, 재정을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지출할지, 재정의 얼마만큼을 부채로 조달할지 등의 영역이 있다. 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꾀하는 것 역시 세수 기반 확충의 문제만큼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정작 이는 기존 '조세 중심'의 재정교육에서는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향후에는 세입, 세출, 정부부채, 재정성과 관리 등 공공재정 이슈 전반을 포괄하면서 이것이 개인과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재정교육은 '자발적 납세자'를 기르는 데만 그치지 않고 공공재정 이슈에 참여하는 능동적 태도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앞서 논한 대국민 재정교육을 실천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공교육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는 커다란 비용과 시간이 동반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여러 주체와 협업하여 재정교육 커리큘럼 및 교수법을 개발하고, 재정교육을 담당할 인력을 공동 양성하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

---

23) 김재근(2023) 참고. 단, 본문의 "조세 관련 문제"를 "공공재정 관련 문제"로 정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Ⅳ 전국민 재정이해력 실태조사

1 재정이해력 실태조사

가. 실태조사의 배경

2021년 한국재정정보원은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등에서 공개 중인 재정정보에 대한 국민 활용도를 내부적으로 진단한 바 있다. 당시 만 19세 이상 성인 약 80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재정정보에 대한 주요 접근경로 및 접근빈도, 재정제도 관련 인지도 및 궁금증에 대한 자기보고(self-report) 등을 응답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분야별 주요 재정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다수(65.4~88.0%)였으나, 분야별 재정현황에 대해 ‘궁금하다’는 응답은 과반(51.0~66.9%)에 달했다. 재정정보에 대한 주된 접근 경로는 언론매체(76.2%)인 반면 열린재정 등 정보공개 사이트를 주로 활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응답자 중 34.7%가 평소 재정정보를 접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금번 재정이해력조사에서는 ’21년 조사와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에 조사했던 재정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 및 궁금증, 재정정보를 접하는 경로 및 빈도에 대해 유사한 문항으로 조사했다.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는 재정 현황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6개 주요 분야(예산절차, 예산규모, 3대 국세수입, 정부지출, 국가채무, 재정의 경제적 기능 등)에 대한 퀴즈를 제시했으며, 재정교육에 대한 경험 및 수요, 재정정보 및 분석자료에 대한 관심도, 재정제도에 대한 참여의지 등 국민의 재정의식 및 경험을 다면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이는 금융이해력을 측정할 때 ‘금융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을 다면적으로 측정하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OECD/INFE, 2022).[24]

24) OECD/INFE(2022)는 금융이해력을 ‘건전한 금융 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금융 복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식,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한편 국내에서 '전국민 경제이해력조사',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국민 납세의식 조사'를 통해 국가재정 외의 영역에서 경제·금융 이해력을 측정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들 경제·금융이해력 조사를 참고하되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해 운영되는 국가재정 영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문조사를 설계·실시하였다.

〈표 4-1〉 '21년 재정정보이해력조사 주요 결과

구분	설문문항 및 조사결과		
재정에 대한 인지도	재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안다	모른다
		34.6%	65.4%
재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안다	모른다
		33.5%	66.5%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안다	모른다
		31.9%	68.1%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안다	모른다
		25.2%	74.8%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안다	모른다
		12.0%	88.0%
국가재정 영역 궁금증	재정규모에 대해 얼마나 궁금한가?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다
		56.5%	43.5%
	재정수입에 대해 얼마나 궁금한가?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다
		61.6%	38.4%
	재정지출에 대해 얼마나 궁금한가?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다
		63.3%	36.7%
	재정건전성에 대해 얼마나 궁금한가?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다
		66.9%	33.1%
	지방재정에 대해 얼마나 궁금한가?	궁금하다	궁금하지 않다
		51.0%	49.0%
재정정보 접근 통로	언론매체(76.2%), 인터넷/SNS(22.7%), 정부(0.6%), 재정정보 공개사이트(0.5%)		
재정정보 접근 빈도	주1회(10.6%), 월1회(18.9%), 분기1회(19.9%), 연1회(15.8%), 접해본 적 없음(34.7%)		

〈표 4-2〉 유사 설문조사 사례

구분 (연도)	조사기관	조사대상	주요 조사내용
재정정보이해력조사('21)	한국재정정보원	성인 800명	재정 인지도, 궁금증, 재정정보 접근경로 및 접근 빈도
전국민 경제이해력조사('23)	한국개발연구원	전국민 3,000명	경제개념에 대한 이해도, 경제교육 의견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23)	한국은행·금감원	전국 2,400 가구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위 등
국민 납세의식 조사('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국민 4,500명	조세에 대한 이해도, 조세의 사회적 규범 인식, 조세 형평성 인식

나. 재정이해력조사의 설문설계

1) 표본설계

전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정이해력 주요 문항의 응답 패턴을 계층별로 구분하기 위해 청소년·대학생·일반성인 등 연령 및 학령 계층별로 나누어서 표본을 수집했다.

〈표 4-3〉 재정이해력조사 설문조사 개요

조사 대상	• (청소년) 전국 고등학교 청소년 대상 • (대학생) 전국 만 19세 이상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생 대상 • (일반성인) 전국 만 19세 이상 비대학생 성인
조사 기간	• 2024년 05월 17일 ~ 2024년 05월 28일
조사 규모	• (청소년) 총 261 샘플 • (대학생) 총 255 샘플 • (일반성인) 총 322 샘플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 5.5%p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관	•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

청소년(261명), 대학생(255명), 일반성인(322) 별로 할당된 표본의 구성은 각각 〈표 4-4〉, 〈표 4-5〉와 같다.

〈표 4-4〉 청소년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전 체		**(261)**	**100.0**
지역별	서울	(51)	19.5
	경기, 인천	(79)	30.3
	대전, 충청, 세종	(27)	10.3
	광주, 전남, 전북	(27)	10.3
	대구, 경북	(24)	9.2
	부산, 울산, 경남	(39)	14.9
	강원, 제주	(14)	5.4
성별	남	(122)	46.7
	여	(139)	53.3
학년	고등학교 1학년	(40)	15.3
	고등학교 2학년	(108)	41.4
	고등학교 3학년	(113)	43.3

〈표 4-5〉 일반성인·대학생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 분		일반성인		대학생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 체		(322)	100.0	(255)	100.0
지역별	서울	(60)	18.6	(51)	20.0
	인천, 경기	(106)	32.9	(79)	31.0
	대전, 충청, 세종	(36)	11.2	(28)	11.0
	광주, 전남, 전북	(30)	9.3	(27)	10.6
	대구, 경북	(30)	9.3	(24)	9.4
	부산, 울산, 경남	(47)	14.6	(38)	14.9
	강원, 제주	(13)	4.0	(8)	3.1
성별	남	(157)	48.8	(127)	49.8
	여	(165)	51.2	(128)	50.2
연령별	만19-29세	(49)	15.2	(255)	100.0
	만30-39세	(47)	14.6	-	-
	만40-49세	(55)	17.1	-	-
	만50-59세	(67)	20.8	-	-
	만60세 이상	(104)	32.3	-	-
최종학력	중졸 이하	(6)	1.9	-	-
	고졸	(75)	23.3	-	-
	대학교 재학	(15)	4.7	(255)	100.0
	대학교 졸업	(199)	61.8	-	-
	대학원 졸업	(27)	8.4	-	-
직업별	임금근로자	(165)	51.2	-	-
	사업주·자영업자	(32)	9.9	-	-
	무급가족 종사자	(1)	0.3	-	-
	기타 종사자	(10)	3.1	-	-
	전업주부	(40)	12.4	-	-
	학생	(11)	3.4	(255)	100.0
	미취업자 (취업준비생 등)	(18)	5.6	-	-
	은퇴	(32)	9.9	-	-
	기타	(13)	4.0	-	-
월평균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8)	11.8	(137)	53.7
	100만원 ~300만원	(92)	28.6	(48)	18.8
	300만원 ~ 500만원	(111)	34.5	(25)	9.8
	500만원 ~ 700만원	(51)	15.8	(19)	7.5
	700만원 ~ 900만원	(23)	7.1	(17)	6.7
	900만원 이상	(7)	2.2	(9)	3.5

2) 설문문항

설문문항 작성 시 2021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내부적으로 실시했던 '재정정보이해력조사'의 설문문항을 확장 및 재구성하되, 재정지식, 재정에 대한 관심도, 가치관 측정문항 작성에 있어서는 전국민 금융이해력조사 및 경제이해력조사의 일부 문항을 참고하였다. 응답자 특성 문항 외의 주요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했으며 크게 ① 재정교육 경험 및 수요 ② 재정에 대한 지식수준 ③ 재정에 대한 관심도 ④ 재정에 대한 참여의지 관련 문항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영역별 문항 중 일부의 난이도는 청소년 설문조사에서 재조정하였으며, 다른 일부 문항은 청소년 설문에서 생략하였다. 조사대상별 설문문항 개요는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다.[25]

〈표 4-6〉 청소년 재정이해력 설문문항 개요

구 분		조사 내용
응답자 특성		• 지역별 / 성별 / 학년별
조사항목	재정교육 경험 및 수요	• 재정교육 경험 (정규 교과과정 및 교과 외 활동 포함) • 국가재정 개념 인지도 • 국가재정 분야별 궁금증 정도 • 재정교육 및 특강에 대한 수요도
	재정지식	• 예산절차 관련 재정 지식(틀린 설명 찾기) • 2024년 중앙정부 예산 규모 • "3대 국세 수입"이 아닌 것 •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 •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 • 국가재정의 경제적 기능이 아닌 것
	재정 관심도	• 평소 재정정보를 접하는 횟수 • (칼럼·인포그래픽·보고서) 등 재정분석 자료에 대한 관심도
	재정 참여의지	• 재정에 대한 참여제도(학생참여예산제도, 예산학교) 이용 의향

25) 자세한 설문문항은 〈부록〉을 참고할 것.

〈표 4-7〉 일반성인·대학생 재정이해력 설문문항 개요

구 분		조사 내용
응답자 특성		•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 최종학력별 / 직업별 • 월평균 소득수준 / 이념성향
조사항목	재정교육 경험 및 수요	• 재정교육 경험 (대학교육, 공공(연구)기관 특강) • 국가재정 제도 및 용어 인지도 • 국가재정 분야별 궁금증 정도 • 재정교육 및 특강에 대한 수요도
	재정지식	• 예산 절차 관련 재정 지식(틀린 설명 찾기) • 2024년 중앙정부 예산 규모 • "3대 국세 수입"이 아닌 것 •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 •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 • 국가재정의 경제적 기능이 아닌 것
	재정 관심도	• 평소 재정정보를 접하는 횟수 • (칼럼·인포그래픽·보고서 등) 재정분석 자료에 대한 관심도
	재정 참여의지	• 재정에 대한 참여제도(국민예산참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이용 의향

다. 연구설계 및 계량분석 방법론

본 연구의 목적에는 계층별(청소년·대학생·일반성인) 재정이해력 실태를 조사하는 것 외에 재정교육 경험 여부가 '재정지식', '재정정보 및 분석자료에 대한 관심도', '재정에 대한 참여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있다. 선행연구가 시사하듯 이들은 국가재정에 대한 '비판적 이해능력'과 '민주적 시민참여 역량 형성'의 구성요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Allen, 2013; Casey, 2024; Cechovsky, 2018; Jordan et al., 2017; Karatzimas, 2020; 2023; 2024; Vovchenko et al., 2018).

재정교육 경험이 재정지식, 재정정보 및 분석자료에 대한 관심도, 재정에 대한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더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성별, 지역, 학력, 직업유형, 소득 등 인구통계적 특성을 통제한 순서형 로짓(ordered logistic) 회귀모형을 활용했다. 순서형 로짓 모형은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극대화시키는 최우추정량(MLE: Most-Likelihood-Estimator)을 이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이때 누적분포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의 성질을 이용하여 응답자가 (리커트 척도와 같은) 순서형 응답 선택지를 선택할 확률을 계산한다.

이러한 순서형 로짓 모형에서는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연속적 잠재변수 Y*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Y*와 독립변수(X) 및 회귀계수(β)의 관계를 일반 회귀식과 동일하게 나타내면 아래 식 (1)과 같다. 여기서 오차항 ϵ은 평균이 0인 대칭적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또한 여기서는 편의상 응답 선택지가 3개(j=1,2,3)라고 가정한다.

(1) $Y^* = \sum_{k=1}^{K} \beta_k X_k + \epsilon$

여러 개의 임계값을 가진 잠재변수 Y*는 실질적으로 관찰 가능한 범주형 변수 Y로 나타낼 수 있다. Y*와 Y의 관계는 식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μ는 알려지지 않은 임계값의 모수(threshold parameters)들이다.

(2) $Y = 1 \text{ if } Y^* \leq \mu_1 (= 0)$
$= 2 \text{ if } \mu_1 < Y^* \leq \mu_2$
$= 3 \text{ if } \mu_2 < Y^* \leq \mu_3$

순서형 로짓 모형은 누적분포함수 F(·)를 이용해 특정 응답 선택지를 택할 확률을 추정한다. 이에 관찰가능한 모든 Y의 값들의 확률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P(Y=1) = F(-\sum_{k=1}^{K} \beta_k X_k)$
$P(Y=2) = F(\mu_2 - \sum_{k=1}^{K} \beta_k X_k) - F(-\sum_{k=1}^{K} \beta_k X_k)$
$P(Y=3) = 1 - F(\mu_2 - \sum_{k=1}^{K} \beta_k X_k)$

이때 Y≤j(=1,2,3)인 확률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 식 (4)로 표현할 수 있다.

(4) $P(Y \leq j) = F(\mu_j - \sum_{k=1}^{K} \beta_k X_k)$

식 (4)를 로짓모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누적확률분포함수 F(·)를 식 (5)와 같이 누적로짓분포함수의 역함수 L(·)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Liao, 1994).

(5) $P(Y \leq j) = P(Y^* \leq \mu_j) = F(\mu_j - \sum_{k=1}^{K} \beta_k X_k)$
$= L(\mu_j - \sum_{k=1}^{K} \beta_k X_k) = \frac{e^{\mu_j - \sum_{k=1}^{K} \beta_k X_k}}{1 + e^{\mu_j - \sum_{k=1}^{K} \beta_k X_k}}$

이처럼 순서형 로짓분석 모형은 누적로짓분포함수의 역함수 L(·)을 연계함수로 차용한다. 자연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위 식을 다음 식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로써 순서형 로짓모형의 기본적인 형식이 완성된다.

$$(6)\ \log\left[\frac{P(Y\leq j|X)}{1-P(Y\leq j|X)}\right]=\mu_j-\sum_{k=1}^{K}\beta_k X_k \quad where\ j=1,2,3$$

순서형 로짓모형의 특징은 식 (6) 좌변의 로그 승산(log-odds)이 X의 어떤 응답 범위에서든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평행선 가정(parallel lines assumption)이라고 부르며 이를 검정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소표본에서도 상대적으로 강건한 것으로 알려진 Wolfe & Gould(1998)의 통계량(X^2)을 이용하여 평행선 가정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정하였다.[26]

한편 식 (3)에서 본 선택지 각각의 확률을 순서형 로짓분석의 형태로 나타내면 식 (7)과 같다. 이는 누적확률분포함수를 누적로짓분포함수의 역함수로 대체한 것이다.

$$(7)\ P(Y=1)=L(-\sum_{k=1}^{K}\beta_k X_k)$$
$$P(Y=2)=L(\mu_2-\sum_{k=1}^{K}\beta_k X_k)-L(-\sum_{k=1}^{K}\beta_k X_k)$$
$$P(Y=3)=1-L(\mu_2-\sum_{k=1}^{K}\beta_k X_k)$$

순서형 로짓을 포함한 로짓모형의 특성 중 하나는 회귀계수 β를 승산비(odds ratio)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승산비는 식 (6)의 양변을 자연상수(e)의 승수로 취함으로써 도출된다. 이때 승산비(e^{β_k})는 독립변수 X_k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늘어나는 승산(odds)의 비율로 해석한다. 식 (6)의 회귀계수가 음(-)이라면 앞서 도출된 승산비는 1보다 작게 되고 반대로 회귀계수가 양(+)이라면 승산비는 1보다 크게 된다.

26) 해당 통계량은 '순서형 로짓모형이 평행선 가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라. 재정이해력조사 주요 결과

1) 재정교육 경험 및 교육수요

먼저 재정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대학생에게 "대학교(방송통신대학 및 KOCW 포함)가 제공하는 재정교육"[27],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정교육"[28] 경험 여부를 설문한 결과 대학생·성인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대학·공공기관 재정교육 경험률은 10~20%대에 그쳤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정규 교육과정 외의 재정교육 콘텐츠 경험률은 25%를 하회했다. 고등학생의 경제 선택과목 수강률은 30%대에 그쳤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고등학교 경제과목 개설률(27.4%)과 유사한 수준이다(민세진·홍진주, 2021).

〈표 4-8〉 일반성인 및 대학생 재정교육 경험률

재정교육 유형	일반인		대학생		일반인·대학생 평균	
	경험 有	경험 無	경험 有	경험 無	경험 有	경험 無
1) 대학교 제공 재정교육	21.1%	78.9%	28.6%	71.4%	24.4%	75.6%
2) 공공기관 제공 재정교육	20.8%	79.2%	12.2%	87.8%	17.0%	83.0%

〈표 4-9〉 청소년 재정교육 경험률

재정교육 유형	경험 有	경험 無
1)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경제(일반선택)' 또는 '실용경제(교양)' 과목 수강	30.3%	69.7%
2)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경제배움e, KDI 경제정보센터 e러닝 등)에서 제공하는 예산의 이해, 국가재정의 이해 등 재정교육 수강	13.0%	87.0%
3) 오프라인에서 재정교육(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청소년 재정특강 등) 수강	18.4%	81.6%
4) 교과과정 외 재정교육 경험 여부(2+3)	24.1%	75.9%

아울러 이하의 국가재정 용어(개념)에 대해 "각 용어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으로 국가재정 용어·개념 인지도를 조사했다. 참고로 2021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내부적으로 수행한 "재정정보이해력조사"에도 일부 동일한 설문문항을 조사한 적이 있기에 이들의 점수와 올해 실시한 "재정이해력조사"의 점수를 비교했다.

27) 대학(방송통신대학 및 KOCW 포함)이 제공하는 재정학, 예산의 이해, 공공재무이론, 공공경제학, 공공선택론, 재무행정론, 조세론, 세법 등의 과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문에 밝혔다.
28) 재정전문 공공(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예산학교, 세법교실, 재정아카데미, 국가재정의 이해, 예산의 이해 특강 등의 재정교육 경험에 대해 물었다.

다만 2021년에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관계로 이들 문항을 100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금번 "재정이해력조사" 응답결과와 비교했다. 분석 결과 '21년에 비해 올해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했음을 볼 수 있다.

〈표 4-10〉 일반성인 및 대학생 재정용어 인지도

구분	일반인	대학생	일반인·대학생 평균	'21년 조사 비교
1) 국가재정 예결산 제도	50.8점	39.7점	45.9점	-
2) 국가재정운용계획	45.9점	38.5점	42.6점	37.5점
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48.2점	34.3점	42.1점	36.7점
4) 국민참여예산제도	45.1점	37.9점	41.9점	-

〈표 4-11〉 청소년 재정용어 인지도

구분	인지도
1) 시장실패의 원인 및 유형	51.0점
2) 정부의 경제적 역할	58.9점
3) 정부실패의 원인 및 유형	50.8점
4) 재정정책의 수단	41.5점

한편 청소년의 재정용어 인지도에 대한 설문문항은 고등학생 교과과정 난이도에 맞추어 조정됐다. 그 결과 청소년이 자기보고(self-report)한 재정용어 인지도는 40~50점대에 그쳤다. 이는 경제교육 경험률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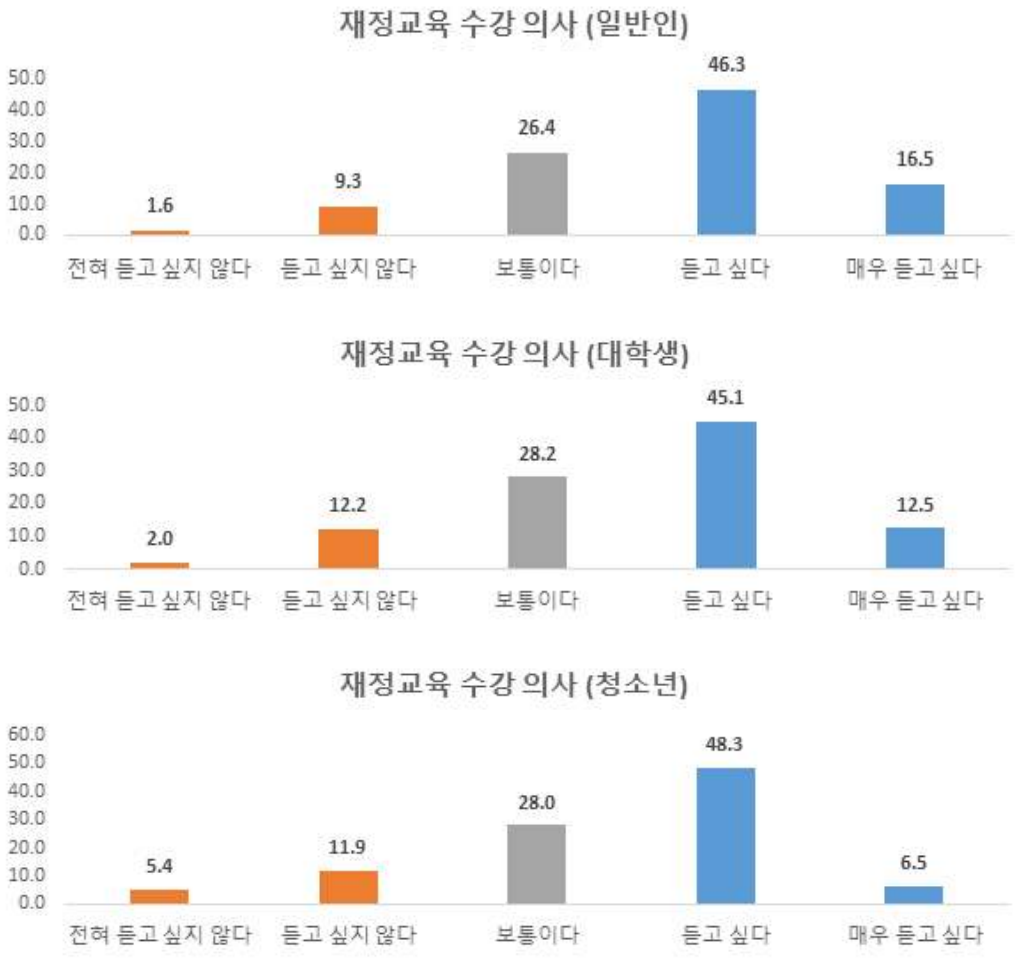
다음으로 "국가재정 분야에 대해 평소 어느 정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궁금증을 분야별로 조사했다. 이 경우에도 '21년도 재정정보이해력조사와 동일한 문항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올해와 비교했다. 그 결과 국가예산의 규모, 수입 및 지출규모, 재정건전성에 대한 궁금증이 대폭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재정건전성,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의 지속가능성, 세제개혁을 둘러싼 재정현안이 부각됨으로써 국가재정의 제 분야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4-12〉 재정 분야별 궁금증

구분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	'21년 비교
1) 예결산 과정 및 주요 국가재정 제도	65.6점	58.1점	55.7점	-
2) 국가예산의 규모	71.9점	70.4점	69.1점	53.0점
3) 수입규모 및 분야 (국가재정의 주요 재원 등)	67.1점	68.4점	63.1점	56.9점
4) 지출규모 및 분야 (사회복지비, 교육비, 국방비, SOC 등)	75.6점	72.9점	72.0점	57.9점
5)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76.7점	67.3점	58.4점	58.2점
6) 국가재정의 경제적 역할	69.0점	66.4점	64.1점	-

마지막으로 "위 재정에 대한 관심분야가 반영된 재정교육 및 특강 기회가 국가재정 관련 공공기관에서 제공된다면 들을 용의가 있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재정교육 수강 의사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재정교육 수강 의사 긍정 비율은 55~63%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긍정 응답 비율이 11~17% 대의 부정응답 비율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공교육 및 대학교 교육과정 외에도 국가재정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정교육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일반성인의 재정교육 수강 의사(긍정 응답 62.7%)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교육 및 대학교육 과정을 마친 성인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재정교육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Karatzimas(2020)가 시사한 바대로 재정교육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4-1] 학령·연령 계층별 재정교육 수강 의사



2) 주요 재정분야 지식

국민의 재정지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예결산 절차, 전체 예산규모, 주요 국세수입, 주요 세출분야, 국가채무 규모, 재정의 경제적 기능 등 6개 분야에 대한 4지선다형 객관식 퀴즈를 제시했다. 청소년의 경우 일부 문항 선택지의 난이도를 조절했다. 응답 결과 대학생·일반성인 전체의 평균 정답률은 46%로 나타났다. 문항별 비교를 할 경우 대학생·성인은 '국가재정의 예결산 과정 중 틀린 설명 찾기' 분야의 정답률(73%)이 가장 높았던 반면 '국가채무 규모' 및 '재정의 경제적 기능 중 틀린 설명 찾기' 분야의 정답률(각각 36%, 3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및 재정정

책의 목적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청소년의 재정퀴즈 평균 정답률은 32%로 일반인·대학생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대상 재정 교육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표 4-13〉 재정 분야별 퀴즈 정답률 (일반인·대학생)

구분	일반인 정답률	대학생 정답률	일반인·대학생 평균 정답률
1) 국가재정의 예결산 과정 중 틀린 설명* 찾기 (*정부 동의가 없이도 국회가 정부예산안 항목 증감 가능)	68.9%	77.6%	72.8%
2) 2024년 중앙정부 예산 규모 (500조원 이상 800조원 미만)	46.0%	44.3%	45.2%
3) "3대 국세수입"이 아닌 것 (관세)	59.0%	40.8%	51.0%
4)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정책분야 (보건·복지·노동)	42.2%	38.4%	40.6%
5)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 (800조원 이상 1200조원 미만)	37.3%	34.9%	36.2%
6) 국가재정의 경제적 기능이 아닌 것 (경제성장률의 촉진 기능)	23.0%	38.4%	29.8%
평균 정답률	46.1%	45.8%	45.9%

〈표 4-14〉 재정 분야별 퀴즈 정답률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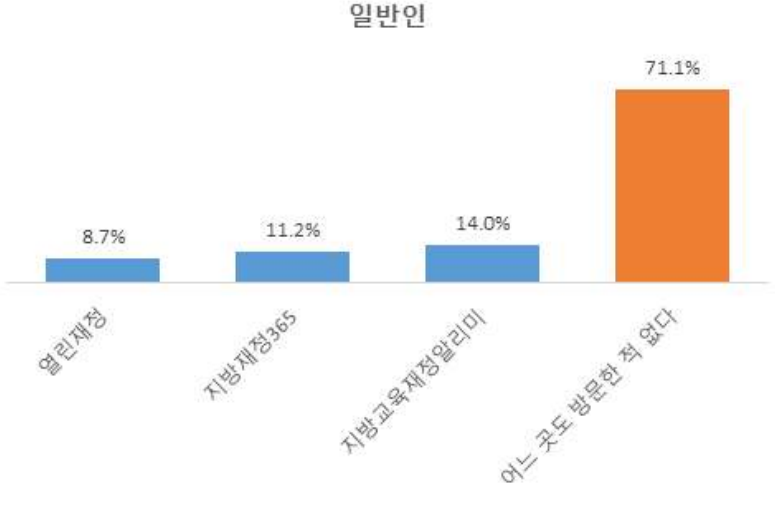
구분	정답률
1) 국가재정의 예결산 과정 중 틀린 설명* 찾기 (*기한 내 국회 예산처리 못하면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도 예산지출 가능)	37.2%
2) 2024년 중앙정부 예산 규모 (500조원 이상 800조원 미만)	33.7%
3) "3대 국세수입"이 아닌 것 (관세)	26.1%
4)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정책분야 (보건·복지·노동)	33.7%
5)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 (800조원 이상 1200조원 미만)	28.7%
6) 국가재정의 경제적 기능이 아닌 것 (경제성장률의 촉진 기능)	32.2%
평균 정답률	31.9%

3) 재정에 대한 관심도

재정에 대한 관심도를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의) '재정정보 공개 사이트 방문경험', '평소 재정정보를 접하는 빈도[29]', '재정분석 자료에 대한 관심도' 등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재정정보 사이트 방문 경험 문항의 경우 각 재정정보 공개 사이트의 방문 경험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였고 어느 곳도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선택지를 체크하도록 했다. 둘째, 재정정보를 접하는 빈도 문항은 "전혀 접하지 않는다", "연 1회 접한다", "분기별 1회 접한다", "매월 1회 접한다", "매주 1회 접한다" 등의 5지선다형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재정분석 자료[30]에 대한 관심도는 통상적인 5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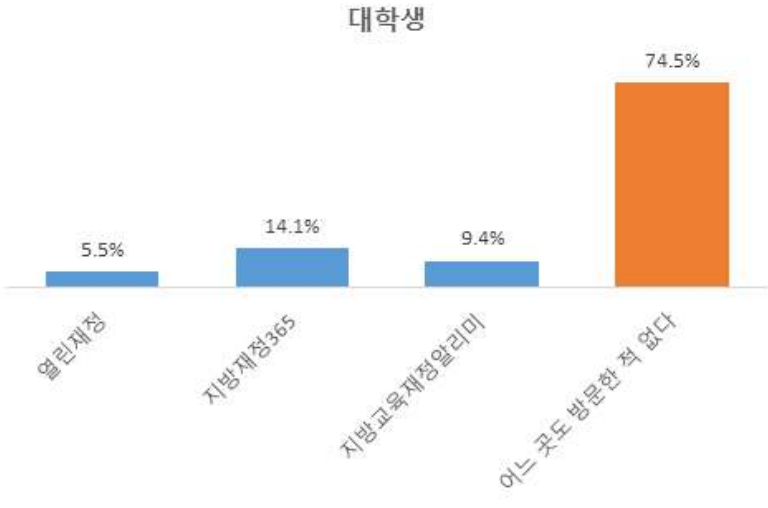
설문결과 일반인·대학생 모두 재정정보 공개 사이트 방문 경험이 전무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해도, 이를 찾아볼 의욕이 없거나, 원하는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정보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Cohen et al., 2017; Jordan et al., 2016)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정보 공개 사이트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림 4-2] 재정정보 공개사이트 방문 경험 (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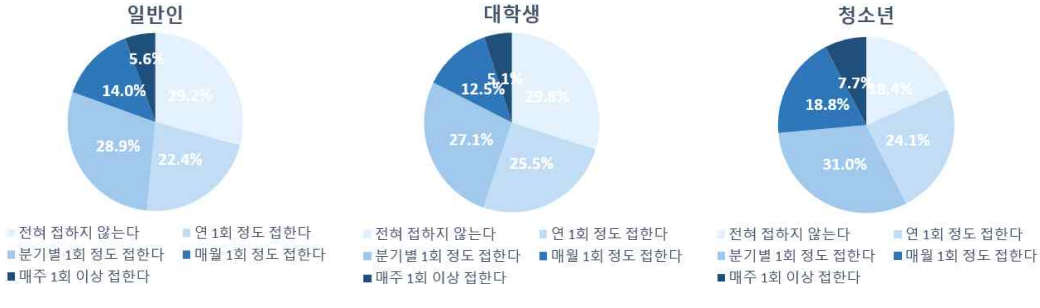
29) 예산, 기금, 결산, 재정수지, 국가부채 등 나라살림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문지에 안내했다.
30) 기존 재정정보·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심층분석한 공공(연구)기관의 보고서·칼럼·카드뉴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문지에 안내했다.

[그림 4-3] 재정정보 공개사이트 방문 경험 (대학생)



그 다음으로 나라살림 뉴스 등 재정정보를 접하는 횟수가 '분기별 1회 이하'라는 응답률이 청소년의 74%, 대학생 및 일반성인의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주 1회 이상 접한다"는 응답은 일반성인의 5.6%, 대학생의 5.1%, 청소년의 7.7%에 그쳤다. 이 역시 재정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호소한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한다(Jordan et al., 2016; Casey,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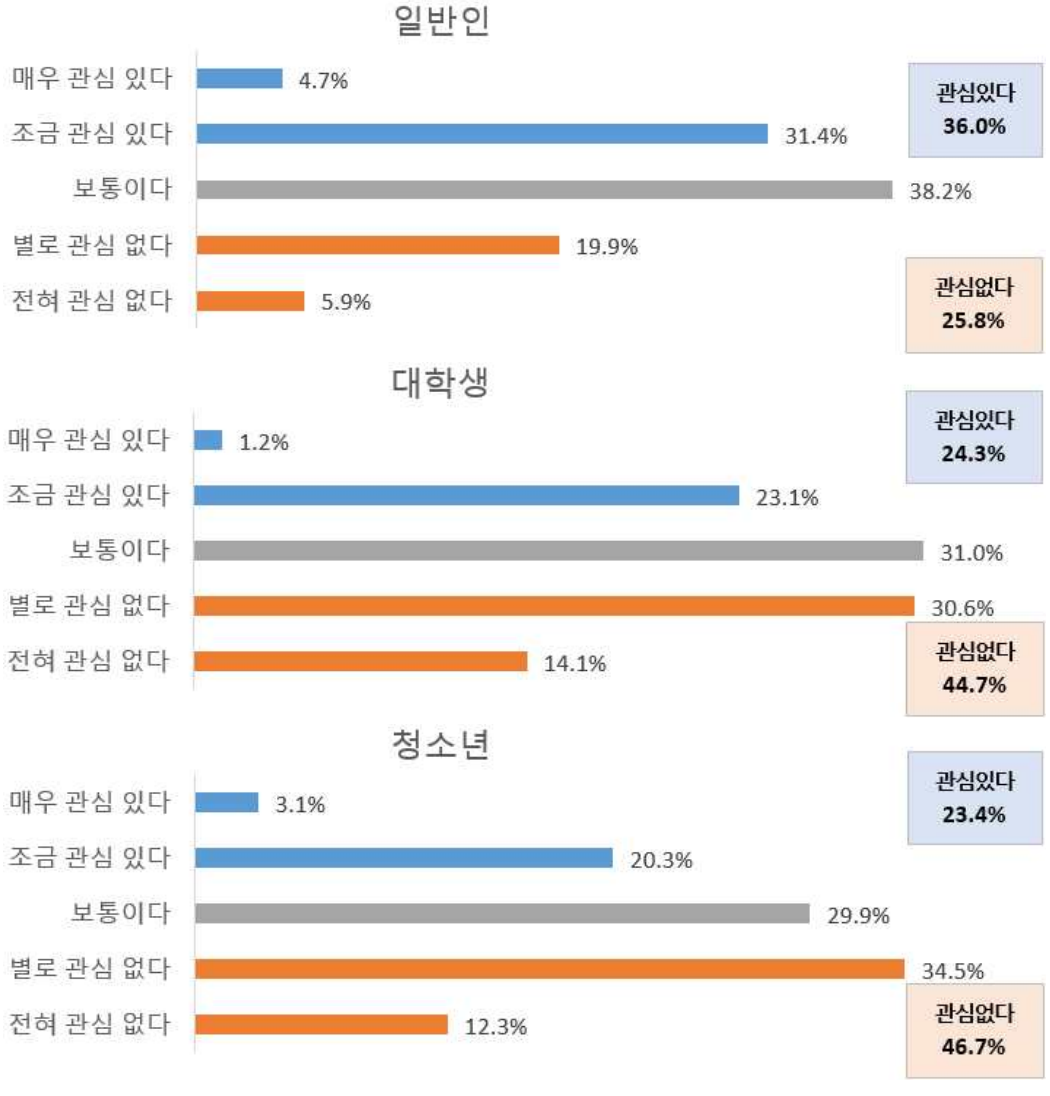
[그림 4-4] 재정정보를 접하는 횟수



공공(연구)기관의 재정 관련 분석자료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볼 경우 대학생과 청소년 중 '관심 없다'는 응답률(각각 44.7%, 46.7%)이 '관심 있다'는 응답률(각각 24.3%, 23.4%)을 크게 상회했다. 다만 일반 성인의 경우 '관심 있다'는 응답률(36.0%)이 '관

심 없다'는 응답률(25.8%)을 상회했다. 전체적인 관심 비율도 일반 성인 36.0% 〉 대학생 24.3% 〉 청소년 23.4% 순으로 일반성인의 재정분석 자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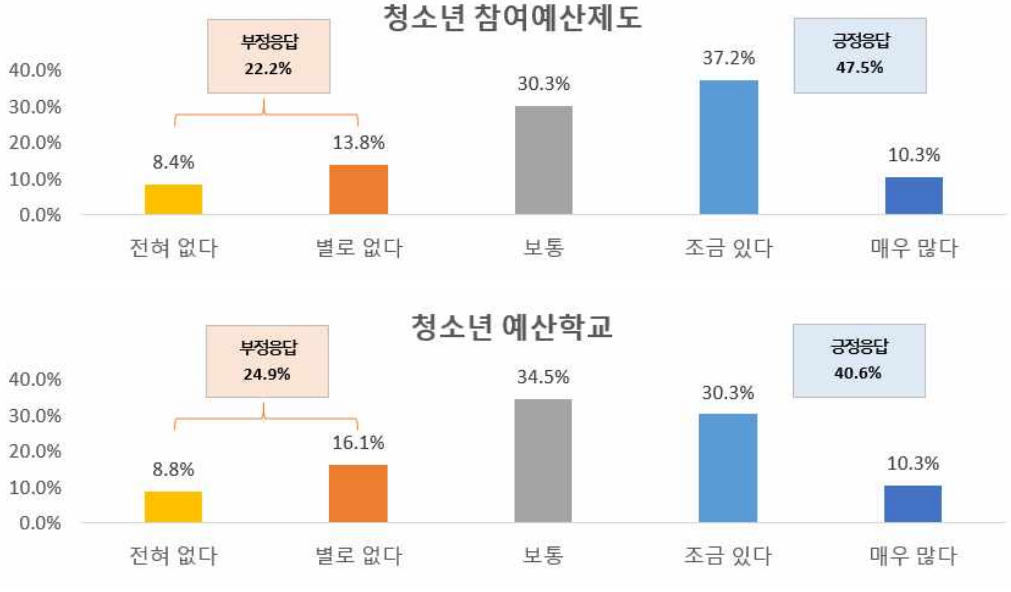
[그림 4-5] 재정분석 자료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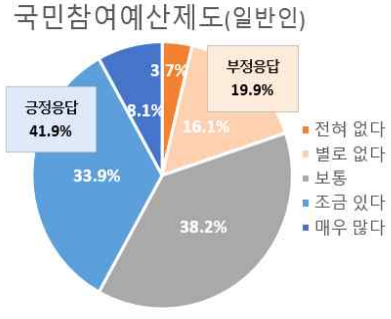
4) 재정제도에 대한 참여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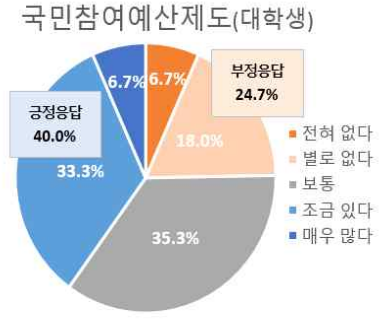
참여기회가 주어질 경우 참여예산제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학교 등 재정 참여 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참여 의향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1.6~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성인의 국민참여예산제도 참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42%, 주민참여예산제도는 44%, 예산낭비신고센터는 51%를 기록한 반면, 부정 응답 비율은 긍정 응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의 참가 의향 긍정 응답 비율은 국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낭비신고센터 모두 40%대로 나타나 일반성인에 비해 소폭 낮았지만 여전히 부정 응답 비율을 상회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청소년 참여예산제도와 청소년 예산학교에 대한 참여의향 긍정 응답 비율이 각각 48%와 41%를 기록한 반면 부정응답 비율은 22~25%대에 그쳤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가 기회가 주어질 경우 공공재정 이슈에 참여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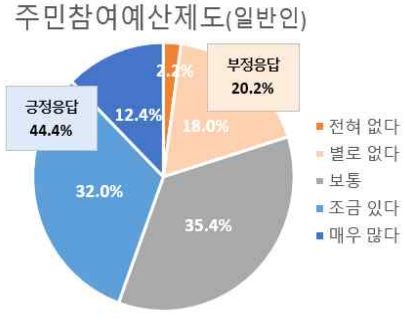
[그림 4-6] 주요 재정 참여제도에 대한 참가 의지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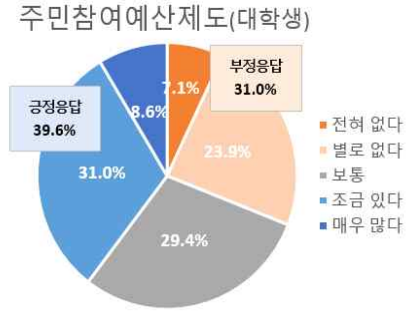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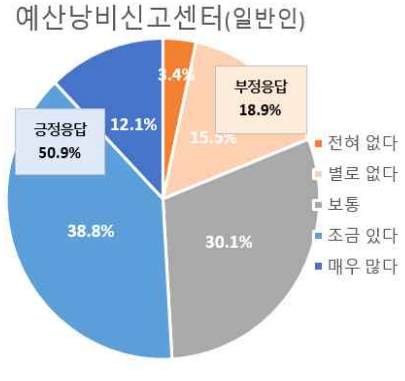
[그림 4-7] 주요 재정 참여제도에 대한 참가 의지 (일반인 및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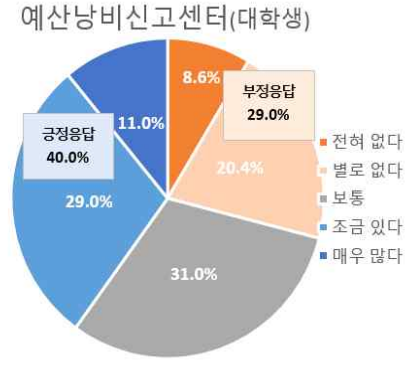












2 재정교육의 기대효과

이하에서는 설문 문항 간의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재정교육 경험이 재정의 지식수준, 재정정보를 접하는 빈도, 재정분석 자료에 대한 관심도, 재정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여기서 관심 대상이 되는 종속변수는 재정분야 퀴즈 중 정답 문항의 개수로 대표되는 '재정지식', 재정정보를 접하는 횟수에 대한 응답으로 대표되는 '재정정보를 접하는 빈도',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재정분석 자료에 대한 관심도', '참여예산제도'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주요 재정제도에 대한 '참여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변수로는 재정교육 경험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가 있으며 지역·성별·연령·학력·직업·소득 등 인구통계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이때 통상적인 인구통계적 통제변수를 투입하기 곤란한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인·대학생에 한정해서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재정지식 정답문항 개수의 경우 정답 개수별 빈도의 불균형이 나타나 정답 개수가 0~1개인 경우를 1, 정답 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를 4로 재조정하였다. 나머지 종속변수도 마찬가지로 응답 카테고리별 응답 빈도의 불균형이 나타나 기존의 5개 리커트 척도나 5지선다형으로 구성된 설문응답을 1~2점, 3점, 4~5점의 세 개 범주로 축소 조정하였다. 해석의 편리를 위해 순서형 로짓 회귀 계수값은 승산비(odds ratio) 형태로 나타냈다.

〈표 4-15, 16〉에 요약된 분석결과 대학 재정교육은 1% 유의수준에서 재정지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학 재정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재정퀴즈 정답을 더 많이 맞출 승산(odds)이 72% 높다. 반면 공공기관 재정교육은 재정지식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관심도의 경우 대학 및 공공기관 교육 모두 1~5% 유의수준에서 재정정보를 접하는 빈도와 재정분석 자료에 대한 관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값을 비교할 경우 공공기관 재정교육의 영향력이 대학교육보다 더 크다. 대학 재정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재정정보를 더 자주 접하거나 재정분석 자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승산이 각각 61, 68% 더 높은 반면, 공공기관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동일 승산이 각각 85%, 179% 더 크다.

〈표 4-15〉 재정교육이 재정지식 및 재정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OR 계수)

모형			재정지식 수준		재정 관심도			
					재정정보 접하는 빈도		재정분석 자료 관심도	
			(1)	(2)	(3)	(4)	(5)	(6)
설명변수	재정교육	대학 재정교육	**1.7178*** (0.3075)**	-	**1.6126** (0.3051)**	-	**1.6805*** (0.3166)**	-
		공공기관 재정교육	-	1.2119 (0.2511)	-	**1.8532*** (0.3895)**	-	**2.7870*** (0.6021)**
통제변수	수도권 여부		0.9570 (0.1445)	0.9507 (0.1435)	0.9893 (0.1630)	0.9596 (0.1583)	0.9361 (0.1485)	0.8896 (0.1421)
	성별(여성)		0.7685* (0.1197)	0.7688 (0.1200)	0.8674 (0.1456)	0.8742 (0.1468)	0.5984*** (0.0984)	0.6072*** (0.1004)
	연령	30대	1.1115 (0.3934)	1.0292 (0.3634)	1.0454 (0.3864)	1.0147 (0.3736)	2.2115** (0.8175)	2.4162** (0.8953)
		40대	1.2536 (0.4046)	1.1827 (0.3819)	0.6811 (0.2414)	0.7107 (0.2522)	2.4360*** (0.8187)	2.7019*** (0.9108)
		50대	1.0299 (0.2991)	0.9010 (0.2588)	0.6354 (0.2042)	0.5904* (0.1881)	1.9421** (0.5987)	1.8684** (0.5720)
		60대 이상	1.2072 (0.3052)	1.0781 (0.2687)	0.7296 (0.2019)	0.6926 (0.1899)	2.8669*** (0.7738)	2.8636*** (0.7682)
	학력	대학졸업	1.3711 (0.2830)	1.3771 (0.2855)	1.2368 (0.2744)	1.2022 (0.2669)	1.1523 (0.2509)	1.0513 (0.2312)
		대학원 졸업	2.2760** (0.9197)	2.2910 (0.9290)	1.1326 (0.4867)	1.0053 (0.4370)	1.4613 (0.6198)	1.1833 (0.5099)
	직업	임금근로자	0.8464 (0.1954)	0.8499 (0.1963)	1.2075 (0.3038)	1.1758 (0.2970)	0.7816 (0.1893)	0.7634 (0.1850)
		비임금근로자	0.6490 (0.2100)	0.6690 (0.2182)	1.0707 (0.3788)	1.0881 (0.3852)	0.7742 (0.2673)	0.7993 (0.2773)
	소득수준	월 100~300만원	0.8303 (0.1810)	0.8724 (0.1897)	1.3528 (0.3311)	1.3563 (0.3316)	0.9837 (0.2285)	0.9597 (0.2234)
		월 300~500만원	0.7417 (0.1819)	0.7946 (0.1942)	1.4120 (0.3793)	1.3964 (0.3754)	1.1485 (0.2969)	1.0935 (0.2841)
		월 500~700만원	0.7240 (0.2057)	0.8337 (0.2328)	1.5023 (0.4645)	1.5918 (0.4862)	1.3042 (.3917)	1.3701 (0.4088)
		월 700~900만원	0.4992** (0.1749)	0.5537 (0.1930)	2.9306*** (1.0295)	3.0431*** (1.0620)	0.8106 (0.2917)	0.7996 (0.2913)
		월 900만원 이상	1.5884 (0.7075)	1.5708 (0.7024)	1.3502 (0.6965)	1.2927 (0.6727)	2.1580 (1.0231)	2.1468 (1.0236)
관측치			577	577	577	577	577	577
Wolfe-Gould chi^2 (df)			58.15 (47)	60.70 (47)	13.52 (16)	15.76 (16)	14.19 (16)	20.92 (16)
LR chi^2 (df)			23.77* (17)	15.46 (16)	30.53** (16)	32.74*** (16)	56.38*** (16)	71.98*** (16)
Pseudo R^2			0.0135	0.0088	0.0263	0.0282	0.0445	0.0568

주: ***p<0.01. **p<0.05. *p<0.1.

〈표 4-16〉 재정교육이 재정제도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OR 계수)

모형			재정제도 참여의지					
			국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	
			(7)	(8)	(9)	(10)	(11)	(12)
설명변수	재정교육	대학 재정교육	**1.5458** (0.2906)	-	**1.6608*** (0.3185)**	-	**1.5791** (0.3018)**	
		공공기관 재정교육	-	**1.7468** (0.3829)**	-	**1.7444** (0.3849)**	-	1.3786 (0.3016)
통제변수	수도권 여부		1.0230 (0.1627)	1.0019 (0.1597)	0.9173 (0.1456)	0.8986 (0.1428)	1.0227 (0.1638)	0.9996 (0.1601)
	성별(여성)		0.7599* (0.1238)	0.7667 (0.1251)	0.8092 (0.1319)	0.8159 (0.1330)	0.8496 (0.1399)	0.8471 (0.1393)
	연령	30대	0.8770 (0.3266)	0.8981 (0.3356)	1.3913 (0.5129)	1.3749 (0.5071)	1.7082 (0.6319)	1.6786 (0.6210)
		40대	0.8063 (0.2739)	0.8260 (0.2809)	1.1282 (0.3791)	1.1268 (0.3785)	1.6447 (0.5527)	1.6039 (0.5390)
		50대	1.0885 (0.3355)	1.0127 (0.3088)	1.3997 (0.4311)	1.2795 (0.3890)	2.1010** (0.6609)	1.9419 (0.6045)
		60대 이상	1.5114 (0.4064)	1.4314 (0.3803)	1.9490** (0.5176)	1.8263** (0.4790)	2.4256*** (0.6680)	2.2554 (0.6139)
	학력	대학졸업	1.0880 (0.2380)	1.0401 (0.2295)	1.0455 (0.2236)	1.0100 (0.2169)	1.2225 (0.2659)	1.1985 (0.2611)
		대학원 졸업	1.3068 (0.5699)	1.1951 (0.5238)	0.9679 (0.4267)	0.8935 (0.3964)	2.3128* (1.1373)	2.2220 (1.0923)
	직업	임금근로자	1.2075 (0.2946)	1.1999 (0.2923)	0.9864 (0.2385)	0.9787 (0.2363)	0.8909 (0.2204)	0.8841 (0.2186)
		비임금근로자	0.9865 (0.3450)	0.9742 (0.3426)	0.9127 (0.3102)	0.9400 (0.3193)	0.7786 (0.2713)	0.7993 (0.2778)
	소득수준	월 100~300만원	0.9902 (0.2320)	0.9814 (0.2300)	1.1431 (0.2649)	1.1375 (0.2634)	1.2380 (0.2923)	1.2590 (0.2969)
		월 300~500만원	1.0429 (0.2659)	1.0461 (0.2665)	1.1180 (0.2879)	1.1277 (0.2899)	0.7857 (0.2034)	0.7951 (0.2061)
		월 500~700만원	1.3450 (0.3985)	1.4292 (0.4184)	1.2154 (0.3617)	1.3130 (0.3857)	0.7209 (0.2195)	0.7980 (0.2387)
		월 700~900만원	0.8725 (0.2931)	0.8733 (0.2939)	1.9273* (0.7032)	1.9980* (0.7248)	0.9961 (0.3429)	1.0515 (0.3612)
		월 900만원 이상	1.7915 (0.8932)	1.7423 (0.8682)	2.0288 (0.9949)	1.9650 (0.9639)	1.0564 (0.4958)	1.0246 (0.4797)
관측치			577	577	577	577	577	577
Wolfe-Gould chi^2 (df)			23.60 (16)	22.99 (16)	17.76 (16)	17.83 (16)	24.21 (16)	19.09 (16)
LR chi^2 (df)			21.91 (16)	23.09 (16)	27.40** (16)	26.80 (16)	33.41*** (16)	29.79** (16)
Pseudo R^2			0.0178	0.0188	0.0221	0.0216	0.0273	0.0244

주: ***p<0.01. **p<0.05. *p<0.1.

재정제도 참여의지의 경우 대학 재정교육 경험은 국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참여의지에 1~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재정교육 경험은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지에 대해 5%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예산낭비신고센터 참여의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예산제도에 한정해서 비교할 경우 대학 재정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국민 및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더 강한 참여의지를 가질 승산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각각 55%, 66% 더 높은 반면, 공공기관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동일 승산이 각각 75%, 74% 더 높았다.

한편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할 경우 종속변수의 모든 범주에 대해 회귀계수 값이 동일해야 한다는 '평행선 가정(parallel line assumption)'이 성립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의 성립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Wolfe-Gould 검정통계량을 사용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해당 가정이 성립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았다.

관심 설명변수인 재정교육 여부 더미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일부 모형((7), (8), (10))에서 로그우도비(LR)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는 해당 모형에서 대부분의 통제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데 따른 결과이다. 이에 (7), (8), (10) 모형에서 통제변수를 생략한 모형을 살펴본 결과 관심 설명변수의 회귀계수는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계수값도 원래 모형의 그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31]

종합하면, 국가재정에 대한 전반적 지식수준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참가의지에 대해서는 대학교 재정교육이 뚜렷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공기관 재정교육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정정보를 접하는 빈도 및 재정 분석자료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참가의지와 관련한 대학과 공공기관 재정교육의 긍정적 영향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공공기관 재정교육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는 Karatzimas(2020)가 시사한 바와 같이 대학 및 공공기관 재정교육이 재정에 대한 지식전달 수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참여할 준비가 된 민주적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1) 모형 (7), (8), (10)을 통제변수를 생략한 모형으로 바꿀 경우, 승산비(odds ratio) 형태로 나타낸 재정교육 경험의 계수값은 각각 1.5489, 1.8908, 1.8673이며 이들 모두 1~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3 요약 및 시사점

가. 재정이해력조사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주제인 재정이해력 및 재정교육의 현황과 의의에 대해서 다루었다. 최근 국제 기구과 해외 학계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정보의 투명성, 재정에 대한 국민참여 강화 등의 목적의식 아래 국민 전체의 재정이해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재정교육을 통한 납세의식 강화, 합리적인 경제 의사결정 능력 제고,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공공재정 이슈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교육을 협의의 조세교육을 넘어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김재근, 2023).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청소년·일반성인·대학생 대상 설문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재정이해력 현황을 조사하였고 재정교육이 재정에 대한 관심 및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주요 재정용어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와 재정분야에 대한 궁금증은 '21년도 재정정보이해력조사에 비해 증가했지만, 대학교 및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재정교육 경험률은 10~20%대의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주요 재정분야 퀴즈에 대한 성인 및 청소년의 정답률은 각각 46%, 32%에 그쳤다. 그럼에도 연령 및 학령 계층을 막론하고 재정 관련 공공(연구)기관의 재정교육 수강의사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55~63%)이 부정응답(11~17%)을 크게 상회하는 등 국가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잠재적 교육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등 재정정보 공개 사이트 방문경험이 전무하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하였고, 나라살림 뉴스 등 재정정보를 접하는 횟수가 '분기별 1회 이하'라는 응답률이 청소년의 74%, 대학생 및 일반성인의 81%로 나타났으며, 재정 관련 분석자료에 '관심 없다'는 대학생과 청소년의 응답률(각각 44.7%, 46.7%)이 '관심 있다'는 응답률(각각 24.3%, 23.4%)을 앞질렀다. 이는 재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해도 이를 찾아볼 의욕이 없거나,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인해 재정정보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Cohen

et al., 2017; Jordan et al., 2016). 또한 이는 공개된 재정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Casey, 2024).

재정 참여의지를 살펴보면 참여예산제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학교 등 재정 참여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부정 응답보다 1.6~2.1배 더 높다.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가 적절한 기회가 주어질 경우 공공재정 이슈에 참여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재정교육 경험이 재정의 지식수준, 재정정보를 접하는 빈도, 재정분석 자료에 대한 관심도, 재정제도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가재정에 대한 지식수준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참여의지는 대학교 재정교육만이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재정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예산제도 참가 의지와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는 대학 및 공공기관 재정교육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도 공공기관 재정교육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대학 및 공공기관 재정교육은 재정에 대한 단순 지식전달 기능 외에도 재정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할 준비가 된 민주적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나. 재정이해력조사의 시사점

본고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정책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은 재정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적 커리큘럼 개발의 필요성이다. 국민의 재정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공기관에서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 예산과정, 세금제도 등 국가재정의 주요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국가부채 현황과 재정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는 교육·홍보 콘텐츠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청소년 경제교육 속의 재정교육 콘텐츠를 내실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평생학습 과정에서의 재정교육 기회 확대이다. 성인 대상 평생학습 과정에 체계적인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일반 국민이 재정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Karatzimas, 2020). 이를 위

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교육기관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세 번째는 재정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이다. 국민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정보 공개사이트의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 국민들이 재정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시각화 툴과 AI 챗봇 및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정보 전달의 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다(Jordan et al., 2016). 이 역시 넓은 의미의 재정교육 강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재정 참여제도의 외연 확장과 재정교육 활성화를 연계하는 것이다. 참여예산제도나 예산낭비신고제도와 같은 재정 참여제도의 참가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이 예산과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재정 투명성과 재정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재정 참여에 대한 의욕이 높기 때문에 재정 참여제도의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체계적인 재정교육 프로그램과 접목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Jordan et al., 2016; Karatzimas, 2020). 재정에 대한 참여는 그 자체로 재정에 대한 체험학습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존 재정교육에 대한 구체적 실례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이해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자료 및 콘텐츠의 개발을 공공기관이 주도할 수 있다. 국내외 여러 사례가 시사하듯 공공기관이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에 적합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재정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IOTA, 2008; OECD, 2021; Sheiner, 2024). 예를 들어, 청소년 대상으로는 게임이나 재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금과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한 구체적인 예산분석 및 재정사업 제안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본 연구 이후에도 재정이해력과 재정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금번에 수행한 재정이해력조사 문항도 향후에 더 체계화·세분화 한다면 더욱 풍부한 논의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교육과 영향을 주고 받는 사회경제적, 제도적 변수들을 이용하여 보다 더 정교한 이론적·구조적 모형을 구축하고 실증하는 것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조세·재정교육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재정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외에도 재정이해력 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최근 논의를 소개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공동체적 접근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재정교육의 발전 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국민 재정이해력 실태조사를 통해 재정에 대한 이해도와 국민의식을 진단하고 재정교육의 잠재적 기대효과를 분석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통해 정책 시사점 및 재정교육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1 요약 및 시사점

가. 국내 재정교육의 현황

한국의 공교육 과정에서는 사회과목 일부 단원에서 국가재정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일부 선택과목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주제별 심화 내용을 학습하고 있다.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됐으나 국가재정 교육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공교육 상의 국가재정 관련 내용은 재정 관련 현실적 쟁점을 다루기보다 경제원론적 서술에 국한되어 있다. 대학 수준의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관련 과목은 경제·경영·회계·세무·무역·부동산 등 경상계열 학과에서 다수 개설됐으며 재정학 관련 과목은 회계·세무사 관련 자격증과 관련해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일선 학과의 취업수요에 맞춰 재정 관련 과목이 실무 교과과정으로 세분화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재정교육은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의 재정실무 교육이 주를 이룬다. 한편 대(對)국민 재정교육의 경우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 역량을 늘리기 위한 교육(=주민예산참여제도 교육) 외에 납세 관련 실무교육이나 조세교육이 있다. 최근에는 납세의지(tax morale) 고취를 위해 조세교육을 공교육에 편입시키자

는 주장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 해외 재정교육 현황 및 시사점

OECD(2021)가 지적했듯 발전된 조세·재정 교육을 청소년 대상 공교육 과정에 통합할 경우 잠재적으로 모든 미래 납세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일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은 납세 관련 시민의식 고취 차원에서 교과과정 상의 조세·재정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조세·재정교육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영국·일본의 경우 조세·재정 관련 교육 콘텐츠를 citizenship 혹은 공민(公民) 과목의 일부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 CEE(2013) 등 여러 국가도 세금과 정부지출의 공적 기능을 교과과정 상에서 강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독일 재정당국은 재정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교사와 학생에게 온라인상에서 배포하고 있다. 금융교육의 비중이 최근 강화되면서 가계의 경제생활에서 세금 및 사회보장제도가 차지하는 역할 및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한편 정규 교과과정 외에도 조세·재정 관련 글쓰기 경연대회, 온라인 교육, 공무원들의 재정특강 등 다양한 교육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해외의 재정교육은 청소년 외에도 대학생, 일반인, 교사,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이뤄진다. 여기서도 재정당국이 주도하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교육수단 및 매체를 활용하는 사례를 관찰할 수 있다. 청소년 조세·재정교육을 위한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 강의자료, 청소년을 위한 세무지식, FAQ, 재정게임 등을 업로드하는 노르웨이 세무당국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해외 재정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교육은 기존 수업 방식의 강의, 공익광고 등 일방향 소통보다는 양방향 소통을 촉진시키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두 번째, 재정당국이 실시하는 재정교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게임, 뮤직비디오, 유투브 등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를 과감하게 채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교육의 목표를 납세의식의 고취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재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권리와 책임을 상기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 재정이해력에 대한 해외 논의

해외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당국자와 국민의 재정이해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Casey, 2024). 재정이해력은 여러 세대에 걸친 장기적 공공복지 증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세·재정에 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재정이해력을 갖춘 국민은 단기적인 시야를 넘어 재정지출의 장기적인 비용 및 결과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적절한 타이밍에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형성할 수 있다. 반대로 재정이해력을 갖추지 않은 정책당국자와 국민은 재정과 관련된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재정적 리스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위험이 있다(Ibid).

재정이해력을 다룬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정이해력(fiscal literacy)은 협의의 조세이해력(tax literacy)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Karatzimas, 2024). 재정이해력은 세금 문제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공공재정의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요구한다. 재정이해력은 우선적으로 재정적 결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 국민경제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재정규율에 대한 이해', '재정의 지속가능에 대한 이해', '미래 주요 재정적 도전(fiscal challenge)에 대한 대응' 등 세 가지 핵심 능력(core competency)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Casey, 2024). 이 외에도 재정이해력은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역량, 공공재정이 민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공개된 재정정보(public finance information)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재정이해력 향상의 기대효과로는 크게 납세의식의 향상, 가계재무 건전성 개선, 재정의 투명성 강화, 재정에 대한 참여의식 강화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교육을 협의의 조세교육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시각을 갖추고 '재정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력'과 '참여의지'를 갖춘 능동적 태도를 육성하는 교육으로 접근하는 등 보다 더 종합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라. 재정에 대한 국민공동체적 시각의 필요성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국민교육은 '민주사회 일원으로서 정치·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재정교육은 공공재정에 대한 비판적 이해력과 참여역량을 가진 민주국가의 구성원을 양성하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처럼 재정교육에 대한 국민교육적 접근을 취할 때 기존의 의무중심적 접근을 넘어 조세·재정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및 탐구력', '문제해결 기능', '사회참여 기능', '가치분석적 접근'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김재근, 2023). 국민공동체 교육과 접목된 재정교육의 목표는 조세·재정에 대한 효과적 지식전달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 관련 문제를 합리적으로 토론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국가의 구성원을 양성하는 데 있다.

해외에서도 조세·재정 교육을 국민교육과 연계시키거나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조세·재정에 대한 교육활동을 주도하는 사례가 관찰된다(OECD, 2021). 전세계적 금융위기, 재정위기, 보건위기, 기후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해외의 조세·재정교육도 공공재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교육은 경제시민 교육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국민공동체적 접근 아래에서 재정교육은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적 권리와 의무를 정부의 조세·재정 활동과 연관지어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정교육은 납세자로서의 성실납세 의무뿐만 아니라 편리한 납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세금이 어떻게 걷히고 쓰이는지에 대한 알 권리를 상기시킬 수 있다. 나아가 재정교육은 재정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 재정 관련 공약을 숙고하고 선거에 참여할 책임 등을 가르칠 수 있다. 재정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재정정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공동체와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적 책임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다. 현재세대의 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multi generation) 지속가능한 번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가능한 재정의 윤리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협의의 조세교육과 예산제도의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교육에 매몰되기보다는 재정에 대한 국민공동체적 접근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전국민 재정이해력 조사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주제인 재정이해력 및 재정교육의 현황과 의의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청소년·일반성인·대학생 대상 설문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재정이해력 현황을 조사하였고 재정교육이 국가재정에 대한 관심 및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주요 재정용어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재정분야에 대한 궁금증은 '21년도에 비해 증가했지만, 대학 및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재정교육 경험률은 10~20%대의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주요 재정분야 퀴즈에 대한 성인 및 청소년의 정답률은 각각 46%, 32%에 그쳤다. 그럼에도 연령 및 학령 계층을 막론하고 재정 관련 공공(연구)기관의 재정교육 수강 의사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55~63%)이 부정 응답(11~17%)을 크게 상회하는 등 국가재정에 대한 잠재적 교육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등 재정정보 공개사이트 방문 경험이 전무하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했고, 나라살림 뉴스 등 재정정보를 접하는 횟수가 '분기별 1회 이하'라는 응답률이 청소년의 74%, 대학생 및 일반성인의 81%로 나타났으며, 재정 관련 분석자료에 '관심 없다'는 대학생과 청소년의 응답률(각각 45%, 47%)이 '관심 있다'는 응답률(각각 24%, 23%)을 앞질렀다. 이는 공개된 재정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민의 재정 참여의지를 살펴보면 참여예산제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학교에 침가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부정 응답보다 계층별로 1.6~2.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순서형 로짓 회귀모형 분석 결과 국가재정에 대한 지식수준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참여의지는 대학교 재정교육만이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예산제도 참가 의지에 대해서는 대학 및 공공기관 재정교육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공공기관 재정교육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 및 공공기관 재정교육이 재정에 대한 단순 지식전달 수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할 준비가 된 민주적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재정교육 발전방안과 기대효과

가. 국민공동체적 접근 강화

참여적 국민은 자유로운 주체로서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는 가운데 공익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혹은 정치체)의 일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참여적 국민을 육성하는 교육과 접목된 재정교육의 목표는 조세 및 재정에 대한 효과적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공공재정 관련 문제를 합리적으로 토론하여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국가의 구성원을 양성(김재근, 2023)'하는 데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정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재정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의 개선을 위해 재정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한편 정부재정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영역으로는 세입 외에도, 재정을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지출할지, 재정의 얼마만큼을 부채로 조달할지 등의 영역이 있다. 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꾀하는 것 역시 세수 기반 확충의 문제만큼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납세자 교육 중심의 재정교육에서는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재정교육은 세입, 세출, 정부부채, 재정성과 관리 등 공공재정 이슈 전반을 포괄하면서도 이것이 개인과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재정교육이 '자발적 납세자'를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재정 이슈에 참여하는 능동적 태도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나. 국가재정 교육 발전 방안

본고의 조사 및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재정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조세·재정 관련 공공(연구)기관의 주도 아래 전문적인 재정교육 콘텐츠 및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다. 재정교육을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보다 더 발전된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공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재정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민간부문의 여러 주체와 협업하여 재정교육 커리큘럼 및 교수법을 개발하고, 재정교육을 담당할 인력을 공동 양성하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보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사례가 시사하듯 재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에 대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재정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IOTA, 2008; OECD, 2021; Sheiner, 2024). 청소년을 위한 재정교육 교재를 배포한 독일 재무부와 다양한 청소년 조세·재정교육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한 노르웨이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국가재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국민의 재정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공기관 대민 서비스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교육 콘텐츠 및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금제도, 예산제도, 공공재정의 주요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국가부채 현황과 재정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멀티미디어 교육을 활용한 재정교육 콘텐츠의 확산이다. 앞서 보았듯 해외 재정교육에서는 전통적 강의식 교육과 일방적 홍보 활동 외에도 게임, 유투브, 애니메이션, 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 매체를 활용한다.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단일 매체에 의존한 교육보다는 그림, 영상, 활자, 음성언어 등 다양한 매체로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Kobus, Moses & Bloom, 1994). 이에 효과적인 재정교육 콘텐츠 확산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 전략이 요구된다. 여기서도 계층별 맞춤형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 대상으로 게임이나 재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예산제와 연계한 구체적인 예산 분석 및 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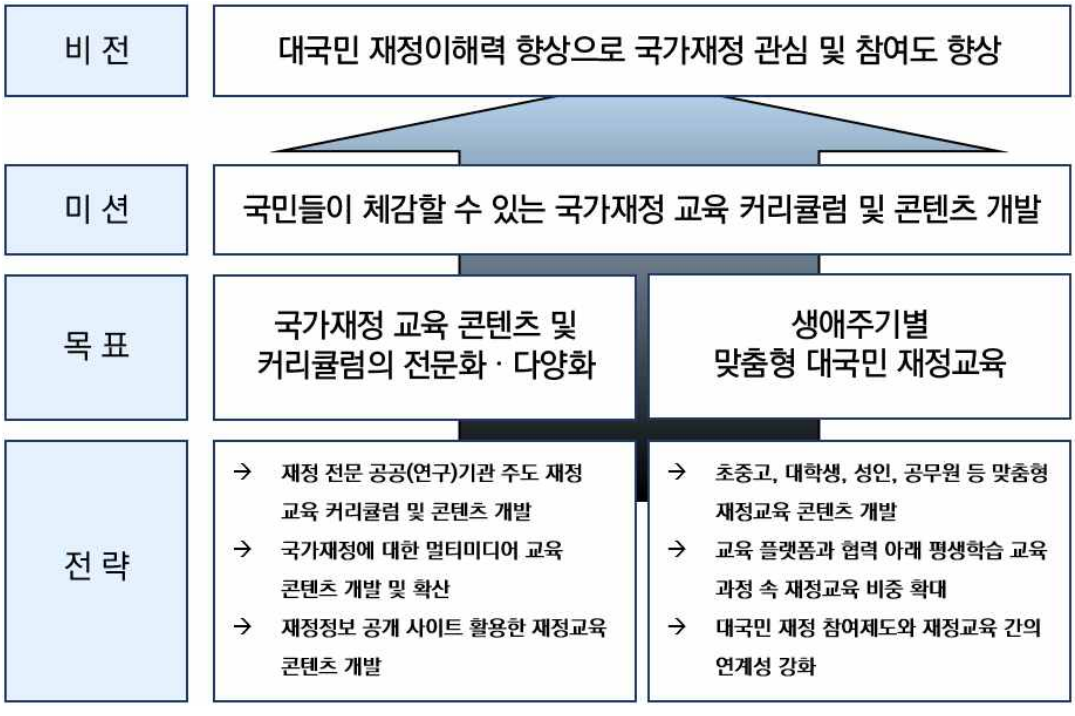
세 번째로는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아래 재정교육을 평생학습 과정과 연계하는 것이다. 국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납세자 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는 대국민 재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확산에 있어서 공교육 기관보다 의욕적일 수 있다. 또한 학습도시, 평생학습과, 시민대학, 문화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학습지원기관도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뿌리내렸다. 이들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성인 대상 평생교육 과정에 도입하고 일반 국민이 재정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Karatzimas, 2020).

네 번째로 기존 재정 참여제도를 내실화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를 재정교육 강화 방안과 연계시킬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중 대다수는 아직까지 주민 인지도가 낮다. 국민참여예산제도 또한 국민참여단 규모가 제한적이며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 이러한 재정 참여제도에 대한 참가 의욕이 국민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존 참여제도의 외연을 확장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연 확대 및 내실화 과정을 체계적인 재정교육 프로그램과 접목할 경우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Jordan et al., 2016; Karatzimas, 2020). 재정에 대한 참여는 그 자체로 재정에 대한 체험학습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재정교육을 통해 기존에 공개되고 있던 재정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여러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재정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재정정보에 대한 온라인 공개 범위가 확대됐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재정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는 시민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Cohen et al., 2017; Jordan et al., 2016). 국민의 재정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활용 능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정정보 공개 사이트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재정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시각화 툴과 AI 챗봇 및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극 활용할 경우 재정정보 전달의 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아울러 재정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도 이미 공개된 재정정보를 적극 활용하거나 이를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공개됐던 재정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술한 재정교육 발전 방안을 통해 경제원론적 이론 소개에 머물러 있거나 납세자 교육에 국한되었던 기존 재정교육 콘텐츠를 더욱 전문화·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정교육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일반성인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정교육의 발전이 지향하는 목표는 재정교육을 통해 국민의 재정이해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IOTA(2008)에서 일찍이 강조했듯 재정교육을 그 자체로 조세·재정 정책의 일부분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 국가재정 교육 발전 전략



참고문헌

강병구·조영철 (2019).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강형구 (1990).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부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4). 「2024 교육 운영계획」.

권오현·마정화 (2024). 납세자를 위한 조세 교육·홍보의 체계화 필요성,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권진욱·송주영·이광훈·이기라·조철민 (2016).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 과정 연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16,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김경근 (1993). 한국 고등학생의 경제 인지력 실태, 국민경제연구소.

김영우 (1998).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제2집,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영화 (2010). 「지역사회 교육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조직의 참여」, 집문당.

김재근 (2023). 조세교육에 대한 시민교육적 접근 : 개념 및 가능성의 탐색, 「경제교육연구」, 30(3), 29-51.

류영아 (201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입법·정책보고서」 Vol. 27, 국회입법조사처.

민세진·홍진주(2021), 고등학교 특성별 경제 교육의 차이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69(1), 157-192.

백운 (2023). 노령화 시대의 부채 누적: Stochastic OLG 모형으로 분석한 한국의 재정 여력 및 세대 간 재분배 효과, 「제4회 재정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 수상작, 한국재정정보원.

성경희·황미영 (2024).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내용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27(1), 59-85.

손정식·박형준·이윤호·한진수 (2005). 초·중·고교 사회교과서 경제단원 내용 검토, KDI 정보센터.

심성보 (2017).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집」, (67), 93-122.

안지호·김은경 (2021),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과 실행방안 연구」, 정책 21-20, 고양시정연구원.

오종현 (2024).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규영 (2005).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지역연구」, 9(3), 157-186.

이해주 (2010). 시민교육의 의미와 방법, 「시민교육 현장 지침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대홍 (2005).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성일·서정섭·최승우·이희재·김미나 (2020).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전제철·김진영·박영석·이정우 (2008).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현안보고 CRC 2008-29」, 과학기술부 정책용역.

정수정 (2018). 독일의 경제 교육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s://edpolicy.kedi.re.kr/, 인터넷 자료 (11. 18. 접속).

정재원 (2013). 영국의 시민교육 제도화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38), 5-37.

정창훈·강인재·배득종·이상용·한준현·강유정 (2022).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리방안 개선 연구,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4). 「2024 교육 운영계획」.

최종민 (2017). 2015 개정 경제과목 교육과정의 변화, 「경제교육연구」, 24(2), 75-99.

Allen, R. D. (2013). US government spending, the national debt, and the role of accounting educators,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31(3), 215-231.

Bowles, E., and Simpson, A. (2010). *National Commission on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 The moment of truth*.

Buchanan, J. M. (1967). The Fiscal Illusion. In *Public Finance in Democratic Process: Fiscal Institutions and Individual Choic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Burnside, R. (2023). What to look out for in next week's Scottish budget. https://spice-spotlight.scot/2023/12/13/what-to-look-out-for-in-next-w

eeks-scottish-budget/, 인터넷 자료 (11. 11. 접속)

Bursian, D., Weichenrieder, A., and Zimmer, J. (2015). Trust in government and fiscal adjustment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22(4), 663-682.

Casey, E. (2024). Fiscal literacy among elected officials, 46th Annual Meeting of Senior Budget Officials, OECD.

Cechovsky, N. (2018). Students' fiscal literacy: An explorative study of their understanding of the tax system, *Empirische Pädagogik*, 32(3/4), 460-479.

CEE (2010).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 2nd Edtion*.

Clifford, M., and Jairus, A. (2013). The effect of Taxpayer education on voluntary tax compliance, among SMEs in Mwanza City - Tanz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ing, Financial Services & Management Research*, 2(8), 12-23.

Cohen, S., Mamakou, X. J., and Karatzimas, S. (2017). IT-enhanced popular reports: Analyzing citizen preference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4(2), 283-295.

CRA (2019). Ethnography of vulnerable newcomers' experiences with taxes and benefits.

Dell'Anno, R., and Mourao, P. (2012). Fiscal Illusion around the World: An Analysi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Public Finance Review*, 40(2), 270-299.

Downs, A. (1961). Why the Government Budget Is Too Small in a Democracy, *World Politics*, 12(4), 541-653.

Dubauskas, G. (2016). The management of public finance literacy for sustainable economical environment, *Journal of Security and Sustainability Issues*, 5(3), 403-409.

End, N., and Hong, G. H. (2022). Trust What You Hear: Policy Communication, Expectations, and Fiscal Credibility, IMF Working Paper, No. 2022/036.

Galbraith, J. K. (1958). *The Affluent Society*, London: Hamish and Hamilton.

ICAEW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 Wales) and

PwC(PricewaterhouseCoopers) (2014). Trust in Public Finances, A survey of citizens in 10 European countries, ICAEW/PwC.

IMF (1998). 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 Declaration on Principles, IMF Survey 27, 122-124.

IOTA (2008). Fiscal Education For The Young, IOTA Report for Tax Administrations.

Jordan, M., Yusuf, J.-E., Mayer, M., and Mahar, K. (2016). What citizens want to know about their government's finances: Closing the information gap, *The Social Science Journal*, 53(3), 301-308.

Karatzimas, S. (2020). The Beneficial Role of Government Accounting Literacy in Developing Participatory Citizens, *Accounting Education*, 29(3), 229-246.

Karatzimas, S. (2023). Government accounting literacy as an attribute of smart citizenship, *PUBLIC MONEY & MANAGEMENT*, 43(4), 293-301.

Karatzimas, S. (2024). Citizens' perceptions on public finance literacy: Familiarity, importance, actual use and proposed learning objectives, *Teaching Public Administration*, 42(1), 42-59.

Koumpias, A. M., Leonardo, G., and Martinez-Vazquez, J. (2021).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and Tax Morale, *FinanzArchiv*, 77(2), 117-140.

Leeper, E. M. (2009). Anchoring fiscal expectations, *Reserve Bank of New Zealand Bulletin*, 72, 17-42.

Liao, F. T. (1994). *Interpreting Probability Models: Logit, Probit and Other Generalized Linear Models*, London: Sage Publications.

Mascagni, G., Nell, C., and Monkam, N. (2017). One Size Does Not Fit All: A Field Experiment on the Drivers of Tax Compliance and Delivery Methods in Rwanda, ICTD Working Paper, No. 58, International Centre for Tax and Development, Brighton.

Mazzucato, M. (2021). *Mission economy: a moonshot guide to changing capitalism*, New York: Harper Business.

Mohiuddin, F., and de Renzio, P. (2020). Of citizens and taxes: A global scan of civil society work on taxation,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Molnár, P., Hegedűs, S., Baranyai, G., and Kovácsné-Sipos, Á. (2019).

REVIEW OF LITERACY IN PUBLIC FINANCES IN HUNGARY, *Economics Management Innovation*, 11(3), 63-70.

Mourao, P. R. (2008). Towards a Puviani's Fiscal Illusion Index, *Hacienda Pública Española / Review of Public Economics*, 187(4), 49-86.

OECD (2014). OECD PRINCIPLES OF BUDGETARY GOVERNANCE, OECD Senior Budget Officials.

OECD (2021). *Building Tax Culture, Compliance and Citizenship: A Global Source Book on Taxpayer Education*, Second Edition, OECD Publishing, Paris.

OECD/INFE (2015).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ial Education: OECD/INFE Policy Handbook*, OECD Publishing, Paris.

OECD/INFE (2022), *OECD/INFE Toolkit for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Inclusion 2022*, OECD Publishing, Paris.

Puviani, A. (1967) *Teoria della Illusione Finanziaria*, Remo Sandon, Milan, 1903, Partially translated and edited by J.M Buchanan in 'The Fiscal Illusion.' Chapter in *Public Finance in Democratic Process: Fiscal Institutions and Individual Choic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Petrie, M. (2017). What is public participation in fiscal policy and why is it important?

https://fiscaltransparency.net/gift-principles/, 인터넷 자료 (11. 11. 접속).

Richardson, G. (2006). Determinants of tax evas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15(2), 150-169.

Sharp, S., Sweet, S., and Menocal, R. R. (2019). Civil society engagement in tax reform,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Sheiner, L. (2024). Fiscal Challanges in the US and the Fiscal Ship Game, edaily strategy forum.

Vovchenko, N. G., Galazova, S. S., Danchenko, E. A., Ivanova, O. B., and Kostoglodova, E. D. (2018). Improvement of Financial Literacy as a Crucial Factor of Economic Development, *European Research Studies Journal*, 21(1), 16-24.

Wagner, R. (1976). Revenue structure, fiscal illusion, and budgetary choice,

Public Choice, 25, (1), 45-61.
Wolfe, R., and Gould, W. (1998). An Approximate Likelihood-Ratio Test for Ordinal Response Models, *Stata Technical Bulletin*, 7(42).

웹사이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포털 (https://www.kipf.re.kr/pedu)
국가회계교육포털 (https://www.kipf.re.kr)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법교실 (https://taxstudy.nts.go.kr/taxedu)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https://www.mybudget.go.kr)
서울시 참여예산 (https://yesan.seoul.go.kr/intro)
어린이 국세청 (https://kids.nts.go.kr/)
일본문부과학성 (https://www.mext.go.jp/a_menu/shotou/new-cs)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s://eduinfo.gor.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academyinfo.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심교실 (https://sesimclass.kipf.re.kr/)
허치슨센터 "Fiscal Ship" 게임 (https://fiscalship.org/)
e재정배움 (https://finedu.moef.go.kr)
Jugend-und-Bildung (https://jugend-und-bildung.de/startseite)
World Bank (https://datacatalog.worldbank.org/search/dataset/0041421)
Young Enterprise (https://www.young-enterprise.org.uk)

부록1. 일반인 및 대학생 재정이해력조사 설문지

全국민 재정이해력 조사 (대학생 · 일반인)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은 우리나라 예산편성·집행·결산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그리고 나라살림 현황을 공개하는 플랫폼 *열린재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재정은 경제성장은 물론 국방, 치안, 교육, 교통, 복지 등 국민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려가는지에 대한 정보, 즉 재정정보를 *열린재정*과 *e나라도움* 등의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재정현황 및 제도에 대한 이해력과 국가재정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교육 콘텐츠를 발굴하며 재정정보 포털 사이트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본 설문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응답 결과를 재정정보 활용도 향상과 재정교육 콘텐츠 발굴 업무에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 결과는 통계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문의처 : 모노리서치
(02-000-0000)

Ⅰ. 재정교육 경험 및 수요

문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재정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재정교육 유형	경험 있음	경험 없음
1) 대학교(방송통신대학 및 KOCW 포함)가 제공하는 예산의 이해, 재정학, 공공경제학, 공공선택론, 재무행정론, 조세론 등 재정 관련 강의 수강	①	②
2)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경제배움e, KDI 경제정보센터 이러닝 등)에서 제공하는 예산의 이해, 재정학, 공공경제학, 공공선택론, 재무행정론, 조세론 등 재정교육 수강	①	②
3)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오프라인에서의 재정교육(재정 아카데미, 참여예산 학교, 국가재정의 이해, 예산의 이해 특강 등) 수강	①	②

문2) 다음은 국가재정 제도에 대한 용어입니다. 각 용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전혀 모른다, 5=매우 잘 안다']*

항목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1) 국가재정 예·결산 제도	①	②	③	④	⑤
2) 국가재정운용계획	①	②	③	④	⑤
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①	②	③	④	⑤
4) 국민참여예산 제도	①	②	③	④	⑤

문3) 귀하는 다음 국가재정 분야에 대해 평소 어느 정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1=전혀 궁금하지 않다, 5=매우 궁금하다']*

국가재정 영역	전혀 궁금하지 않다	별로 궁금하지 않다	보통	조금 궁금하다	매우 궁금하다
1) 국가재정의 예결산 과정 및 주요 국가재정 제도	①	②	③	④	⑤
2) 국가예산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3) 수입규모 및 분야(국가재정의 주요 재원 등)	①	②	③	④	⑤
4) 지출규모 및 분야(사회복지비, 교육비, 국방비, SOC 등)	①	②	③	④	⑤
5) 재정건전성(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①	②	③	④	⑤
6) 국가재정의 경제적 역할	①	②	③	④	⑤

문4) 귀하께서는 문3)과 같은 관심분야가 반영된 재정교육 및 특강 기회가 국가재정 관련 공공기관에서 제공된다면 들을 용의가 있습니까?

① 전혀 듣고 싶지 않다 ② 별로 듣고 싶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듣고 싶다 ⑤ 매우 듣고 싶다

Ⅱ. 재정지식

문1)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심의·집행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중 **틀린** 설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비비 예산 편성시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 정부는 경제위기 등 예산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문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중앙정부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200조원 미만
② 200조원 이상 ~ 500조원 미만
③ 500조원 이상 ~ 800조원 미만
④ 800조원 이상

문3) 우리나라의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3대 세목을 "3대 국세 수입"이라 부릅니다. 다음 중 "3대 국세 수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법인세
② 부가가치세
③ 소득세
④ 관세

문4) 다음 중 정부의 12대 재원배분 분야* 중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건・복지・노동
② 교육
③ 사회간접자본(SOC)
④ 국방

* 정부의 12대 재원배분 분야에는 ① 보건・복지・노동, ② 교육, ③ 문화・체육・관광, ④ 환경, ⑤ R&D, 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⑦ 사회간접자본(SOC), ⑧농림・수산・식품, ⑨ 국방, ⑩ 외교・통일, ⑪ 공공질서・안전, ⑫ 일반・지방행정 등이 있음

문5) 2022년 결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400조원 미만
② 400조원 이상 ~ 800조원 미만
③ 800조원 이상 ~ 1200조원 미만
④ 1200조원 이상

문6) 다음 중 국가재정의 경제적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경제의 안정화 기능
② 경제성장률의 촉진 기능
③ 소득의 재분배 기능
④ 자원의 배분 기능

Ⅲ. 재정에 대한 관심도

문1) 정부는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한 번이라도 홈페이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열린재정 ② 지방재정365 ③ 지방교육재정알리미 ④ 어느 곳도 방문한 적 없다

* '재정정보'는 예산, 기금, 결산, 재정수지, 국가부채 등 정부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문2) 귀하가 재정정보*를 접하는 횟수(인터넷, 신문, 방송 등 포함)는 얼마나 됩니까?

① 전혀 접하지 않는다
② 연 1회 정도 접한다
③ 분기별 1회 정도 접한다
④ 매월 1회 정도 접한다
⑤ 매주 1회 이상 접한다

* '재정정보'는 예산, 기금, 결산, 재정수지, 국가부채 등 정부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문3) 귀하는 재정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한국재정정보원, 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 공공(연구)기관의 재정분석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별로 관심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관심 있다 ⑤ 매우 관심 있다

* '재정분석 자료'는 기존의 재정정보 및 데이터를 시각화된 형태로 가공한 자료 내지는 재정정보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보고서, 칼럼 등을 의미합니다.

문4) 다음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재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아래의 참여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1=전혀 없다, 5=매우 많다']*

항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조금 있다	매우 많다
1)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참여예산제도*	1	2	3	4	5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1	2	3	4	5
3) 국민신문고의 예산낭비신고센터*	1	2	3	4	5

*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이 직접 정부의 예산사업을 제안하거나 국가재정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역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 예산낭비신고센터: 시민들이 직접 예산 낭비 의심 사례를 신고하거나 예산절감 관련 제안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창구

Ⅳ. 재정에 대한 시각

문1) 다음은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문장에 대한 귀하의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1=매우 반대, 5=매우 동의']

항목	매우 반대	대체로 반대	보통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1) 경기가 어려울 경우 경제회복 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1	2	3	4	5
2) 경기가 어렵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2	3	4	5

문2) 다음은 복지 및 중세에 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문장에 대한 귀하의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1=매우 반대, 5=매우 동의']

항목	매우 반대	대체로 반대	보통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1)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	1	2	3	4	5
2) 복지혜택을 충분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1	2	3	4	5

문3) 다음은 공공서비스 및 세금부담 수준에 대한 설문입니다. 귀하가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공공서비스의 혜택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은 수준이다 ②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③ 적정한 수준이다
④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⑤ 매우 높은 수준이다

V. 응답자 특성

문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문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19-29세 ② 만30-39세 ③ 만40-49세 ④ 만50-59세 ⑤ 만60세 이상

문3)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문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 ④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⑤ 대학원 졸업

문5) 귀하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⑤ 7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⑥ 900만원 이상

문6) 귀하의 직업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임금근로자
② 사업주·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기타 종사자(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⑤ 전업주부
⑥ 학생
⑦ 미취업자(취업준비생 등)
⑧ 은퇴
⑨ 기타(직접 기입)

문7) 귀하의 정치적 이념성향을 종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① 매우 진보 ② 다소 진보 ③ 중도 ④ 다소 보수 ⑤ 매우 보수

부록2. 청소년 재정이해력조사 설문지

全국민 재정이해력 조사 (청소년)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은 우리나라 예산편성·집행·결산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그리고 나라살림 현황을 공개하는 플랫폼 *열린재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재정은 경제성장은 물론 국방, 치안, 교육, 교통, 복지 등 국민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려가는지에 대한 정보, 즉 재정정보를 *열린재정*과 *e나라도움* 등의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재정현황 및 제도에 대한 이해력과 국가재정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교육 콘텐츠를 발굴하며 재정정보 포털 사이트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본 설문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응답 결과를 재정정보 활용도 향상과 재정교육 콘텐츠 발굴 업무에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 결과는 통계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문의처 : 모노리서치
(02-000-0000)

Ⅰ. 재정교육 경험 및 수요

문1)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제교육 혹은 재정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재정교육 유형	경험 있음	경험 없음
1)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경제(일반선택)' 또는 '실용경제(교양)' 과목 수강	①	②
2)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경제배움e, KDI 경제정보센터 이러닝 등)에서 제공하는 예산의 이해, 국가재정의 이해 등 재정교육 수강	①	②
3) 오프라인에서의 재정교육(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청소년 재정특강 등) 수강	①	②

문2) 다음은 국가재정과 관련된 교과과정 개념입니다. 각 개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전혀 모른다, 5=매우 잘 안다']*

항목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1) 시장실패의 원인 및 유형	①	②	③	④	⑤
2) 정부의 경제적 역할	①	②	③	④	⑤
3) 정부실패의 원인 및 유형	①	②	③	④	⑤
4) 재정정책의 수단	①	②	③	④	⑤

문3) 귀하는 다음 국가재정 분야에 대해 평소 어느 정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1=전혀 궁금하지 않다, 5=매우 궁금하다']*

국가재정 영역	전혀 궁금하지 않다	별로 궁금하지 않다	보통	조금 궁금하다	매우 궁금하다
1) 국가재정의 예결산 과정 및 주요 국가재정 제도	①	②	③	④	⑤
2) 국가예산의 규모	①	②	③	④	⑤
3) 수입규모 및 분야(국가재정의 주요 재원 등)	①	②	③	④	⑤
4) 지출규모 및 분야(사회복지비, 교육비, 국방비 등)	①	②	③	④	⑤
5) 재정건전성(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①	②	③	④	⑤
6) 국가재정의 경제적 역할	①	②	③	④	⑤

문4) 귀하께서는 문3)과 같은 관심분야가 반영된 재정교육 및 특강 기회가 국가재정 관련 공공기관에서 제공된다면 들을 용의가 있습니까?

① 전혀 듣고 싶지 않다 ② 별로 듣고 싶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듣고 싶다 ⑤ 매우 듣고 싶다

Ⅱ. 재정지식

문1)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심의·집행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중 **틀린 설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② 정부는 올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다음해의 수입·지출 계획인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정부는 경제위기 등 예산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④ 국회가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도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 그대로 예산지출을 집행할 수 있다

* 예산안이란 일정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국가 전체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획한 것을 의미함

문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중앙정부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200조원 미만
② 200조원 이상 ~ 500조원 미만
③ 500조원 이상 ~ 800조원 미만
④ 800조원 이상

문3) 우리나라의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3대 세목을 "3대 국세 수입"이라 부릅니다. 다음 중 "3대 국세 수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법인세
② 부가가치세
③ 소득세
④ 관세

* 국세란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

문4) 다음 중 정부의 12대 재원배분 분야* 중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건・복지・노동
② 교육
③ 사회간접자본(SOC)
④ 국방

* 정부의 12대 재원배분 분야에는 ① 보건・복지・노동, ② 교육, ③ 문화・체육・관광, ④ 환경, ⑤ R&D, ⑥ 산업・중소기업・에너지, ⑦ 사회간접자본(SOC), ⑧농림・수산・식품, ⑨ 국방, ⑩ 외교・통일, ⑪ 공공질서・안전, ⑫ 일반・지방행정 등이 있음

문5) 2022년 결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400조원 미만
② 400조원 이상 ~ 800조원 미만
③ 800조원 이상 ~ 1200조원 미만
④ 1200조원 이상

문6) 다음 중 국가재정의 경제적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경제의 안정화 기능
② 경제성장률의 촉진 기능
③ 소득의 재분배 기능
④ 자원의 배분 기능

Ⅲ. 재정에 대한 관심도

문1) 귀하가 재정정보*를 접하는 횟수(인터넷, 신문, 방송 등 포함)는 얼마나 됩니까?

① 전혀 접하지 않는다
② 연 1회 정도 접한다
③ 분기별 1회 정도 접한다
④ 매월 1회 정도 접한다
⑤ 매주 1회 이상 접한다

* '재정정보'는 예산, 기금, 결산, 재정수지, 국가부채 등 정부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문2) 귀하는 재정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언론 및 신문기사의 재정분석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별로 관심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관심 있다 ⑤ 매우 관심 있다

* '재정분석 자료'는 기존의 재정정보 및 데이터를 시각화된 형태로 가공한 자료 내지는 재정정보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기사, 칼럼 등을 의미합니다.

문3) 다음과 같이 재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아래의 참여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1=전혀 없다, 5=매우 많다']*

항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조금 있다	매우 많다
1)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1	2	3	4	5
2) 청소년 예산학교*	1	2	3	4	5

*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지역의 예산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예산사업을 제안, 심사,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
* 청소년 예산학교: 지역예산 및 지역현황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예산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

IV. 재정에 대한 시각

문1) 다음은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문장에 대한 귀하의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1=매우 반대, 5=매우 동의']

항목	매우 반대	대체로 반대	보통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1) 경기가 어려울 경우 경제회복 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1	2	3	4	5
2) 경기가 어렵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2	3	4	5

문2) 다음은 복지 및 중세에 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문장에 대한 귀하의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을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1=매우 반대, 5=매우 동의']

항목	매우 반대	대체로 반대	보통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1)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	1	2	3	4	5
2) 복지혜택을 충분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1	2	3	4	5

대국민 재정교육 발전 방안

발 간 월 2025년 7월
발 행 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참 여 진 박원익 부연구위원
편 집 교육관리부
발 행 처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Tel. 02-6908-8200)
인 쇄 처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문의 : 고객지원실 교육관리부 02-6908-8244
paxwonik87@fis.kr

FIS 한국재정정보원